세계지역전략연구 22-07

아세안 신흥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오일석 · 김경숙 · 윤정현 · 김유철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세계지역전략연구 22-07

아세안 신흥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오일석·김경숙·윤정현·김유철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세계지역전략연구 22-07

아세안 신흥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인 쇄 2022년 12월 24일
발 행 2022년 12월 30일
발행인 김흥종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세일포커스(주)(02-2275-6894)

ⓒ20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7,000원
ISBN 978-89-322-9050-8 94320
978-89-322-9000-3(세트)

국문요약

인도·태평양 및 사이버, 신기술, 우주 등 새로운 전략적 공간에서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생존과 번영 및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4강 중심의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다변화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중 경쟁에 따른 진영화의 틈바구니에서 선진 ICT 기술과 G8에 상응하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통해 외교안보 전략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새로운 공간에서의 지정학적 가치를 발휘하는 유연성을 발전시켜야 한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외교안보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전략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국가를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상'으로만 설정하지 않고 신흥안보 협력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이상기후, 신종 감염병, 식량, 사이버 위협, 신기술 발전에 따른 역기능, 자원/에너지 등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주민(people)의 삶과 사회의 안전한 생존을 담보하여 지역의 평화를 보장하는 신흥안보 협력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전환된 방향에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신흥안보는 지구화와 산업화로 발생한 새로운 위험 요소가 상호작용을 통해 양적·질적 변화를 거치고 임계점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전환됨에 따라 안보적 관점에서 이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신흥안보 위험이 갖는 속성과 파급 속도, 대응 주체 등을 고려하여 환경안보, 보건안보, 사이버안보, 자원안보(에너지/식량)에 대한 관리 모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신흥안보 위험들은 공통적으로 어느 한 부문의 창발 단계에서 시작하지만, 양적·질적 축적 과정을 지나 임계점의 단계를 넘을 때 비연계 부문으로의 확장이

증가하고,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지정학적 이슈화와 갈등을 낳는 동학을 보인다. 관건은 거시적 차원의 지정학적 안보 위협으로의 증폭을 막기 위한 국면별·행위주체별 대응 모델을 수립하는 일이다. 즉, 창발-임계-확산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협력 초점 설정이 요구된다.

한국과 아세안의 신흥안보 협력 강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흥안보 위험의 유형에 대응하는 적합 거버넌스 구조와 안보화의 과정 및 아세안 각국의 진영화에 대한 입장 등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신흥안보 협력의 내용은 창발-임계-확산의 안보화 과정에 따라 내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환경안보, 보건, 사이버, 자원 등은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과 행정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그렇지만 신흥안보적 접근에 기초한 협력을 강화하려면 외교안보적 군사적 수단의 협력 또한 담보되어야 한다. 인도적 지원과 행정적 협력이 안보화 과정의 첫 단계인 창발 혹은 그 이전 단계에서 가능한 협력이라고 한다면, 외교안보적 군사적 협력의 내용은 임계와 확산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 례

국문요약 ····· 3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 11

1. 연구의 필요성 ····· 12
2. 연구의 방법 ····· 15

제2장 신흥안보 위험의 안보화 과정과 협력 분야 식별 ····· 17

1. 의의 ····· 18
   가. 신흥안보 위협과 유형 ····· 18
   나. 신흥안보와 다른 안보 개념의 비교 ····· 19
2. 신흥안보 위험의 특징 ····· 22
   가. 비가시성 ····· 22
   나. 침해의 현재성 ····· 23
   다. 자연발생적 위협과 의도된 위협 ····· 24
   라. 불확실성 ····· 24
   마. 초국가성 ····· 25
   바. 연계성과 확장성 ····· 26
3. 신흥안보 위협의 안보화 과정과 분석틀 ····· 27
   가. 안보화 과정 ····· 27
   나. 신흥안보 대응을 위한 대안적 접근 ····· 29
   다. 복합적 양상을 띤 신흥안보 이슈의 유형화 ····· 32
4.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한 신흥안보 위험 유형의 식별 ····· 34

제3장 아세안 신흥안보 상황과 협력 현황 ····· 39

1. 신흥안보 위협의 아세안 확산 ····· 40
   가. 환경안보 ····· 40
   나. 보건안보 ····· 47
   다. 사이버안보 ····· 51
   라. 자원(에너지·식량) 안보 ····· 57
2. 한·아세안 신흥안보 관련 협력 현황 ····· 60
   가. 환경안보 ····· 62
   나. 보건안보 ····· 68
   다. 사이버안보 ····· 75
   라. 자원(에너지·식량) 안보 ····· 78
3. 소결 ····· 88

제4장 한·아세안 신흥안보 협력 발전을 위한 모델 제안 ····· 91

1. 협력의 추진 원칙 및 전략 ····· 92
   가.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 ····· 92
   나. 추진 원칙과 전략 ····· 101
   다. 협력 모델 구상을 위한 고려사항 ····· 104
2. 신흥안보 분야 對아세안 협력 모델 구축 ····· 108
   가. 신흥안보 유형에 대응하는 적합 거버넌스 ····· 108
   나. 신흥안보 위험의 안보화 과정과 협력 초점 ····· 110
3. 구체적 협력 방안의 제안 ····· 114
   가. 협력 방식과 내용의 선택 ····· 114
   나. 환경안보 ····· 116

다. 보건안보 ····· 119
라. 사이버안보 ····· 123
마. 자원(에너지·식량) 안보 ····· 127

제5장 결론 ····· 133

참고문헌 ····· 137

Executive Summary ····· 147

표 차례

표 3-1. 아세안 회원국의 세계위험지수(WRI) 비교(2018년) ····· 42
표 3-2 아세안 회원국의 기후위험지수(CRI) 비교(1998~2017년) ····· 43
표 3-3 ASCC 청사진 2025: 지속가능한 환경 관련 속성과 핵심 분야 ····· 43
표 3-4 아세안 국가별 국가경쟁력 순위(2018년 기준) ····· 53
표 3-5 아세안 주요 국가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정책 ····· 56
표 3-6 신남방플러스 7대 중점 분야 주요 추진 사업 ····· 61
표 3-7 아세안 기후변화·환경 분야 사업 목록(2019년 이후 신규) ····· 67
표 3-8 한·아세안 재난 관리 워크플랜 ····· 67
표 3-9 한국이 시행한 에너지 접근성 개선 사업(2014~20년) ····· 82
표 3-10. 한·아세안 국가와의 에너지 협력 의제 ····· 83
표 3-11. 지역 다자협의체를 통한 한·아세안 에너지 협력 사업 ····· 85
표 3-12. 아세안 6개국 대상 식량안보정보시스템 구축 협력 사업 (2014~26년) ····· 86
표 4-1 한·아세안 환경안보 협력 내용 ····· 117
표 4-2 한·아세안 보건안보 협력 내용 ····· 122
표 4-3 한·아세안 사이버안보 협력 내용 ····· 126
표 4-4 한·아세안 자원(에너지·식량) 안보 협력 내용 ····· 130

그림 차례

그림 2-1 난제의 10가지 유형 ····· 28
그림 2-2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한 신흥안보 위협 식별 ····· 37
그림 3-1 아세안 국가별 보건의료 격차 ····· 50
그림 3-2 아세안 주요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2000~14년) ····· 58
그림 3-3 아세안의 에너지원별 발전 용량 전망 ····· 59
그림 4-1 신흥안보 추진을 위한 주요 행위자 및 채널 ····· 102
그림 4-2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역내외 국제관계 ····· 105
그림 4-3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중 주도 협의체와 아세안 국가의 가입 현황 ····· 106
그림 4-4 대응 주체와 방식에 따라 분류한 신흥안보 위험 관리 모델 ····· 109
그림 4-5 신흥안보의 초국가적 난제로의 증폭 경로와 대응 국면 ····· 113
그림 4-6 환경안보 이슈의 국면별 대응 주체와 협력 범위 ····· 118
그림 4-7 보건안보 이슈의 국면별 대응 주체와 협력 범위 ····· 123
그림 4-8 사이버안보 이슈의 국면별 대응 주체와 협력 범위 ····· 127
그림 4-9 자원안보 이슈의 국면별 대응 주체와 협력 범위 ····· 131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인도·태평양이라는 전략적 공간을 넘어 전 세계에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사이버, 우주 등 새로운 영역으로도 확산시키고 있다. 미·중 경쟁의 공간적 확대와 영역적 확산은 미국과 서방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국가들과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진영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국제 질서의 변화는 진영화에 참여하면서도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면에서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생존과 번영 및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도·태평양과 동북아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연계하고 있는 아세안(ASEAN)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생존과 번영 및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4강 중심의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다변화와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여야 한다. 선진 ICT 기술과 G8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유연하고 다변화된 외교안보 전략의 이행으로써 사람과 번영과 가치의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이 격상됨에 따라 한국은 4강 중심에서 탈피하여 그 지위에 걸맞은 제대로 된 역할을 실행하여야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는 생존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인도·태평양과 새로운 공간에서 글로벌 중축 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서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통한 외교적 유연성의 확장을 추구하여야 한다.

아세안에는 말라카(Malacca), 롬복(Lombok) 및 순다 해협(Sunda Straits) 등 3개의 해양 관문이 있는데, 이는 세계 교역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지역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수출, 무역량의 상당 부분이 이 3개의 해양 관문을 지나야만 하기 때문에 이 3개의 관문이 자유롭고 개방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 3개의 관문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인도

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싱가포르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한편 베트남은 우리의 직접투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비록 이 3개의 관문과 국경을 마주하지는 않았으나 우리의 무역 거래를 위해서 스프래틀리 제도(Spratly Islands)와 베트남의 동부해안성을 지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미·중 경쟁에 따른 진영화의 틈바구니 속에서 선진 ICT 기술과 G8에 상응하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통해 외교안보 전략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새로운 공간에서의 지정학적 가치를 발휘하는 유연성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재난, 신종 감염병, 사이버공격, 에너지와 식량 등 신흥안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냉전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의 확장은 전 지구적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렇지만 지구화에 따른 공급망 체계를 구축은 오히려 이상기후, 신종 감염병, 사이버 공격, 신기술 발전에 따른 역기능 등과 같은 전 지구적 문제를 확대시켰다. 더구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 지구적 분업화가 가속화됨은 물론 이상기후, 신종 감염병, 사이버 위협, 신기술 발전에 따른 역기능 등과 같은 전 지구적 문제들이 통제 가능성을 상실하였거나 통제 가능성에 대한 한계에 봉착하였다.

우리는 발전된 ICT 기술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신종 감염병을 극복하는 데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의 사이버안보 기술과 전략은 세계 주요국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공 사례와 경험으로 격상된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때이다. 아세안과의 신흥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강화는 선진 ICT 기술과 G8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 수행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흥안보 위험으로부터 세계 시민은 물론 아세안 국가와 그 시민들의 건강과 번영 및 생존을 보호하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외교안보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흥안보 위험에 취약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은 우리나라가 진영화에 참여하면서도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4강 중심의 외교전략에서 신흥안보 협력을 통해 아세안에 대한 우리의 관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진영화에 참여하면서도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여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외교안보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전략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국가들을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상으로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흥안보 협력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이상기후, 신종 감염병, 사이버 위협, 신기술 발전에 따른 역기능, 에너지와 식량 등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주민(people)의 삶과 사회의 안전한 생존을 담보하여 지역의 평화를 보장하는 신흥안보 협력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을 유연하고 전환된 방향에서 모색하여야 한다. 식민지 운영 경험이 없이 오히려 피식민 경험이 있는 우리는 아세안 지역의 신흥안보 협력을 통해 사람과 가치에 대한 보다 큰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경제와 안보의 균형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 외교안보 전략의 자율성과 유연성 강화 차원에서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신흥안보적 관점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인도적 차원에서 아세안과 추진하였던 이상기후, 신종 감염병, 사이버 위협, 에너지와 식량 등과 관련된 협력 사업들을 신흥안보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 그 발전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상기후, 신종 감염병, 사이버 위협, 에너지와 식량 등 신흥안보 위험이 국가적, 지역적 및 세계적 안보 문제로 확산되는 안보화 과정을 검토하고, 이를 중심으로 기존의 한·아세안 협력 추진 현황 및 한계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아세안 신흥안보 협력 원칙과 협력 모델을 구축하며 환경안보, 보건안보, 사이버안보와 자원(에너지·식량) 안보 등 부문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신흥안보 및 아세안 관련 전문연구자를 중심으로 하여 문헌조사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되 아세안 현지 전문가 및 신흥안보 분야 전문가들과의 면담도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신흥안보 이론, 아세안의 신흥안보 현황 및 사례, 신흥안보 거버넌스, 신남방 정책 등 아세안 신흥안보 협력 관련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흥안보 대응 거버넌스와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신흥안보 협력 발전을 위한 협력 모델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신흥안보 문제를 연구하고 아세안 및 신남방 정책을 이해하고 관련 전략과 법제를 분석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이상기후, 신종 감염병, 사이버, 신기술 등 신흥안보 대응 전문가는 물론 아세안 지역의 현지 전문가 및 한·아세안 협력 추진 전문가들과의 면담과 자문을 통해 아세안 신흥안보 위험을 식별하고 한·아세안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

신흥안보 위험의 안보화 과정과 협력 분야 식별

1. 의의
2. 신흥안보 위험의 특징
3. 신흥안보 위협의 안보화 과정과 분석틀
4.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한 신흥안보 위협 유형의 식별

1. 의의

가. 신흥안보 위협과 유형

국가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체계 등 국가의 핵심 요소나 가치, 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황을 '국가위기상황'이라 한다.[1] 국가위기에는 군사적 위협과 같은 전통적 안보 위기뿐만 아니라,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안보 위기 역시 포함되며, 현대 국가에서는 후자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2]

이와 같은 새로운 안보 위험은 산업화와 지구화에 따른 역기능과 인간의 생활공간 확대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산업화에 따른 온실가스의 발생으로 촉발된 이상기후, 인간 생활 영역의 확대와 생태파괴에 따른 신종 감염병의 등장과 지구화에 따른 신종 감염병의 전 지구적 파급은 새로운 국가위기상황을 양산하고 있다.[3] 이상기후와 신종 감염병은 식량 부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지구화에 따른 전 지구적 공급망의 구축은 이민을 증가시킴은 물론 이상기후, 신종 감염병과 식량 부족에 따른 사회불안은 난민을 증가시키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사이버공간은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지만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으로 새로운 안보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4]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들이 구현됨에 따라 국가기밀정보의 보호 및 기술경쟁력 확보 등의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공간과 신기술의 개발·활용을 위한 에너지 경쟁 또한 새로운 국가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

1) 헌법재판소 2017. 3. 10. 결정 2016헌나1(판례집 29-1), p. 50.
2) 위의 자료.
3) 오일석(2021), p. 67.
4) 위의 자료.

나. 신흥안보와 다른 안보 개념의 비교

신흥안보는 이러한 새로운 위험 요소가 상호작용을 통해 양적·질적으로 변화하고 임계점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전환되어 안보적 관점에서 이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5] 신흥안보는 이상기후, 신종 감염병, 사이버, 신기술 등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초국가적 위험 요소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전통안보, 인간안보, 포괄안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비전통안보는 군사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안보를 제외한 군사안보 이외의 영역만을 따로 분리하여 설정한 안보 개념이라 할 수 있다.[6]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 이외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위협들을 제거하고, 취약성을 감소시켜 안전(safety)을 확보한다는 것이다.[7] 전통적 안보가 국경 외부로부터의 위협(threat from abroad)에 치중했다면, 비전통 안보는 국경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협(threat from within)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8] 인간안보는 냉전 종식 이후 급격히 이루어진 세계화로 인해 국가중심적 사고가 약화되고,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수준의 활동에 관심이 증대되면서 등장하였다.[9] 따라서 공포로부터의 자유, 박탈로부터의 자유, 존엄한 삶을 살 자유가 인간안보의 기본요소이다. 인간안보는 모든 개인들, 특히 취약 계층 사람들이 공포로부터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권리를 향유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다.[10]

포괄안보와 비전통안보 및 인간안보는 전통적 군사안보의 개념을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공동분모를 갖고 있지만, 포괄안보는 전통안보를 배제하는 개념이

---

5) 김상배·신범식 편(2017), p. 16.
6) 정상화(2010), p. 5.
7) 홍규덕(2020), p. 13.
8) Klare(2002).
9) 김성진(2019).
10) Buzan, Waever, and Wilde(1998), p. 8; Haq(1995), pp. 40-43.

라기보다는 대상을 확대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11]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는 포괄안보를 단순한 군사적 방어 개념을 넘어 개별 국가가 취약성을 갖는 식량, 환경,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 안보를 모두 고려하는 개념으로 간주한다.[12] 포괄안보는 인간안보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며, 환경, 보건, 금융 등 세계적 범위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과 기아, 질병, 억압, 육체적 안위 등 개인 차원의 사안들을 함께 다룬다.[13]

신흥안보는 이상기후, 신종 감염병, 사이버, 에너지와 식량 자원 등의 위험이 지구화와 정보화로 초연결된 시대에서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미시적 안전은 물론 가시적 안보의 개념을 모호하게 하면서 발생하고, 동태적 환경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신흥안보는 지구화와 정보화로 인해 잠재적 안보이슈로 전환되는 위험에 대해 안보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하고자 하는 안보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신흥안보는 복잡계 이론에서 말하는 창발(emergence)과 안보를 합성한 것으로, '미시적 안전'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질적으로 연계되면서 어느 순간에 '거시적 안보'로 창발하는 안보문제를 대상으로 한다.[14] 즉 미시적 안전이 거시적 안보 문제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 비인간 행위자 등의 관여는 물론 위험의 확산 경로 및 파급 효과를 복합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15] 결국 신흥안보는 산업화와 지구화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신종 감염병, 사이버, 에너지, 식량 자원 등 위험의 동태적 성격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 수단을 동원하여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안보적 활동과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즉 신흥안보는 산업화와 지구화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위험의 유형과 특징을 식별하고 적절

11) 홍규덕(2020), pp. 16~17.
12) 위의 자료, p. 17.
13) 위의 자료.
14) 김상배(2016b), p. 75.
15) 윤정현(2019b), p. 3.

한 대응 수단을 결정하는 동태적 안보화의 실행이라 할 수 있다.

신흥안보 위협은 객관적으로는 실재하는 비가시적 위험이면서 불확실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16] 신흥안보 위협에는 다양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 하물며 비인간 행위자까지도 관여하기 때문에 그 발생 원인과 확산 경로 및 파급 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17]는 특징이 있다. 신흥안보 위협은 산업화와 지구화에 따른 인간생활 공간의 확대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위협으로, 침해의 현재성 또는 장래 발생의 개연성이 매우 높고 물리적 무력(유형력)의 사용이 없이 물리적 공간에서는 자연발생적이며, 가상공간에서는 의도된 위협이라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신흥안보 위험의 복잡성·비정형성·가변성은[18] 전 지구적 파급력과 2차적 위협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16) 위의 자료, p. 3, p. 19.
17) 김상배(2016), pp. 27~28.
18) 윤정현(2021), p. 48.

2. 신흥안보 위험의 특징

가. 비가시성

새로운 안보 위협 즉 신흥안보 위협은 비가시성을 특징으로 한다.[19] 신흥안보 위협은 적성국이나 테러단체 등 보이는 적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와 정보화 및 지구화에 따른 역기능으로 인한 이상기후, 감염병, 사이버공간 등에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전 지구적 산업화에 따른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의 사용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대시켰고 이는 이상기후를 야기하였다. 이상기후에 따른 이상기온 현상은 비가시적 위협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교통수단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도시화와 인간 생활영역의 확대는 환경 및 생태 변화를 일으켰다. 이러한 이상기후와 환경 및 생태 변화로 보이지 않는 신종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구화에 따른 인간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그 확산 또한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보이지 않는 사이버공격으로 각국의 기반시설에 대한 침해나 주요 시스템에 대한 오작동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테러 문제는 적성국가가 아닌 적성단체나 범죄단체 등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행위자만 다를 뿐 보이는 적에 의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안보위협에 해당하기보다는 전통안보 영역의 연장선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

19) 윤정현(2019b), p. 3: 오일석(2021b), p. 68.

나. 침해의 현재성

신흥안보 위협은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위협으로 발현되고 있다.[20] 냉전의 경우 보이는 군사적 긴장은 존재하였지만 실질적인 충돌에 따른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감염병, 이상기후, 사이버공격 등은 보이지는 않지만 감염자의 사망,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피해, 해킹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정보의 탈취나 컴퓨터 시스템의 고장 등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다. 즉 신흥안보 위협은 잠재해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피해 확인 또한 가능하다.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와 세계은행(World Bank)이 공동으로 정립한 '세계 준비태세 감시위원회(GPMB: Global Preparedness Monitoring Board)'는 2019년 9월 보고서에서 전염병 대유행 참사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였다.[21] 동 보고서는 지난 50년간 세계 전 지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신종 전염병이 발생했거나 재발했다면서 향후 인구밀도 증가와 여행인구의 증가, 이상기후, 후진국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무력분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감염병 대유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로 인한 식량 공급 불안정 때문에 2050년에는 주요 곡물 가격이 최대 23%까지 폭등하여 심각한 식량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22]

이와 같이 신흥안보 위협은 실재하거나 긴박한 위협(Actual or Immediate Threat)으로 인한 침해의 현재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장래의 위협이나 잠재해 있지만 발현되지 않은 위협에 대한 대응까지 포함한 생태안보, 환경안보, 인간안보와는 다르다.

---

20) 윤정현(2019b), p. 3; 오일석(2121b), p. 69.
21) Global Preparedness Monitoring Board(2019), "A WORLD AT RISK,"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0. 6), pp. 11-13.
22) *Ibid.*

다. 자연발생적 위협과 의도된 위협

이상기후와 신종 감염병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신흥안보 위협은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 야기되거나 의도된 위협이 아니다.[23] 이상기후는 산업화와 지구화의 역기능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로 자연발생하였다. 감염병은 인간 서식지의 확산과 생태변화로 인해 자연발생하고 있는데, 지구화와 세계화로 무역 거래가 증가하고 사람들의 여행과 접촉이 국제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게 되자 의도하지 않게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배양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으로 자행된 생물학 테러는 물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의도된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물학 테러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테러와 같이, 비전통안보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신흥안보 위협이라고 하기는 곤란하다(다만 후술하는 보건안보의 경우 감염병 대응을 중심으로 생물학 테러도 고려한다는 점에서 신흥안보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편 신흥안보 위협 가운데 사이버공격은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의도된 위협이라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이고 비의도적인 다른 신흥안보 위협과 차이가 있다. 즉 사이버공격은 해커 개인이나 집단이 ATP, 피싱, 디도스 등 다양한 공격 수단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라. 불확실성

신흥안보 위협은 불확실성과 가변성을 내포하고 있다.[24] 비가시적이고 실재하거나 급박한 위협이지만 그 발생 및 확장의 불확실성과 가변성 또한 크다.

---

23) 오일석(2021b), pp. 70~71.
24) 윤정현 외(2021), p. 116.

산업화와 정보화 및 지구화의 역기능으로 등장한 새로운 위협은 인류가 기존에 직면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특성이나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축적된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 아울러 이 새로운 위협은 특히 정보화와 지구화로 인해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여 어떠한 경로를 거쳐 어떠한 파급력을 발생시킬 것인지 예측하기 상당히 곤란하다.

더구나 정보화와 지구화로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에서 파생된 위협에 따른 공포와 불안감이 확대 재생산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정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국제적 분쟁의 확대·재생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초국가성

보이지 않고 실재하거나 급박한 위협으로서 불확실하고 가변적인 신흥안보 위협은 개별 국가를 넘어서는 초국가성을 보이고 있다.[25] 신흥안보 위협은 산업화와 정보화 및 지구화의 역기능에 따라 등장한 것이므로 개별 국가의 문제를 넘어선 전 지구적 위협이다.

특히 전 지구적 공급망과 네트워크로 연결된 현대사회에서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발생한 신흥안보 위협은 자유롭게 이동하는 인구와 물자를 따라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특정 지역 국가들이 모두 영향을 받거나, 감염병과 같이 특정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확산되거나, 사이버공격과 같이 동시에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즉 신흥안보 위협에 따른 영향이나 피해가 지역성, 연속성, 동시성을 가지고 초국가적인 파급력을 행사할 수 있다.

25) 위의 자료.

바. 연계성과 확장성

신흥안보 위협이 야기하는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은 전통안보 위협을 촉발하거나 사람이나 상품의 이동을 통해 또 다른 신흥안보 위협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연계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26] 이상기후는 연계성이 매우 높은 사례인데, 홍수,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수자원 및 식량 위기 등과 연계되면서 안보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27] 이상기후와 신종 감염병으로 식량이 부족한 경우, 대규모 이민이나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상기후와 감염병은 식량 문제와 이민·난민 문제의 발생으로 연계·확장될 수 있다. 식량 문제도 최근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 생산 문제와 연계되면서 심각한 안보 문제가 되기도 한다.[28]

한편 사이버공격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동시에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어 기술의 발전도 촉진하고 있다. 사이버공격과 신기술은 전력의 공급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개발과 수급에도 연계된다.

또한 신흥안보 위협은 군사력과 결합하거나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29] 이는 생물학 공격과 관련된 바이오안보, 에너지의 군사화, 군이나 국가기관의 해킹 바이러스를 이용한 사이버공격은 물론 드론을 이용한 군사작전이나 인공지능을 이용한 정보 수집 등과 같은 신기술의 군사력 사용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신흥안보 위협은 군은 물론 민간 부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대응에서도 군사력에만 의지하여 군이 독자적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보다는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야 한다.

실재하거나 급박한 신흥안보 위협 대응에 전통적 군사력이 동원되기도 한

---

26) 김상배(2016a), p. 84; 오일석(2021b), p. 73.
27) 김상배(2016b), p. 84.
28) 위의 자료.
29) 오일석(2021b), p. 74.

다. 즉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감염병 대응에 군 의료진을 파견하거나 장비를 투입하는 것은 물론 소독 활동과 물자 지원에도 군이 투입되기도 하였다.

3. 신흥안보 위협의 안보화 과정과 분석틀

가. 안보화 과정

신흥안보 위협의 발생 증가에 따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해당 이슈가 가진 '난제(wicked problem)'적 특성이다.[30] 이는 단순히 문제가 어렵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어렵지만 일상적인 문제(hard but ordinary problems)'들이 난립해 있다. 이들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표준화된 방법을 통해 일정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사안들이다. 반면 신흥안보 난제는 전통적 프로세스로는 좀처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갈등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에서 보이듯이, 일반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으며, 각 행위자들에게 상이한 이해관계, 가치, 정치적 신념 등으로 이 문제 등이 개입되기 쉽기 때문이다. 즉, 난제는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며,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가 되지 않을수록 더욱 더 고약한 난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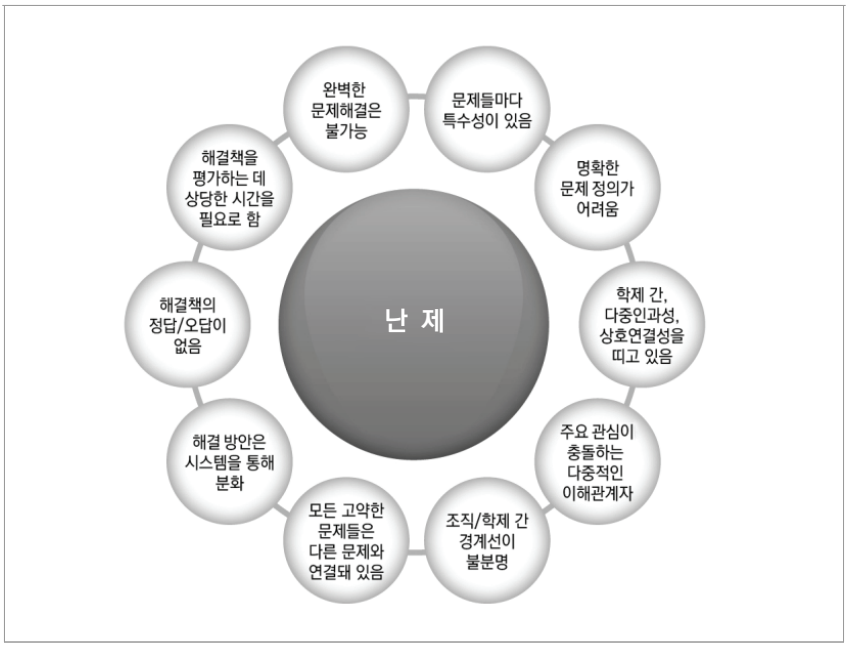
더욱이 상호연계성과 복잡성이 증폭된 21세기 탈근대 사회에서는 미시적인 안전 문제가 향후 얼마든지 중대한 초국가적 난제로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불확실성을 전제한다.

---

30) '고약한 문제'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wicked problem은 이슈의 '윤리적으로 나쁘다'는 의미를 갖기보다는 정확한 특성을 단순하게 정의하기 곤란한 문제를 의미한다. 즉 복잡하고 풀기 어렵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사안인 것이다. Camillus(2008), "Strategy as a Wicked Proble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0. 6).

따라서 신흥안보 위협은 잠재적인 미시적 차원의 이슈가 예상치 못한 경로를 거쳐 언제든지 국가나 초국가적 차원의 거대 위험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상정하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여기서 핵심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수준의 위험과 마주한 사회가 각 국면에서 어떻게 이들을 효과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초기 단계에서 위험이 가진 불확실하고 비가시적인 양상에서 어떻게 다양한 소통 과정을 확보할 것인가도 관건이 된다. 동시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각 협력 주체들 간의 공동 위험인식과 의제화를 위해 어떻게 용이한 방식으로 '안보화(securitization)'를 거쳐 거버넌스 모델을 수립할 것인가도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1. 난제의 10가지 유형



자료: Camillus(2018).

실제로 신흥안보 위험들은, 일상의 미시적 수준에서 양적인 축적을 거치며 거시적인 안보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또한, 다른 직·간접 영역의 이슈들과 연계되면서 질적인 변환을 거쳐 안보로 증폭되는 사례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이 동시에 발현되는 양질 변환의 경로도 발견된다. 특히, 신흥안보 위험이 가진 주요 특성상, 어느 순간 발생하는 도전 이슈가 특정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연계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순식간에 거시적 수준에서의 중대한 안보 이슈로 바뀔 수 있으므로 변환 과정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31]

즉, 21세기에 벌어지는 복합적인 도전의 흐름과 맞물려 신흥안보 위험 이슈는 상기한 가변성을 내포하므로 예측이 매우 어렵다. 나아가 국경과 상관없이 전개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일국 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각각의 전환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다양한 위험 소통과 대안적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나. 신흥안보 대응을 위한 대안적 접근

전통안보와 달리 역동적인 변화의 메커니즘을 가진 신흥안보 위협은 발생 초기의 '미세신호(weak signal)'를 탐지하기 어려우며 국가 차원에서 정의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불확실성과 가변성, 초국가성은 21세기의 신흥안보 이슈를 규정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소단위 지역의 안전 이슈일지라도 양적 점증에 따라 국가 및 글로벌 차원의 안보 문제로 증폭될 수 있으며, 새로운 이슈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면서 질적 변환을 거치며 안보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나아가 위험의 점증과 이슈 연계가 동시에 관찰되는 양·질적 변환 역시 중대한 안보 문제로 귀결된다.[32] 이 과정에서 안보의 대상과 주체, 적용 범위가 확장되는 현상이 나타난

31) 윤정현(2020), p. 35.
32) 각 단계에서 발견되는 임계점은 순차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중첩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

다. 또한 이슈 간 복잡해진 층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은 지정학적 환경의 변동성을 높이고, 초국가적 도전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구축 사이의 불일치를 확대함으로써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속성이 있다. 이 같은 안보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시각에서 위험을 분석하고 전통적 관점의 안보 개념을 넘어설 필요성을 제기한다. 나아가 대응의 효과성 측면에서 국가 중심의 국제질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대안적 거버넌스의 모색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최근 이 같은 신흥안보의 도전은 국제사회의 실재하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과 기후변화가 낳은 환경적 위기는 기술·사회·경제적 불확실성과 맞물려 복합성을 지닌 초국가적 난제로 변모 중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국제정치질서의 상수는 이들 도전요소와 함께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글로벌 차원의 '경제안보'이슈로 증폭되고 있다.[33]

이처럼 잠재적·미시적 차원의 위험 이슈가 언제든지 국가, 거시적, 실재적 차원의 국가·초국가적 위험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운데, 다양한 신흥안보 이슈들을 위험의 특징에 맞게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에 조응하는 효과적인 대응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가 현실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신흥안보 위협이 갖고 있는 공통적 속성에 대한 고찰과 유형화가 필요하다. 오늘날 미시적 안전 이슈에서 거시적인 안보 문제로 전환 가능한 위험 요소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하지만 다양한 위험 이슈들 각각을 잠재적 안보 요인으로 전제하고 대응 모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가변성과 불확실성을 전제한 신흥안보 개념의 동태적 특징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이들 신흥안보 이슈가 초국가적으로 발현되는 과정

라서는 동시에 발생하기도 한다. 김상배(2016a), pp. 32~33.

33) 경제학에서 언급되는 위험들은 개인이나 기업 수준의 특정 시장 부문과 관련된 파편적 사안으로서, 소득, 고용, 의료, 일자리 등에 미치는 도전 요인들을 다루어왔다. 반면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경제안보 개념은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외부의 경제적 유무형의 위협으로부터 가용한 수단을 활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통용된다. 허재철(2022), p. 60.

에서 특징적 형태를 포착하여 구분할 유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위기 대응에 필요한 국가의 역량 및 역할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국제정치질서에서 안보와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하였던 국가 행위자는 수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도 여전히 핵심적인 행위자로 남아 있다. 각국은 안보 의제를 둘러싼 위기 담론 형성 과정에서 수많은 비국가 행위자와 상호작용 하면서 협력 네트워크를 결성한다.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자원 동원의 수단을 유연하게 전환함으로써 여전히 신흥안보 이슈를 둘러싼 협력과 경쟁의 질서 속에서도 그 역할을 강화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신흥안보 위협 거버넌스의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정학적 맥락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근대와 탈근대의 지역별 격차와 혼종적 질서, 단극체계에서의 안보 환경 변화는 유사한 위험 이슈라도 지역마다 특징적인 거버넌스의 메커니즘이 부상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어떠한 신흥안보 이슈가 안보 의제로 선택되어 핵심적 사안으로 발전하는 데까지는 이슈 자체의 특징뿐만 아니라 중요성을 인식하고 반영하는 지역적 맥락이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협력을 공고히 만드는 제도화 과정에서 공동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인하는 사회·문화적 변수도 무시할 수 없다.

넷째, 초국경적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의 역할과 이들과의 연계·협력 방식에 대한 고려도 역시 필요하다. 초국가적 신흥안보 위협은 전통적인 일국 정부 수준의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특히, 글로벌 차원에서 다양한 행위자 간의 위험 소통이 가능해진 오늘날의 환경에서 NGO, 국제기구, 전문가그룹 등은 전문 영역에서 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의제를 수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슈 부문별로 전문성과 영향력이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소통 과정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 복합적 양상을 띤 신흥안보 이슈의 유형화

현대의 위험사회학자 프랑수아 에왈드(François Ewald)와 니클라스 루만(Nikklas Lumann)은 오늘날 우리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위적 위험과 자연재해를 수반하는 위험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인위적 위험은 손실이 광범위하고 분산적이며 확산적이어서 전통적인 원인 귀속 양식으로 포착될 수 없는 인과성과 시간성을 갖기 때문이다.[34] 여기에 최근 국제위험거버넌스협회(IRGC: International Risk Governance Council)에서는 현대사회의 재난을 발생 원인에 따라 단순형, 복합형, 불확실형, 모호형 등에 기인하는 네 가지로 나눈 바 있는데,[35] 이는 고도로 기술이 발달된 현대사회의 복잡한 사회 시스템이 제기하는 다양한 속성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묵적으로 국가 단위에서의 대응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비가시성, 침해의 현재성, 불확실성, 전 지구적 파괴력, 나아가 전통적 군사력과의 연계 가능성의 특징을 내포한 신흥안보 이슈가 발현될 경우, 어떠한 수준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대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각각의 위험이 유발하는 대응 거버넌스의 구조적 제약을 고려할 때 신흥안보 관점에서의 위험 유형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이 절실하다.

정치·경제·환경·기술·사회 분야 등 다양한 부문에서 촉발될 수 있는 신흥안보 이슈는 공통적으로 파급력의 복합성과 초국가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안보 이슈로의 증폭 과정에서 예측이 쉽지 않은 가변성과 경로의 불확실성 또한 내재하고 있다.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거버넌스의 관건은 위험에 직면한 공동체가 파급 과정에서 이를 얼마나 빨리 위험으로 인식하고 초국가적 소통을 통해 공동의 안보적 사안으로 수용하게 되는가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흥안보 유형을 분류하는 데 있어 초국가적 안보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변수

34) 노진철(2010), p. 41.
35) Renn(1992), p. 47.

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촉발 원인으로서의 '위험의 속성'과 발현과 함께 영향을 미치게 되는 '파급 속도'이다.

먼저, 위험의 속성 측면에서 x축을 설정한다면, 신흥안보 위협은 주로 자연 및 생태적 메커니즘의 급변에 따라 유발되는 불가항력적 속성이 강한 '비의도적 재난형 안보'와 인간이 구축한 시스템이 의도적인 공격에 의해 붕괴되거나 주요 인적·물적 자원의 관리실패 등으로 야기되는 '갈등·쟁점형 안보'로 나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직면한 위험 이슈가 얼마나 빨리 공동체의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는 유형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파급 형태를 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발생과 동시에 파급의 범위가 뚜렷하고 즉각적인 재난으로 인지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반면, 발현 당시에는 위험 수준이 점증하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하는 데 시차가 나타나지만, 직간접적인 다른 부문과 연계하여 사회적 파급력이 심화되는 위험이 존재한다. 즉, 위험의 파급 형태에 따른 분류로서 y축을 설정하면, y축의 상단에는 '돌발·폭증형' 위험 이슈가 위치하게 되며, 하단에는 '점증·확산형' 위험 이슈가 위치하게 된다.

4.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한 신흥안보 위험 유형의 식별

산업화와 지구화에 따른 역기능과 인간의 생활공간 확대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안보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안보 위협의 유형화와 관련하여 기후변화, 보건, 사이버, 대테러, 이민·난민, 인구, 에너지, 식량, 해양, 인공지능 등이 신흥안보 위협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36] 신흥안보 위협을 환경안보, 인간안보, 기술안보로 대별하고, 환경안보에 기후변화와, 보건, 식량을 분류하고, 인간안보에 이민·난민, 테러를 분류하며, 기술안보에 신기술, 사이버, 에너지 및 자원을 배치한 사례도 있다.[37]

한편 신흥안보의 비가시성, 침해의 현재성, 물리적 공간에서의 비의도성 등의 특징을 고려할 때 대테러, 해양 등은 신흥안보보다는 전통안보 위협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대테러의 경우에는 물리적 수단을 사용하여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지만 테러단체나 조직 등 비전통적 군사집단에 의한 물리력 사용이라는 점에서 전통안보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물리력 사용의 주체가 다르고 가시성, 물리적 공간에서 의도성을 가진 공격이라는 점에서 신흥안보 이슈로 보기 어렵다. 해양의 경우 전통안보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슈로서 비가시성, 물리적 공간에서의 비의도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미·중 경쟁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안보적 이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안보와 다른 측면이 있을 뿐으로 보인다.

이민·난민, 인구, 인공지능은 비가시성, 침해의 현재성, 물리적 공간에서의 비의도성 등의 특징을 고려할 때 신흥안보 위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이슈들은 창발-임계-확산의 안보화 과정을 통해 전 지구적 신흥안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위기 대응에 필요한 국가의 역량과 역할, 지정학적 맥

36) 국가안보전략연구원(2018).
37) 국가안보전략연구원(2022).

락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한·아세안 신흥안보 협력 대상으로 식별하기에는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 즉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난민 문제는 유럽의 지정학적 맥락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신흥안보 이슈라 할 수 있고, 이민의 경우 남미의 빈곤과 북미의 풍요에 따른 것으로 남·북 아메리카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신흥안보 이슈라 할 수 있다. 아세안의 경우 미얀마 난민 사태가 신흥안보 이슈로 창발하여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미얀마 군부의 집단 학살을 피해 해외로 떠난 로힝자족 난민을 비롯하여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한 난민들이 발생하였고 이들은 미얀마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 인도, 태국 등 다른 국가로 피신하여 난민 신청을 하거나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22년 5월과 6월에 미얀마인 3명이 "미얀마 군사정부의 민주화 운동 탄압을 피해 한국에 왔다"고 하면서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 자체가 반려되었다.[38]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난민 수용에 대해 국민 중 48%는 찬성을, 34%는 반대하였고, 난민 수용 시 가장 염려가 되는 지점으로는 '난민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다양한 종교 및 문화 차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꼽으며, 미얀마 난민의 경우 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였다.[39] 한국는 「난민법」(법률 제14408호)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난민에 대해 국민의 수용성이 높지 않은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한·아세한 협력 대상이 되는 신흥안보 이슈로 식별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아세안 지역에서도 난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과 인도적 협력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문제의 경우도 유럽 주요국과 한국 및 일본 등에서는 심각한 안보화 과정에 진입할 수 있는 신흥안보 이슈라 할 수 있지만, 일본과 한국 및 대만과 유럽 주요국들에 비해 아세안 국가들에서는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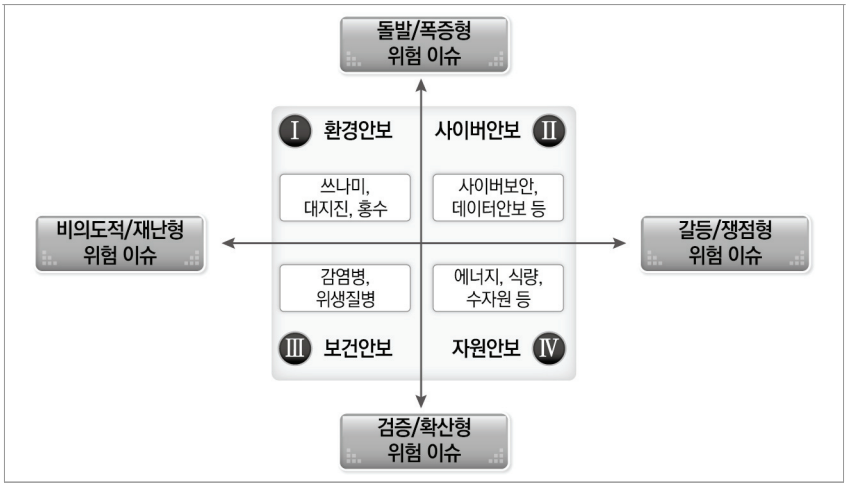
38) 김지문(2022. 6. 15), 「인천공항출입국, "민주화 운동" 미얀마 난민 심사조차 거부」,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10. 8).
39) 김정현, 박정식(2021. 10. 20), 「미얀마와 아프간 난민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 분석」,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0. 8).

직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결과 협력 대상 이슈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세안 국가들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바 향후 인구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인공지능 또한 신흥안보 특성에 포섭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 경제, 정치 및 군사적 위협을 초국경적으로 야기할 수 있지만 아세안 국가들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 신흥안보적 협력을 추진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 빅데이터, 양자암호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협력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흥안보 위협의 특성, 안보화 과정, 대안적 접근과 분석틀 등을 고려할 때 한·아세안 신흥안보 협력은 기후변화, 보건, 사이버, 에너지 및 자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후변화는 환경, 이민·난민, 에너지·식량 등 여러 신흥안보 이슈와 연계되어 있다. 기후변화와 연계된 여러 신흥안보 이슈 가운데 이민·난민은 아세안 협력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에너지·식량 등은 협력 대상 이슈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후변화 이슈의 경우 환경안보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한 신흥안보 위험 유형은 환경안보, 보건안보, 사이버안보, 자원(에너지·식량) 안보로 식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식별된 환경안보, 보건안보, 사이버안보, 자원(에너지·식량) 안보 등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한 신흥안보 위협 유형은 위험의 속성을 기준으로 '비의도형·재난형 안보'와 '갈등·쟁점형 안보'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위험의 파급 형태·속도를 기준으로 '돌발·폭증형' 위험 이슈와 '점증·확산형' 위험 이슈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한 신흥안보 위협은 Ⅰ 영역 환경안보, Ⅱ 영역 보건안보, Ⅲ 영역 사이버안보, Ⅳ 영역 보건안보로 식별할 수 있다.

그림 2-2.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한 신흥안보 위협 식별



자료: 윤정현(2019a)를 바탕으로 재구성.

Ⅰ 영역의 환경안보는 초국가적 수준에서 대지진, 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와 같은 비의도적인 환경 위험 이슈가 포함된다. 상징적인 예는 2004년과 2018년에 있었던 쓰나미(Tsunami)이다. 당시 피해는 스리랑카는 물론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지역에까지 이른 동남아시아 차원의 초국가적 재난이었다. 동시에 위험의 심각성이 발생하자마자 가시화되면서 아세안과 전 세계 언론이 피해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과 재건을 위해 나섰던 돌발적인 위험 이슈의 특징을 보여준다. Ⅱ 영역의 사이버안보는 발생과 함께 피해가 나타나는 돌발적 위험이지만, 해킹이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이 인간에 의해 유발되는 의도적 공격으로서 책임소재와 피해 복구를 둘러싼 쟁점이 첨예하게 나타나는 위험이라 할 수 있다. 아세안 지역은 최근 디지털 산업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제조 설비가 광범위하게 구축되었으며, 사회 전반의 ICT 인프라가 확장되면서 사이버보안의 위협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안보의 Ⅲ 영역은 두 영역과

달리 초기 발생에서 지역사회가 위험을 인지하는 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점증/확산형 위험 이슈라 할 수 있다. 사스(SARS, 중증호흡기증후군), 신종플루,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같은 신종 감염병이 대표적이며 그 외 HIV/AIDS 및 위생질병들이 포함된다. 세계화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국가간, 지역간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바이러스의 발생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게 되었다. 또한 관광, 교통, 물류를 비롯하여 다양한 산업 부문으로의 피해가 연계되는 등 조기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초국가적, 지역적 심지어 글로벌 차원의 위험 이슈로 확산할 수 있는 특징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Ⅳ 영역은 자원안보에 해당하는 유형으로서 기후변화 및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한 식량·에너지 부족 등이 해당된다. 생계를 위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의 가난한 화전민이 경작지를 태우면서 촉발되는 연무(haze)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메콩강 삼각주 개발에 따른 대규모 이주민 발생, 급증한 산업 수요에 따른 에너지 부족 현상들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다. 나아가 보상과 책임소재를 두고 국가간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불법 조업 등에 따른 해양 수자원 고갈, 식량기업들의 과도한 역외 수출로 인한 일부 곡물의 품귀 현상 등의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이슈들은 아세안을 넘어 주변국과 글로벌 교역에 따른 문제로서 글로벌 공급망의 쟁점과도 밀접히 연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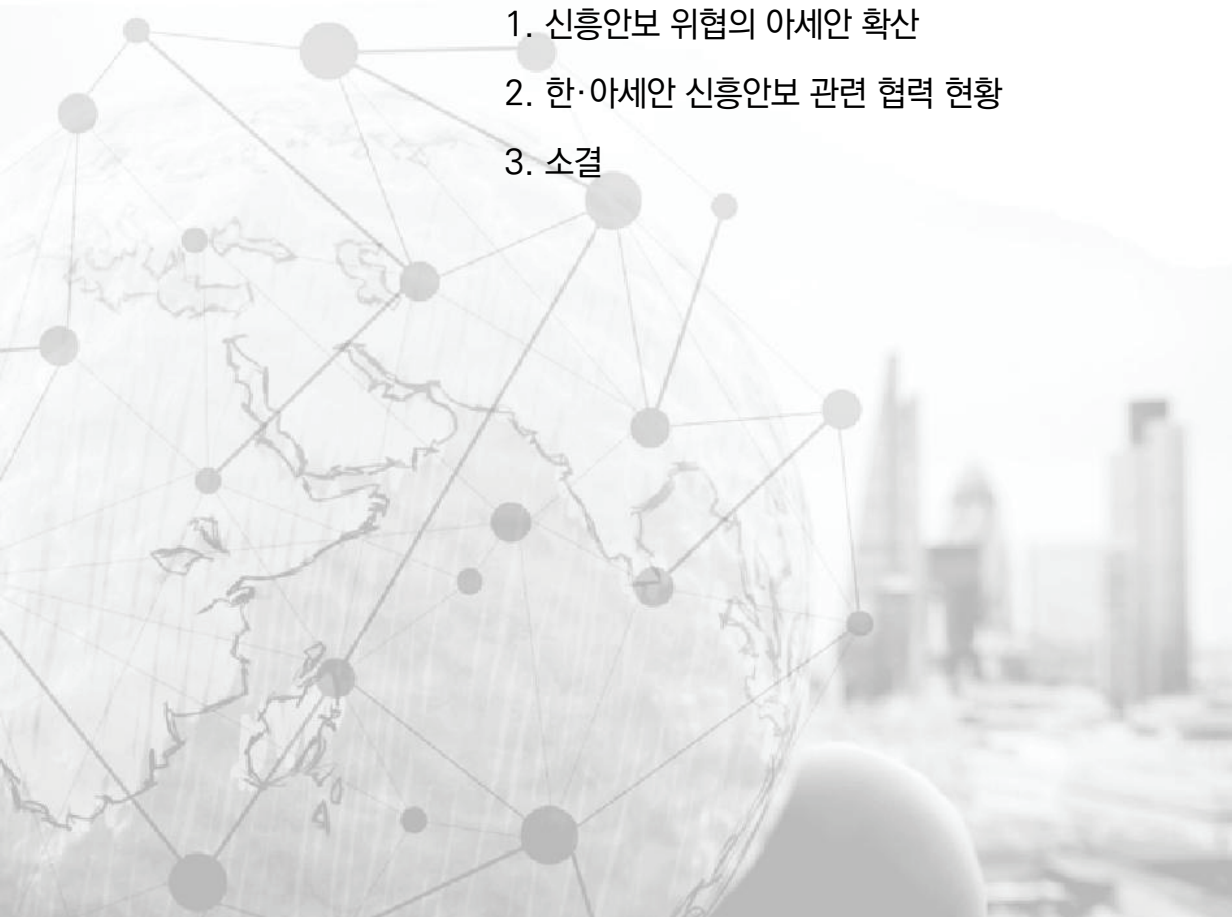
제3장

아세안 신흥안보 상황과 협력 현황

1. 신흥안보 위협의 아세안 확산

2. 한·아세안 신흥안보 관련 협력 현황

3. 소결



1. 신흥안보 위협의 아세안 확산

아세안은 2021년 기준 약 6억 7,000만 명의 역내 인구를 바탕으로[40]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5.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41] 세계 주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IMF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0년 - 3.3% 역성장했던 아세안은 2021년 2.6%, 2022년 5.5%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42] 아세안은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다. 특히 아세안 후발 회원 가입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메콩강 지역 국가들은 전력, 도로 및 용수 등 인프라 상황이 열악하다. 이로 인해 매년 초대형 자연재해, 전염병, 초국경적 환경오염 등 다양한 신흥안보 위협이 아세안 지역에 확산되고 있다.

가. 환경안보

아세안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자 기후변화에 가장 큰 취약성을 보이는 지역이다. 2장에서 다룬 위험의 속성 및 파급 속도에 따른 신흥안보 위험 분류에서 Ⅰ 영역의 환경안보와 Ⅳ 영역 위험들의 발생이 잦다. 아세안의 자연환경은 지역 경제발전, 빠른 속도의 도시화 및 높은 인구밀도, 부문별한 자원 채취, 적절한 규제와 정책의 부재 등으로 인해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다. 2000년 이후 동남아시아에서는 아세안 재난관리 참조 핸드북에서 치명적인 재난으로 분류된 세 가지 재난, 즉 인도양 쓰나미(2004년), 사이클론 나르기스(2008년), 태풍 하이얀(2013년)이 발생했다. 기후변화의 심화는 자연재해의

40) 박영서(2021. 10. 29), 「[뉴스 따라잡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아세안)」,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11. 4).
41) 홍덕규(2020).
42) 민혁기(2021), 「아세안, 회복에 속도 낼 전망이나 팬데믹 재확산 등 위협요인 상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1. 4).

발생 정도와 빈도 등에 영향을 준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연구에 따르면, 2100년경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에서는 연간 기온이 1900년 대비 2.5~4.8℃가량 오르고 해수면은 70c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43]

이처럼, 아세안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같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게다가,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자연재해는 의도하지 않은 2차적 연계로 인해 피해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된다.[44] 특히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도서국이 많다는 점과 내륙과 해양에서 국가간 접경지역이 많아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이 국가간에 전이되기 쉽다. 이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연관성·상호의존성으로 인해 한 국가의 위험이 이웃 국가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의 연무(haze)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메콩강 유역의 홍수는 동남아 전 지역에 걸쳐 재난을 초래한다.[45]

매년 발표되는 국가별 세계위험지수(WRI: World Risk Index)와 기후위험지수(CRI: Climate Risk Index)에 따르면, 자연재해에 아세안 회원국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WRI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 중 필리핀과 브루나이가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이 높은 국가이며,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도 비교적 높은 위험을 지닌 국가로 평가되었다(표 3-1 참고). 대부분 자연재해 대응 역량 부족이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다. CRI는 보다 단순화된 수치를 토대로 산출되는데, 재해로 발생하는 인적·경제적 피해를 중심으로 지표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WRI와 차이가 있다(표 3-2 참고).[46]

자연재해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가 커지면서 아세안 회원국은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세안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비전은 ASCC 청사진 2025의 5대 요소 중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 항

43) 문진영 외(2019), p. 182.
44) UNDP(2020. 11. 11), "Pioneering the Green Sukuk in Indonesia."
45) 윤정현(2016) 참고.
46) 문진영 외(2019), pp. 183~184.

목에 반영되어 있다. 지속가능성 항목은 아세안의 균형 잡힌 사회적 개발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목표로 하며, 핵심 분야로는 ① 생물다양성과 천연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관리 ②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③ 지속가능한 기후 ④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이 있다. 각 핵심 분야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전략조치로 설명된다.[47]

한편 아세안은 2015년 제26차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재해와 기후변화에 대한 아세안의 회복탄력성 제도화 선언'[48]을 채택하며 보다 회복탄력적인 아세안을 실현하기 위해 재해와 기후 관련 현존하는 위험의 경감, 새로운 위험의 예방,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등을 강조하였다(표 3-3 참고).

표 3-1. 아세안 회원국의 세계위험지수(WRI) 비교(2018년)

국가	WRI 순위	WRI 지수	노출도	취약성	민감성	대응역량 부족	적응역량 부족
필리핀	3	25.14	49.94	50.33	29.58	81.57	39.83
브루나이	8	18.81	52.71	35.61	14.80	61.50	30.83
캄보디아	12	16.07	27.13	59.22	40.97	86.03	50.67
베트남	25	11.35	24.17	46.98	25.54	75.22	40.17
인도네시아	36	10.36	20.57	50.38	27.20	78.42	45.51
미얀마	64	7.49	13.30	56.29	33.74	85.23	49.90
말레이시아	82	6.44	16.35	39.41	17.95	67.06	33.23
태국	88	6.12	14.22	43.04	18.91	74.81	35.39
라오스	106	5.30	9.30	56.94	33.97	82.07	54.77
싱가포르	158	2.31	8.56	26.98	11.89	47.73	21.31

자료: Heintze *et al.*(2018), pp. 48-51; 문진영 외(2019), p. 183 재인용.

47) 위의 자료, p. 185.
48) ASEAN(2015. 4. 27), "Declaration on Institutionalizing the Resilience of ASEAN and its Communities and People to Disasters and Climate Change, ASEAN Summit in Kuala Lumpur, Malays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9. 30).

표 3-2. 아세안 회원국의 기후위험지수(CRI) 비교(1998~2017년)

국내	CRI 순위	CRI 점수	연평균 사망자 수	연평균 10만 명당 사망자 수	연평균 손실액 (백만 달러, PPP)	연평균 GDP 단위당 손실액 비중(%)
미얀마	3	13.17	7,048.850	14.392	1,275.961	0.661
필리핀	5	19.67	867.400	0.971	2,932.153	0.576
베트남	9	31.67	296.400	0.350	2,064.740	0.516
태국	13	34.83	137.800	1.209	7,894.763	0.936
캄보디아	19	39.67	53.300	0.384	242.493	0.723
인도네시아	69	74.17	252.000	0.108	1,798.562	0.083
라오스	89	85.67	6.300	0.108	73.910	0.237
말레이시아	116	105.50	21.450	0.078	182.228	0.033
브루나이	175	168.17	0.100	0.027	0.342	0.001
싱가포르	180	172.17	0.000	0.000	2.874	0.001

주: 1988~2017년 평균.
자료: Eckstein, Hutfils, and Winges(2018), pp. 32-34; 문진영 외(2019), p. 184 재인용.

표 3-3. ASCC 청사진 2025: 지속가능한 환경 관련 속성과 핵심 분야

구분	핵심 분야
C. 지속가능성	C.1 생물다양성과 천연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관리
	C.2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C.3 지속가능한 기후
	C.4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D. 회복탄력성	D.1 재해에 대한 회복력 있는 아세안(신속하고 정확한 재해 예측, 대응, 적응, 회복)
	D.2 보건 관련 위험(생물학적, 화학적, 방사능 관련, 그 외 신규 위협)에 대응하는 보다 안전한 아세안
	D.3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기 위해 제도적·인적 역량을 강화한 기후적응적 아세안
	D.4 기후변화 관련 위험, 재해, 기타 취약성을 경감하기 위해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여성, 아동, 노약자, 장애인, 소수민족, 위험 지역 거주민 등)
	D.5 자원의 이용 가능성, 접근성, 비용,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여 위기 시 재정 시스템, 식량, 물, 에너지 사회보장제도 강화 및 최적화

자료: 문진영 외(2019), p. 185.

이처럼 아세안은 단기적으로 재난 대응과 피해 복구, 장기적으로는 오염물질 감축을 통한 환경보호를 목표로 이원화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49] 환경 분야에서는 아세안 환경장관회의(AMME: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Environment)와 환경고위급회의(ASOEN: ASEAN Senior Officials Meeting on Environment) 및 산하 7개 주제별 작업반을 통해 역내 환경 분야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ASCC 청사진 2025'에 명시된 '지속가능성' 항목의 핵심 분야와 전략조치들을 중심으로 '아세안 환경 전략계획(ASPEN: ASEAN Strategic Plan on Environment) 2016~25'가 마련되었다. ASPEN에 명시된 우선 과제는 ① 자연보존과 생물다양성 ② 해안 및 해양환경 ③ 수자원 관리 ④ 지속가능한 도시 ⑤ 기후변화 ⑥ 화학물질과 폐기물 ⑦ 환경교육 등 7개 분야이다.[50] ASPEN의 7대 우선 과제에 따라 AMME와 ASOEN의 산하기구로 주제별 작업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환경 문제는 ASCC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므로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APSC: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나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비전하의 분야별 산하기구와도 긴밀히 협조한다는 것이 아세안의 방침이다. 지난 2012년 아세안 환경장관회의에서 아세안 환경협력에 관한 방콕결의안(Bangkok Resolution on ASEAN Environment Cooperation)을 채택하였는데, ASCC 비전, 지속가능한 개발, 지역통합 등을 실현하기 위해 천연자원 및 환경에 관한 역내 협력 및 국제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SPEN 2016-25, 아세안 환경보고서, 아세안·UN 환경 및 기후변화 행동계획 등의 개발과 채택, 아세안의 폐기물 문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사업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51]

재난 대응을 위한 역내 거버넌스 체계는 2004년 출범한 아세안 재난관리 장

49) 한동만(2022), 「아세안의 그린 인프라 투자 동향: 필리핀 사례를 중심으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9. 28).
50) ASEAN Secretariat(2017), pp. 9-11.
51) 문진영 외(2019), p. 191.

관회의(AMMDM: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Disaster Management)이 있다. 아세안 재난장관회의는 아세안 공동의 재해 대응을 위해 아세안 관련 부처 및 기관 간 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2005년 채택된 아세안 기후재난관리 및 위기대응 협약(AADMER: ASEAN Agreement on Disaster Management and Emergency Response)은 아세안의 재해 관리를 위한 공통의 플랫폼이자 역내 협력정책의 토대이다. AADMER에는 ① 재해 위험 식별, 측정, 모니터링 ② 재해 예방 및 경감 ③ 재해 대비 ④ 긴급대응 ⑤ 재해 복구와 같이 재해 관리 단계에 따른 아세안 회원국간 협력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협약의 당사국 및 유엔과 관련 국제기구 간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실행기구인 아세안 재난지원 조정센터(ASEAN Humanitarian Assistance Centre, 이하 AHA 센터)를 설립하였다. 아세안은 2012년부터 AADMER 당사국 총회를 통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공동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은 AHA 센터를 통해 회원국의 국립재난관리기구와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재난 대응을 하고 있다. 초국경적 연무 피해 방지를 위한 아세안 역내 다자협약(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도 체결하였으며, 이의 모니터링을 위한 상설 기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52]

아세안 재난관리 위원회(ACDM: ASEAN Committee on Disaster Management)는 위험 평가 및 인식, 예방 및 경감, 준비 및 대응, 회복, 지식 및 혁신관리 등 5개 주제별로 관련 작업반을 운영하며 AADMER를 이행한다. 2004년 남아시아 쓰나미 참사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경감 장관회의(APMCDRR: Asia-Pacific Ministerial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가 신설됐으며,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2015년 출범한 재해 관리에 관한 아세안 전략정책대화(ASEAN SPDDM: ASEAN Strategic Policy Dialogue on Disaster Management)를 통해 ACDM의 장기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아세안의 재해 관리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 2016년 2차 SPDDM에서

52) 위의 자료, p. 196.

아세안 회원국은 재해 관리를 위한 민간의 참여, 2017년 3차 회의에서는 재해 관리 역량과 재해 회복력 강화를 위해 유엔 기구들과의 협력에 주목하였다. 한편 2015년 제3차 AMMDM 회의에서 ACDM가 마련한 장기 비전인 '아세안 재해관리 비전 2025(ASEAN Vision 2025 on Disaster Management)'가 채택되었는데, 효과적인 AADMER 이행을 위한 요소로 제도화와 커뮤니케이션, 파트너십과 혁신, 재정 및 자원 조성 등이 제시되었다. 2차 AADMER 작업 프로그램(2016~20)은 ① 재해 관련 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 ② 안전한 인프라 및 필수 서비스 제공 ③ 재해 회복적이고 기후 적응적인 아세안 ④ 아세안 통합의 사회경제적 이득을 보호 ⑤ 재해 대응을 위한 리더십 전환 ⑥ 공동의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⑦ 재해로부터의 회복 역량 ⑧ 재해 관리 전문성 강화를 8대 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재난이 빈번해지면서 아세안 회원국은 2020년 11월 말 장관급 회의를 열고 2021~25년 사이에 실행할 새로운 재난 관리 프레임워크(ASEAN Disaster Management Framework) 채택을 결정하였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등을 통해 역내 및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세안 회원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 배양, 기술 이전, 재정 지원 등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가별 여건을 고려하여 제시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역시 아세안 회원국이 처한 자연환경과 경제수준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 자연재해의 피해가 심한 필리핀은 기후 모니터링과 관측을 위한 시스템, 기후 및 재해 취약성 평가 부문 지원을 강조하고 있고, 브루나이는 산림 분야, 싱가포르는 사회구조적인 탄력성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의 기후변화 활동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과 적응기금(Adaptation Fund)을 포함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53]

53) 위의 자료, pp. 202~203.

그동안 녹색기후기금은 필리핀에 3개 프로젝트에 7,560만 달러를 제공하는 등 아시아개발은행(ADB)을 통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4개국의 녹색회복 프로그램에 3억 달러(2억 8,000만 달러는 유상으로 2038~50년 사이에 상환, 2,000만 달러는 무상)를 지원하였다.[54] 2013~17년 평균 아세안 8개국(브루나이, 싱가포르 제외)에 유입된 ODA 역시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목적의 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경우 감축, 적응, 감축과 적응 공통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2013~17년 평균 기후변화 목적의 ODA 금액에서 감축과 적응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4.1%와 32.1%로 나타났다.[55] 기후변화의 경우 감축, 적응, 감축과 적응 공통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2013~17년 평균 기후변화 목적의 ODA 금액에서 감축과 적응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4.1%와 32.1%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생물다양성과 사막화 방지 목적의 사업은 전체 ODA의 5.2%와 1.2% 수준이었다. 제공받은 ODA 금액 중 환경과 관련된 사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태국(64.6%), 말레이시아(52.8%), 베트남(36.0%) 등이었고, 기후변화 목적 사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태국(57.7%), 인도네시아(22.8%), 필리핀(22.3%) 순이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ODA의 52.8%가 환경 분야에 투입된 반면, 기후변화 목적의 지원은 3.9%에 불과했다.

나. 보건안보

제2장에서 다룬 Ⅲ 유형의 감염병 및 위생질병과 같은 보건안보적 위험들은 초기 발생에서 지역사회가 위험을 인지하는 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점증/확산형 위험 이슈이다. 초국경적 특성으로 아세안 일부 회원국에서 발생하더라도 아세안 전체 국민들의 삶과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00년

54) 한동만(2022), 「아세안의 그린 인프라 투자 동향: 필리핀 사례를 중심으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9. 28).
55) 위의 자료, p. 185.

대 들어 아세안은 사스(2003), 조류독감(H5N1, 2005), 메르스(2015), 지카바이러스(2016) 등 감염병이 유행하였으며, 여기에 지역 토착 감염병인 뎅기열 등과 같은 다양한 질병과 감염병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이처럼 아세안의 보건안보 도전 요소는 크게 △신·변종 감염병 △바이오안보 △식품안전 △비전염성 만성질환 및 고령화 등을 들 수 있다.[56] 그 가운데 신·변종 감염병 확산이 보건안보의 첫 번째 위협요인에 해당한다. 대규모 감염병 유행은 치명적 병원균·바이러스의 확산뿐 아니라 질병 확산과 감염 공포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 전 세계에 전대미문의 영향을 미친 코로나19 팬데믹은 아세안 국가에도 인적·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치명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초래했다.

아세안의 보건안보 위협은 △질병 확산이 용이한 환경 △질병정보의 폐쇄성이라는 지역적 특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치사율이 높은 신·변종 감염병 상당수가 아세안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발생·유행한 것은 동남아시아 특유의 식·주거문화와 관련이 있고, 높은 인구밀도는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취약 요인이다. 또한, 감염병 발생 내용과 환자 정보의 WHO 제공 및 공유를 꺼리는 질병정보의 폐쇄성은 신·변종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하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일부 아세안 국가는 글로벌 보건 문제를 정치적 주권과 연계 해석하여 공공재로서의 보건보다 국가 주권을 우선시하기도 한다. 2005년 WHO '국제보건규칙(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개정 과정에서 질병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 원칙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바이러스 주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아세안은 감염병과 위생질병 등을 포함하는 Ⅲ 영역의 보건안보 위협 대응을 위해 역내 위험이 발생한 지역과 인접국의 소지역 단위의 협의체와 같은 다자 중심 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왔다. 아세안은 WHO 동남아 지역사무소(South-East Asia WHO) 소속으로 1980년부터 아세안 보건장관 회의를 통해 보건협력 관련 협의를 지속해오고 있다. △보건 △영양 △의료인력 △의약

56) 김경숙, 박보라(2021) 참고.

품 △질병 관리 등 세부 분야의 협력 강화와 사회 경제 발전, 세계화에 따른 신종 감염병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고 있다.[57]

아세안 국가들은 2003년 사스를 경험한 이후에는 역내 감염병 체계를 위한 메커니즘을 정비해 왔다. 우선, 아세안 긴급 구호센터 네트워크(ASEAN EOC Network), ASEAN BioDioaspora Regional Virtual Cetnre(ABVC)를 설립했다. ABVC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빅데이터 분석과 이미지화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밖에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대응 관련 아세안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58]

- ASEAN Plus Three Senior Officials Meeting for Health Development(APT SOMHD)
- ASEAN Public Heath Emergency Operations Centre Network
- ASEAN Plus Three Field Epidemiology Training Network (ASEAN+3 FETN)
- ASEAN Risk Assessment and Risk Communication Centre (ARARC)
- Public Health Laboratories Network

이 중 ASEAN+3 현장 역학조사관 트레이닝 네트워크(ASEAN+3 FETN)는 코로나19 사태의 최근 이슈에 대한 정보 교환을 위한 비공식 화상회의 시리즈를 주관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들 내 기존 현장 역학조사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간 구성된 네트워크에 한·중·일 3국이 합류했다.

감염병 체계를 위한 다양한 아세안 메커니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보건안보 지수(Global Health Security Index)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들은 태국을 비롯해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전염병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역량이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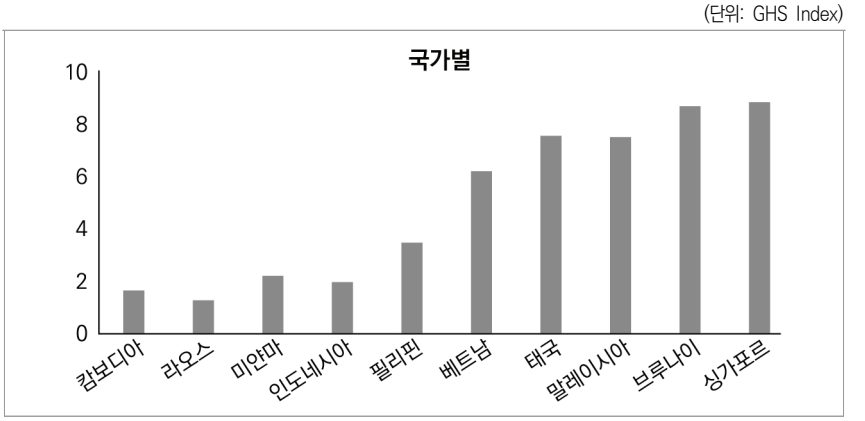
57) 외교부, 「ASEAN 개요 및 참고자료」,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6. 30).
58) 김형종(2020), pp. 21~54.

하다.[59] 코로나19 팬데믹은 아세안 보건안보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아세안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높은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위기상황 인식 및 대처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치명률이 낮았다.[60] 그러나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의료장비가 충분하지 못했고,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급증한 역내 국가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입국 통제와 봉쇄에 중점을 둔 방역조치가 실패하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였다. 국가별 방역 대응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아세안은 개별 국가 차원, 아세안 공동체 차원에서 긴급한 대응이 이루어졌으나, 한계를 보이면서 아세안과 주요 상대국 사이의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위한 진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그림 3-1. 아세안 국가별 보건의료 격차

(단위: GHS Index)



주: 사회진보지수(SPI), WHO 보편적 의료보장(UHC) 서비스 지수를 바탕으로 작성.
자료: Social Progress Imperative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9. 7. 9); WHO(2018), "World Health Statistics 2018: monitoring health for the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 8, pp. 68-7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13); UNDP, "Global Human Development Indicato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9);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Historical Dataset"(검색일: 2019. 7. 9); 문진영 외(2019), p. 66, p. 291.

59) GHS Index, "2019 Global Health Security Inde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0).
60) 김경숙(2020), pp. 1~3.

다. 사이버안보

아세안에는 스마트폰 보급과 인터넷 이용 증가, 중산층의 성장으로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확산·보급되고 있다.[61] 아세안의 후발 가입국[62]들 역시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소득과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아세안의 정보통신산업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도 연간 6% 이상의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지리적 여건 혹은 투자 부족으로 열악했던 인터넷 통신망 및 서비스가 개선되었다. 정부가 3G 혹은 4G 통신서비스를 국가 전체로 확대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구매가 급속하게 늘었고,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 접근성도 용이해졌다. 이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및 인도네시아는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여전히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ICT 분야를 포함한 인프라가 열악하다. 사이버·기술안보는 2장에서 다룬 신흥안보 위험 분류상 II 영역으로 발생과 함께 피해가 나타나는 돌발적 위험이지만, 해킹이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이 인간에 의해 유발되는 의도적 공격으로서 책임소재와 피해 복구를 둘러싼 쟁점이 첨예하게 나타나는 위험이라 할 수 있다. 아세안 지역은 최근 디지털 산업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제조 설비가 광범위하게 구축되었고, 사회 전반의 ICT 인프라가 확장되면서 사이버안보의 위협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아세안의 산업혁명과 관련성이 높은 ICT 수용성 분야에서 싱가포르

61) 제2장의 신흥안보 위험 유형의 식별에서는 사이버안보를 위협으로 식별하였지만 제3장의 아세안 신흥안보 상황과 협력 현황에서는 사이버 위협과 관련된 신기술 분야도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62)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정식 명칭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으로 1967년 8월 8일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5개국(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이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ASEAN 창립선언(방콕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결성하였고, 이후 1984년 브루나이가 가입하고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 캄보디아가 가입하여 현재의 10개국 체제가 확립되었다.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를 후발 가입 4개국으로 지칭한다.

(4위), 브루나이(17위), 말레이시아(32위)를 제외한 나머지 아세안 회원국들은 50위 권 밖에 위치하는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2017년 ICT 개발지수에서도 아세안 평균(4.95)은 세계 평균(5.11)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나 아세안 회원국의 정보통신산업은 발전 단계가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회원국은 선진국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수용하는 데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고, 심지어 저임금을 무기로 하는 경쟁력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의 증가로 아세안 지역에서의 사이버 위협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국제 해킹 세력들이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물론 업무용 이메일 공격, 피싱, 랜섬웨어, 전자상거래 데이터 탈취, 사이버 스캠, 가상화폐 절취(crypto jacking) 등을 주요한 공격 대상으로 삼으면서 사이버안보와 기술안보가 중요한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 인포데믹(infodemic) 등으로 사이버안보 의식과 인식이 약화하면서 사이버안보 및 보안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2020 인터폴 아세안 사이버 위협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아세안 인구 6억 6,000만 명 중 4억 1,000만 명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으며 대규모 데이터 유출, 랜섬웨어 공격, 크립토재킹 등 사이버범죄[63] 급증에 따른 사이버 위협을 경고하고 있다. 사이버안보 관련, 사이버 역량 분야는 기술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인력 양성 및 장비 보급 등 지속가능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사이버공격의 기술적 특성은 개별 국가 차원의 방어 역량만으로는 막아 내기가 어려운데[64] 사이버안보 중요성 증대에 비해 다자안보협력에 의한 대책이 여전히 미흡한 것이 문제이다. 강대국간 이해 대립으로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규범이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도적 공격에 대한 책임소재를 추적하기

63) Botnets, Phishing campaign, Banking Malware 등을 활용하였다.
64) Deibert(2013).

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역내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협력을 위한 공동 정책 비전인 아세안 사이버 안보협력전략(ASEAN Cyber-Security Cooperation Strategy, 2021-25)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역내 사이버안보 협의체로 아세안 정보통신 및 IT 장관(ASEAN TELMIN)회의가 있다. 사이버안보에 특화된 것은 아니지만 역내 안보를 논의하는 플랫폼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이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격 수법이 고도화,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외 국가와 다자협의체의 적극적인 관여와 협력도 필요하다.

표 3-4. 아세안 국가별 국가경쟁력 순위(2018년 기준)

국가	순위	기본 요인				인적 자원		시장				혁신 생태계	
		제도	인프라	ICT 보급	거시 경제 안정성	보건	기술	생산물 시장	노동 시장	금융 시스템	시장 규모	기업 활력	혁신 역량
라오스	112	119	99	96	110	107	105	91	94	106	100	134	117
말레이시아	25	24	32	32	1	62	24	24	20	15	23	19	30
베트남	77	94	75	95	64	68	97	102	90	59	29	101	82
브루나이	62	45	54	17	81	50	58	44	38	107	115	68	79
싱가포르	2	3	1	4	42	1	20	1	3	5	27	16	14
인도네시아	45	48	71	50	51	95	62	51	82	52	8	30	68
캄보디아	110	126	112	92	74	104	121	114	65	92	88	128	96
태국	38	60	60	64	48	42	66	92	44	14	18	23	51
필리핀	56	101	92	67	43	101	67	60	36	39	32	39	67
한국	15	27	6	1	1	19	27	67	48	19	14	22	8

주: 아세안 회원국 중 미얀마는 데이터 가용성 문제로 평가대상국에서 제외됨.
자료: WEF(2018),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5. 20); 신윤성(2019), p. 58

한편 아세안은 경제의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수용하고 대비하는 새로운 정책을 속속 발표하

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 장기화로 비대면 산업과 기술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주목받으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아세안은 정보통신 분야를 포함해 신기술 인프라가 열악하고 기술적·제도적 기반이 아직 미흡하다. 2장에서 다룬 신흥안보 위험 관리 모델 가운데 II 영역의 사이버안보처럼 위험 통제를 위한 내부적인 역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의도적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역외 정부들과의 공조나 다자협의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언택트 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아세안 각국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역량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선진국과 기술 협력을 요청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의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2018년 9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아세안 지역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공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며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65]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인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은 결국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표 3-5 참고). 우선 싱가포르는 2014년 11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장기 계획인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을 발표하였고, 총리 직속의 범정부조직인 '스마트 네이션 프로그램 오피스(SNPO: Smart Nation Program Office)'가 모든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2018년 10월

65) 2018년 9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아세안 지역회의에서 클라우스 슈바프 WEF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은 아세안 경제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 협력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고속 성장의 기회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부터 출범한 '가브테크(GovTech)'가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높은 보급률의 초고속 지능형 광대역 인터넷망을 조기에 5G로 대체하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사물인터넷(IoT), 첨단 로봇 공학, 자율주행, 사이버 보안 등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신남방경제권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시티의 아세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창설하여 주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2017년 통상산업부가 '2050 국가변환계획(TN50)'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메콩강 인근의 200만이 넘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자동화 혹은 로봇 활용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66] 말레이시아 정부는 산업고도화를 위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자, 석유화학, 기계를 중점 산업 분야로 스마트 팩토리를 적극 도입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의 입국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태국은 2016년부터 '중진국의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인 태국 4.0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태국 4.0은 정보통신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여 수출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태국정부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반하에 시장경쟁력이 높은 5개 산업과 성장잠재력 및 수입의존도가 높은 5개 신산업을 선정하여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동부경제회랑(EEC: East Economic Corridor)을 신산업 육성 지역으로 지정하고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특히 태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기술 개발과 투자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관련 빅데이터 기술과 기반 구축이 우선되어야

66) 2017년 말레이시아 제조업협회(FMM)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제조업체의 30%만이 자동화 및 로봇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8년 4월 'Making Indonesia 4.0'을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은 주로 만성적인 무역수지적자가 발생하는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자상거래와 결재가 증가하면서 내수시장분야의 빅데이터 구축과 인공지능을 통한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함께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거의 매년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조기 경보와 대응에 필요한 빅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 적용도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67]

표 3-5. 아세안 주요 국가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정책

국가별 정책	추진 방향	핵심 기술 및 산업
싱가포르 Smart Nation Initiative	- 도시국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 구축 - IoT, 클라우드, 로봇 등 지능정보기술 기반 제조업 혁신	- 3D 프린팅(제조업의 대량 맞춤화) - 로봇(인력난 해소) - 자율주행 자동차(도시교통난 해소) - 드론(드론 활용의 효율성 개선)
말레이시아 11차 경제개발계획	- 산업 자동화를 통한 높은 외국인 노동자의 의존도 완화 - 제조업 수출경쟁력 제고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 건설 및 운영
태국 태국 4.0	- 경제와 사회 전반에 ICT 기술을 적용하여 고부가가치 창출과 혁신 주도 경제	- 스마트 시티(인프라 구축) - 스마트 기업(스타트업 활성화) - 스마트 피플(인적 자본 육성) - 스마트 산업(차세대 자동차, 스마트 전자, 의료 및 관광, 농업, 식품, 로봇, 바이오화학, 항공물류
인도네시아 Making Indonesia 4.0	-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 5대 전략산업(식음료, 의류, 전자, 자동차, 소재산업)와 10대 우선 정책 과제 -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산업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기반 구축과 인공지능 활용 방안에 관심 고조

자료: 신윤성(2019),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한국 - 아세안 산업협력 확대」, p. 62 발췌 및 수정.

67) 세계은행은 2015년부터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와 대응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빅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 시범 운영 중이다.

아세안 후발 가입국으로 산업화가 낮은 수준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도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언택트 산업과 기술 부족으로 정부의 기능이 거의 마비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및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을 위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도입 및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도 비대면 산업 및 기술 보급을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의 정부 간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68]

라. 자원(에너지·식량) 안보

아세안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다. 아세안은 전 세계 상위 배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지만, 청정에너지 및 친환경 수송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중요한 개발 의제 중 하나이다(그림 3-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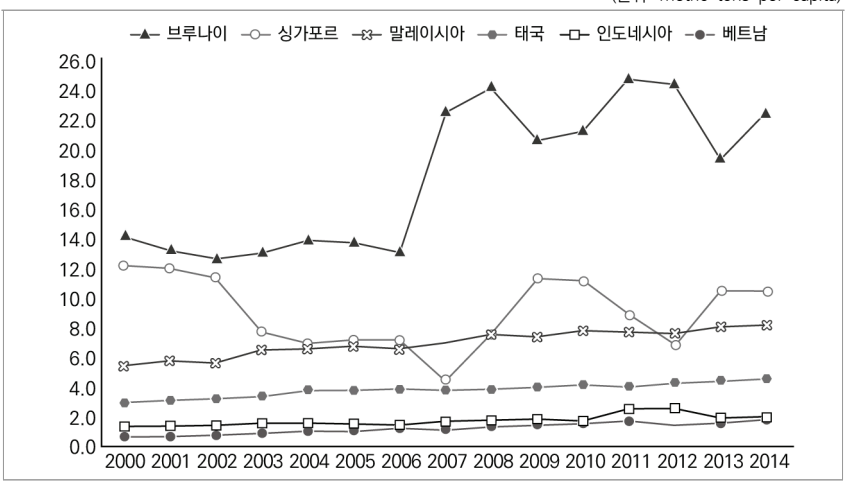
『제5차 아세안 에너지 전망(ASEAN Energy Outlook 2015-40)』에 따르면, 아세안의 발전 용량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BAU 시나리오의 경우 2015년 76%에서 2040년 71%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의 에너지 정책 역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보다 청정한 에너지원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아세안이 적극적인 청정에너지 확대정책, 즉 국가별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목표와 역내 에너지 협력 행동계획(APAEC) 2016~25에 제시된 목표인 2025년까지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23% 달성이 실현되어야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2015년 24%에서 2040년에는 55%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

68)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코로나19로 인해 강력한 봉쇄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언택트 산업과 기술 부족으로 사실상 정부의 기능이 마비상태까지 진행되었다.

가가 높고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ODA 지원을 통해 여전히 대형 화력발전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의 BAU 시나리오만으로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또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정책적 개입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69]

그림 3-2. 아세안 주요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2000~14년)

(단위: metric tons per cap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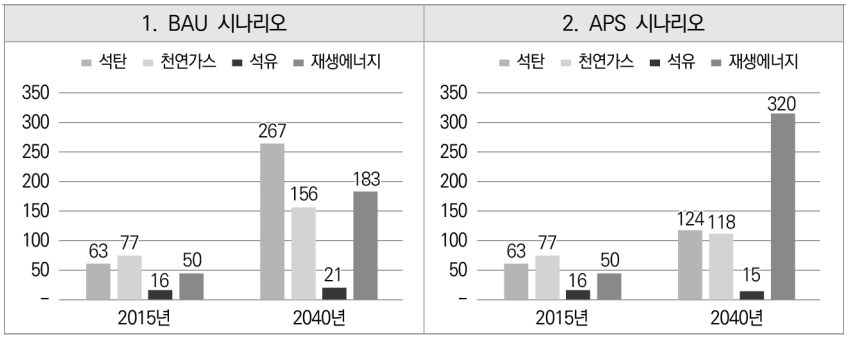
자료: 문진영 외(2019), p. 181.

아세안은 1999년 아세안 에너지센터(ACE: ASEAN Centre for Energy)를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환경을 위한 역내 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국제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ACE의 주요 프로그램은 APAEC 주요 프로그램과 일치하는데 △아세안 전력망 △범아세안 가스 파이프라인 △석탄 및 청정석탄기술 △에너지 효율 및 보존 △재생에너지 △에너지 정책 및 계획 등이다. ACE는 독일과 재생에너지 정책 및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 중이며, 일본

69) 문진영 외(2019), p. 215 재인용.

은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관련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미국 USAID는 아세안 청정에너지 분야에 5년간 7억 5,000만 달러를 조성하고 500MW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지원하기 위한 Clean Power Asia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70]

그림 3-3. 아세안의 에너지원별 발전 용량 전망



주: APS(ASEAN Progressive Scenario) 시나리오는 보다 진보적인 시나리오, 즉 APAEC 2016-25에 명시된 에너지 관련 목표(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및 보존 등의 목표)를 달성할 경우를 의미, APS 시나리오하에서 2040년 총 발전 용량은 에너지 효율 등의 개선으로 BAU 시나리오의 총 발전 용량보다 적음.
자료: ASEAN Centre for Energy(2017), pp. 68-80, 재인용: 문진영 외(2019), p. 212.

잦은 기상이변과 경제성장으로 인해 식량의 수요와 공급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식량은 이제 한 국가와 주변지역의 안보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 대두되었다.[71] 아세안 회원국들 역시 수차례 식량안보 위기를 경험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였다. 자연재해에 따른 일시적 식량 부족 상황이나 식량안보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지역협력체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도(APTERR: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이다. APTERR은 2011년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쌀 비축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비축된 쌀을 즉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70) 위의 자료, p. 216.
71) Pinstrup-Anderson(2014).

구축된 공공비축제도이다. 전체 약정물량은 78만 7,000 톤이며, 한국이 약정한 물량은 15만 톤이다.

APTERR은 2017년 미얀마 난민캠프 지원,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자연재해 피해 대응을 위해 총 1만 750톤이 사용된 바 있으며, 2019년에도 수해를 입은 필리핀에 긴급구호용으로 1950톤이 지원되어 제도의 효용성을 스스로 증명한 바 있다. 더욱이 APTERR 조약 제2호(일반 조항)에는 재난으로 인한 단기간 식량 공급의 불안정성 증가에 대처하는 수단뿐만이 아니라 향후 동아시아 식량안보 정책의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72)]

2. 한·아세안 신흥안보 관련 협력 현황

그동안 한·아세안 협력은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에 기반을 두고 추진되었다. 아세안이 가장 협력을 원하는 분야인 역내 테러·사이버·해양 안보 공동대응과 긴급사태 대응 역량 강화 분야를 중점 협력과제로 추진하였다. 특히 해양안보 공동 대응,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력, 수자원 공동관리에 집중되었다. 한국과 아세안은 2019년 11월 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보건 및 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역내 테러·사이버·해양 안보 공동대응으로는 한·아세안 국제범죄 수사역량강화센터 설립, 해양 쓰레기 공동조사 및 수거 사업, 한-메콩 생물다양성센터 구축에 합의하였다. 역내 긴급사태 대응 역량 강화로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지원, 산불재난관리센터 시범사업 및 훼손된 습지(이탄지) 복원 및 보전에 역점을 두었다.

한·아세안 협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초국경 위협에 더 비중을 두었다. 2020년 11월 12일에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변화된 국제환경

72) 박정훈(2022), p. 33.

과 아세안 국가들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7대 핵심 협력 분야로 재조정하였다. 보건의료, 5G 등 미래산업, 비전통안보 분야, 교육 및 인적 자원 개발 등 선택과 집중, 맞춤형 협력에 중점을 두었다.[73]

표 3-6. 신남방플러스 7대 중점 분야 주요 추진 사업

분야	개요	주요 사업
① 포괄적 보건 의료협력	신남방 국가들의 보건의료 역량 및 의료복지 향상 지원	• 보건의료 ODA 확대 • 의료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역량 강화 지원 • K-Health 협력단 발족 등 체계적 보건의료 협력 • 국내 보건의료 산업 진출 및 보건의료 서비스 증진 지원
② 교육모델 공유 및 인적 자원 개발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해 신남방 지역의 미래역량 개발 지원	• 정부 초청 장학 사업 확대 • 한국형 사이버대학 설립 지원 등 원격 고등교육 사업 확대 • 현지 맞춤형 기술직업교육 확대
③ 쌍방향 문화교류	디지털 신기술 활용 등 다양한 문화 및 인적 교류 활성화	• 문화콘텐츠·관광·소비 융복합 행사 활성화 • 디지털 문화체험관, 가상 현실 등 비대면 문화교류 확대 • 한·아세안 영화·문화유산 협력기구 등 새로운 네트워크 확대
④ 상호 호혜적 무역·투자 기반 구축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대응한 경제협력 강화	• 양자 FTA 등 FTA 네트워크 확대 및 내실화 • 신남방 지역 진출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유동성 등 지원 확대 • 신남방 지역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원
⑤ 상생형 농어촌 및 스마트 시티	인프라 개발, 농어촌 개발, 도시 인프라 개발 경험 및 노하우 공유	•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공유 및 한국형 스마트팜 협력 • 신남방 국가 검역행정 역량 강화 지원 • 아세안 스마트시티 및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관련 인프라 개발 협력 확대
⑥ 4차산업 분야 협력	4차산업 분야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및 디지털 전환 협력	• ICT 및 5G 등 디지털 경제협력 확대 • 산업혁신기구 및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협력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지원 확대
⑦ 비전통안보 협력 안전하고 평화로운 아시아 평화 공동체 구축	기후변화, 재난, 테러 및 환경오염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 해양 쓰레기 문제 관련 해양 환경 보전 및 역량 강화 • 사이버안보 및 초국가 범죄 대응 역량 강화 • 메콩 지역 불발탄·지뢰 제거 및 한-메콩 생물다양성센터 설립

자료: 최원기(2020), p. 6.

73) 외교부(2021. 1. 21), 「2021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p.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6. 30).

가. 환경안보

한국은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점증하는 역내 환경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을 7대 정책방향의 하나로 설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아세안 회원국과 양자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아세안 지역의 환경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2000년부터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 2002년부터 '아세안+3 환경장관회의' 등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2021년 제1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를 계기로 한·아세안 양자 차원에서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는 한·아세안 30년 협력관계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3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향후 30년간의 미래발전 비전을 제시하였다. 한·아세안 간 포용적인 탄소중립을 향한 기후변화 대응, 대기오염 공동 대응을 위한 환경 위성데이터 공유, 개도국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그린뉴딜 펀드 조성 계획 등 협력 방향을 포괄적으로 설정하였다.[74]

한·아세안 협력 성과로는 동남아 지역 대기오염 감시 능력 강화를 위해 동남아 8개국에 천리안 2B 위성 데이터 공유 및 원격지상 관측망 구축을 지원하였다. 또한 동남아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해양 쓰레기 관리를 위해 필리핀에 청항선을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 설치에 컨설팅 및 기술교육 제공을 통한 해양오염 관리 역량 제고를 추진하였다.[75]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와 '한·메콩 비전'의 후속조치로서 메콩지역과 물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9년 11월 대전에 한·메콩 물관리 공동연구센터를 개소하였다. 또한 2021년 9월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를 신설하고, 2022년 재난 관리 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아세안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였다.[76]

---

74) 외교부(2021. 9. 16), 「제1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대화 개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6. 24).
75) 최원기(2020), p. 12.

한국이 아세안에 제공한 기후변화 관련 ODA의 상당 부문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1,500만 달러의 ODA를 아세안의 온실가스 감축 또는 감축 및 적응 공통 사업에 공여하였다. 대아세안 온실가스 감축목적 ODA 주요 공여국(2013~17년 평균) 가운데 일본은 전체 공여국 지원액의 50%가 넘는 금액(7억 달러)을 아세안에 제공하였다.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EU보다 대아세안 전체 ODA 금액으로는 앞서지만 환경과 기후변화에 투입되는 자금의 규모가 작고, 전체 ODA 대비 비중도 낮은 편이다.[77]

한국은 또한 아세안 여타 지역구상과의 협력을 확대했다. 대표적인 것이 물관리 공동연구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K-Water와 미국 NASA 및 공병단이 메콩 지역 수자원데이터 역량 강화 사업을 2020년 상반기부터 시행했는데, 한·메콩 협력기금을 활용했다.

세계은행, ADB 등의 다자기구는 아세안 회원국을 상대로 재해관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믹스전환, 생물다양성, 폐기물 등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적응기금(Adaptation Fund), 기후투자기금(CIF: Climate Investment Funds), 녹색기후기금(GCF) 등 환경문제에 특화된 기금에서도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같이 다자기구 및 기금을 활용한 사업의 경우 UNEP, UNDP, ADB, 세계은행(IFC, IBRD 등), UN-Habitat 등 다양한 협력 파트너가 참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재원 조달과 기술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78]

개별 국가가 아닌 아세안 차원의 환경협력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는데, 2019년 ADB는 아세안에 1조 달러 이상의 친환경 인프라 투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ASEAN Catalytic Green Finance Facility 출범을 발표하였

76) 문재인 정부 국정백서(2022), p. 250.
77)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9. 20); 문진영 외(2019), pp. 227~228.
78) 문진영 외(2019), p. 226.

다. 해당 기금은 아세안 인프라 기금(AIF), ADB, KfW, EIB, 프랑스 개발청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OECD와 GGGI는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금융에 관한 지식 공유와 역량 배양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도 해당 기금에 3억 5,000만 달러의 협조융자와 500만 달러의 기술협력을 공약하였다. 세계은행은 2018년 일본과 아세안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이 기후 및 재해위험에 대한 금융 및 재정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Southeast Asia Disaster Risk Insurance Facility(SEADRIF)를 지원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기후변화 신탁기금(ICCTF)을 만들어 USAID, UKaid, UNDP 등과 감축, 적응, 에너지, 해양보존 등에 관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79]

재난 관리 협력에서 고무적인 것은 2021년 10월 제1회 한·아세안 재난관리위원회(ACDM+ROK, 국장급)가 개최된 것이다. 한·아세안 재난관리위원회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사회·경제·환경 자산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목표 아래, 한·아세안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대화 창구로 설립되었다. 첫 회의에서는 재난 안전 분야 협력의 실행력 확보와 평가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재난관리 장관급 회의체 신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80]

한·아세안 재난관리위원회 개최에 이어 후속 조치로 재난관리 수행계획(워크플랜)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워크플랜은 한·아세안 간 상호 합의한 24개 협력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한국의 돌발홍수 예·경보 시스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통합재난관리체계, 재난 관리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지원 등이 세부 이행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수 취약국 대상 홍수 예보 시스템 구축, 인도네시아의 산불재난관리센터 설립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목할 것은 한국이 아세안과 협력하여 재해 대응 인력을 교육하고 재해 관리를 위한 전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 및 역량 구축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은 한·아세안 협력 기금이 지원한다. 1차 5년(2020~25

---

79) 최원기(2020), p. 226.
80) 김경윤(2021. 10. 25),「신남방에 공들이는 정부…한-아세안 재난관리장관회의도 신설」,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9. 20).

년) 프로젝트의 세 가지 목표는 첫째, 지역 및 중앙 정부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둘째, 아세안 회원국의 재해 위험 관리를 개선하고, 셋째, 각국의 재해 관리 사무소가 재해 위험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에는 가상 현실을 사용하여 재해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포함해 아세안 10개 회원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해 통합 재난 관리 교육도 실행할 것이다.

아세안 재난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ASCEND: ASEAN Standards and Certification for Expert in Disaster Management)은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과제로 선정되었다. 한·아세안 인도지원조정센터는 2020년부터 현지연수 및 비대면 온라인 연수 등을 통해 한국의 정보 기술 중심 선진 재난관리 기법을 전수하고 있다. 2020~24년까지 320명을 대상으로 한 재난관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재해 관리 분야의 전문가를 위한 아세안 표준 및 인증 프로젝트이다. 재난 시 지원과 자원을 동원할 전문 인력 집단을 양성하는 것이다. 한국은 ASCEND 프로젝트에 33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으며 2012년부터 421개의 한·아세안 협력 기금 프로젝트에 총 1억 2,400만 달러를 지원했다. 교육 프로젝트는 2009년에 발효된 재해 관리 및 비상 대응에 대한 아세안 협정(AADMER)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협정에 따라 아세안 인도지원조정센터가 수립됐으며 이후 ASCEND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AADMER 실무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81]

2019년 11월 한·아세안 재난 관리 긴급대응 협력을 위한 협력의향서(Memorandum of Intent, 이하 MOI) 체결을 계기로 인도주의 차원에서 지원을 탈피해 아세안 지역 내 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공동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한·아세안 재난관리위원회에 이어 한·아세안 재난 관리 장관급 회의체가 신설된다면 고위급

81)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 「ASEAN 재난관리역량강화과정」,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9. 20).

정책 대화의 장으로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간 재난안전 분야 상호 공동협력 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한국은 아세안과 7대 핵심 분야 협력을 '아세안 포괄적 경제 회복 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Framework)'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아세안의 환경협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디지털, 보건 분야 중심으로 ODA를 확대해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공조하고 있다. 한국이 아세안 회원국 또는 대아세안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 사업 중 상당수가 재해 관리, 폐기물, 생물다양성과 같이 아세안의 환경 분야 우선 과제를 다룬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에 초점을 두고 아세안의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 동향, 우리나라의 강점을 고려한 대아세안 환경 분야 협력전략 수립과 우선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5개국이 아세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5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의 수요가 높음을 시사한다.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전기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 9번째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필리핀은 그린 인프라 투자에 매우 적극적이며, 동남아 최대 바이오매스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인 지열발전소를 위해 그린 채권 발행을 확대하고 있다.[82]

82) 한동만(2022), 「아세안의 그린 인프라 투자 동향: 필리핀 사례를 중심으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6. 29).

표 3-7. 아세안 기후변화·환경 분야 사업 목록(2019년 이후 신규)

구분	사업명	기간	자금
1	필리핀 GGGI 미마로파 낙후 농촌지역 기후 복원력 강화 지원 사업	2019~21	500만 달러
2	필리핀 팜팡가강 유역 수자원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2차 사업	2019~21	500만 달러
3	미얀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촌지도 역량 강화 사업	2019~23	950만 달러
4	미얀마 샨주(Shan State) 소수민족 마을 에코빌리지 조성 사업	2019~21	88만 달러
5	라오스 아타프주 홍수 피해 재건복구 지원 사업	2019~23	1,150만 달러
6	라오스 남능강유역 통합수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2020~24	1,100만 달러
7	미얀마 라카인 마나웅섬 2.5MW 태양광전력시스템 구축 사업	2020~22	1,000만 달러
8	베트남 탱화성 Ma강 수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2020~24	900만 달러
9	베트남 다낭시 스마트 통합도시재난관리센터 구축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 사업	2020~25	1,050만 달러
10	인도네시아 찌따룸강 유역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 2차 사업	2020~23	1,280만 달러
11	인도네시아 한-인니-동티모르 태양광 에너지 접근성 향상 사업	2020~24	1,800만 달러
12	미얀마 한-메콩 생물다양성 건립 및 인력 양성	2021~25	650만 달러
13	베트남 에너지 효율 투자 활성화 및 베트남 녹색성장계획(GGAP) 지원 사업	2021~26	620만 달러
14	필리핀 해양 쓰레기 관리 역량 강화 사업	2021~25	770만 달러
15	인도네시아 해안 쓰레기 관리정책 역량강화	2021~23	250만 달러
17	필리핀 재해경감을 위한 마닐라 통합 홍수 조기예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	2021~24	1,270만 달러
18	UNDRR 인도네시아 지역사회 기후대응 및 재난재해 회복력 역량 강화 사업	2021~23	57만 달러

자료: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2022), pp. 70~80 참고하여 작성.

표 3-8. 한·아세안 재난 관리 워크플랜

분야	내용
위험평가·모니터링	• 특정 상황에서 재난 위험평가 및 재난 시나리오 작성
	• 실시간 안전관리(생활안전지도·안전신문고), 재난 위험평가, 재난 시나리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아세안 회원국간 공유
	• IOT 센서 및 AI 기반의 재해 예측 플랫폼 소개
	• 아세안 지역 재난 관리를 위해 최신 기술 적용 재난 관리 연구 및 재난 관리 혁신기술 관련 출간물 발간
	• 기후변화 관련 위험 예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역량 구축
	• 돌발 홍수 예·경보 시스템(FFWS) 도입 지원

표 3-8. 계속

분야	내용
예방·완화	• 아세안 지역 재난 경감 및 기후변화 적응 보고서 작성
	•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를 위한 아세안 로드맵 제시
	• 아세안 도시재난 및 기후 회복력 기술 및 역량 강화를 통한 ASCN(ASEAN Smart Cities Network) 활성화
	• 재난안전 관리 분야에서 한국-아세안의 자매결연 도시 프로그램 시행
	• 비지니스 연속성 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에 대한 경험 공유를 통한 BCP 수립 지원
	• AMS(D-CAB) 프로젝트 및 관련 활동을 위한 재난위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재난위험 경감 거버넌스 강화
대비·대응	• 매년 열리는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를 통한 최신 기술 소개 및 적용 촉진
탄력적 회복	• 아세안 요청 시, 해외재난구호팀 구성 및 파견
글로벌 리더십	• 웹기반 지식관리시스템 개발·향상 지원, 아세안 회원국간 상호 학습 지원 (AHA 센터와 협력 추진)
	• 아세안 재난 관리 관리자 실무자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필요 시 초청 훈련, 훈련 전문가 파견, 한국 방문 추진
	• 재난 관리 전문가 풀을 통한 ASCEND(표준·인증) 개발 실행 지원
	• 재난 관리 전문가 풀을 통한 ASCEND framework 개발 지원
	• 아세안 재난 복구 협의체 및 포럼 개최 지원(매 2년)
	• DRR 관련, 한-아세아 공동이슈 논의, 동북아시아 포럼(연례)을 통해 학계와 연계하여 협력 방안 마련
	• AADMER 워크플랜(2021~25)를 위한 웹 기반 모니터링 및 평가 플랫폼 개발 기술 지원
	• 센다이 프레임워크 이행 등 아세안 회원국 재난전략 지원
	• 센다이 프레임워크 중간점검 및 향후 이행 우수사례 공유

자료: 행정안전부(2022. 6. 21), 「한아세안, 안전하고 지속발전가능한 아세안공동체 구축」,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 9. 17).

나. 보건안보

한국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아세안과 백신·보건 협력을 강화하였다. 아세안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출구 전략으로 '아세안 포괄적 경제 회복 프레임워크(ACRF)'를 마련하였다. 구체적

으로 △보건체계 개선 △인간안보 강화 △아세안 경제통합 확대 △포용적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한 미래 지향 등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응전략이다.[83] 한국은 코로나19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ACRF에 기반해 아세안 개별, 아세안 공동체, 지역 차원에서 양자, 소다자, 다자협력을 다양하게 전개해왔다.

이에 한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세안 국가들과 보건의료 협력을 최우선 협력의제로 설정하고, 기존 개발협력 ODA 프로그램에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보건의료 협력 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전면적으로 확대·개편하여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보건 협력 추진을 구상하였다. 한·아세안 보건 의료 협력의 가장 큰 특징은 일회적인 방역물품 제공과 같은 임의적인 지원을 넘어서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아세안의 보건의료 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향후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다함께 안전한 세상을 향한 개발협력 구상'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포괄적 긴급지원을 추진하였다. 아세안에서는 인도네시아를 4대 거점 국가 중 하나로 선정하였고, 나머지 5개 아세안 수원국에도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집중 지원을 실시하였다. 한·아세안 간 코로나19 대응 협력은 기존 한·아세안 협력의 틀 안에서 감염병 해결과 관리를 위해 직접적인 수요에 대처해왔다. 한국은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에 물적 지원, 의료인력 확보와 이들의 역량 강화, 보건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채널 확대에 기여해왔다.

한국은 물적 지원 차원에서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약 4,000만 달러 상당의 의료물자를 제공하였다. 아세안 회원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산소발생기, 백신 운송 냉장차량 등을 제공하고, 한국형 '워크스루' 코로나19 검사소 설치를 지원하고, 의료인력 역량 강화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세안이 설립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Covid-19 ASEAN Response

83) ASEAN(2020. 7. 14),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and its Implementation Pla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7. 14).

Fund)'에 총 600만 달러를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아세안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노력도 지원하였다.[84] 이 기금은 아세안 국가들의 방역·의료물품 구매, 백신 구매와 개발 등을 위한 것으로 한국이 2021년 지원한 500만 달러는 아세안 10개국에 각 50만 달러씩 코로나 진단키트와 방역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별개로 미얀마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으로 300만 달러를 지원했다. 한국은 2021년 10월 아세안 협력국인 베트남과 태국에 각각 110만 회분과 47만 회분의 백신을 최초로 공여하였다.

개발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은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한 아세안 개별국가에는 양자 협력을 기반으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 ODA 사업을 추진해왔다. 우리나라의 ODA 총액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17년을 기준으로 약 30%(연평균 4억 7,252만 달러)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OECD 공여국 중 가장 높은 편이다.[85] 주요 수원국인 라오스에서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251억 원을 들여 모자보건 중심 보건의료체계 강화 사업을 추진했다. 미얀마에서는 113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양곤주 북부 지역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ODA 사업은 그 특징상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한국은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한 아세안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인프라 구축에 이어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2020년에 584억 5,000만 원, 2021년 총 677억 5,000만 원 등 ODA 지원 규모를 매년 확대하였으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4억 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상황이 위급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에는 진단키트·PCR 등 긴급물품(54억 원 상당)을 조달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84) 문재인 정부 국정백서(2022), p. 248.

85) 아세안의 중점 협력국은 6개국으로 베트남에 연평균 2억 1,126만 달러(44.7%)가 집중되었고, 뒤이어 캄보디아(14.5%), 필리핀(11.4%), 라오스(10.4%), 인도네시아(9.7%) 등의 순이었다. 문진영 외(2019), pp. 114~132.

를 통한 금융 지원도 꾸준히 진행하였다. 2020년 필리핀과 캄보디아의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해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긴급대응 프로그램 차관을 승인했다. 필리핀과 캄보디아는 코로나19 대응체계 정비와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에 EDCF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자금 집행을 완료했다. EDCF로 원조를 받은 아세안 국가들은 2021년 8월 말 기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6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에 총 170건, 71억 2,500만 달러를 지원했는데, 이는 EDCF 전체 승인액 187억 2,700만 달러 중 38.05%를 차지한다.

아세안의 보건의료 인적 역량 강화도 지원하였다. 의료인력 확보와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연수 프로그램인 '이종욱 펠로십'을 가동하고 감염병 연수과정을 만들었다. 비대면 의료연수 플랫폼(MIKA e-class)을 구축했고, 비대면 시대에 맞춰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등 의료 교육의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울였다.

또한 한국은 아세안과 보건 네트워크 구축, 협력 채널 확대에도 기여했다.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당시 보건의료 분야 대화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하였고, 2020년 8월 한·아세안 보건의료 대화채널을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이른바 'K-헬스(Health)'를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86] 2022년 5월에는 제1차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87] 지속가능한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88]과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을 위한 보건안보 등 한·아세안의 미래 보건 분야 협력을 논의했고, 미래 보건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한국과 아세안 간에는 공식 대화체

86) 박미영(2021. 12. 7), 「코로나 위기서도 보건의료 ODA 16% 확대 '포용적 협력' ['한국경제 新동력' 아세안]」,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9. 5).

87) 첫 회의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의장국을 맡았고, 앞으로 격년마다 개최될 예정이다. 제2차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와 제10차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는 한국과 라오스가 공동의장국으로서 2024년 라오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88) 보편적 건강보장이란 모든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예방 및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제64차 WHO 총회 시(2011년 5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계가 없었는데 대화채널 신설로 지속적인 협의체계가 구축되었다. 한·아세안 간 보건 분야 고위급 정례 대화채널은 양자 관계가 더 공고해지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아세안 외교의 성과로 볼 수 있다.[89]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아세안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협력해왔다. 한국은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해 OECD 가입국과 비교하여 평균 이상의 건강성과[90]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한국의 건강보험제에 대한 협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회원국들에 정책자문(컨설팅)과 기술협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정책공유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한·아세안 보편적 건강보장 국제 정책 연수(2022 ROK-ASEAN UHC Int'l Training Course)'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 8월 8개국의 건강보장 관련 정부 관계자 21명이 비대면 라이브로 참여했다. 한국의 건강보장제도에 대한 전반의 이해뿐 아니라 아세안 각국의 발전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있다.[91]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2019년 3월 베트남과 보건의료 양해각서 개정 체결 이후 베트남 의료인 면허시험 도입, 건강보험 운영 시스템 등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의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해서도 협력 사항을 논의하였다. 캄보디아는 현재 HSP3(Health Strategic Plan 3) 2016-20에서 전염성 질환 감소와 공중보건체계 개선 등을 목표로 설정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2012~15년 제1차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에서 보건의료는 4대 중점협력 분야로 선택되어, 전체 무상재원의 20%가 투자되었다. 특히 모자보건 증진 사업(2011~21년, 2,100만 달러 규

89) 문재인 정부 국정백서(2022), p. 248.
90) 2017년도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8명(OECD 평균 3.8명), 기대수명은 82.7년(OECD 평균 80.7년)이다. OECD Health Statistics(2019).
91) 한국강사신문, http://www.lecturernews.com.

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수행), 앙두엉병원 이비인후과 역량 강화 사업(2018년 이후, 800만 달러 규모, 한국국제협력단 수행) 등을 추진하면서 캄보디아 보건·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양적 향상에 기여해왔다. 모자보건 분야에는 지난 2010~14년 기간 동안 2,870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또한 한국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세계은행과 다자간 협력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의 지불인증기관(PCA: Payment Certificate Agency)[92]에 한국의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와 데이터 활용 방안을 전수하였으며 후속 사업에 대해서도 협력하고 있다.[93]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지난 2017년 11월, 의료산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2018년 12월, 양국은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한-인도네시아 의료산업 협력 방안 실행 계획을 이행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8개 분야로 나누어진 실행계획에는 안정적인 보건의료를 위한 의료·보건 기반 시설 확충이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투자 및 협력 종목은 종근당에서 종양용 멸균 주사와 항암제를, 동아제약에서 진공 채혈 튜브와 수술용 마스크, 간호사 모자, 일회용 가운, 수술용 커튼, 신발 커버 등을 지원하고 있다.[94]

라오스와는 2019년 3월, 라오스 보건부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이 민간기업인 KT와 함께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사업 업무협약'이라는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사기업인 KT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과 함께 타국 보건기관과 사상 처음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추후 KOFIH가 주최한 콘퍼런스에서는 해당 협약이 민관협력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

92) 캄보디아 정부는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해 빈곤층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건강형평성기금(Health Equity Fund)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진료비 심사를 위해 한국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모델로 한 PCA를 설립(2017년 9월)하였다.
93) 보건복지부(2019. 8. 30), 「아세안 10개국과 보건의료 협력 강화」,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9. 7).
94) 한-아세안센터 블로그, https://blog.naver.com/akcsns/221883933973(검색일: 2022. 9. 7).

고, 라오스 국민들에게 맞춤형 메시지를 발송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등 감염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수 사례로 평가받기도 하였다.[95]

또한 한국은 한국식 경제발전경험 공유 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에 코로나19 대응 경험 전수를 연계했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는 2022년도 국가개발계획에 코로나19와 신종 감염병 대응·대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면서 한국에 정책자문을 긴급 요청했다. 정부는 자문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한국은 2022년 하반기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교육 개시(7월), '세계바이오서밋(10월)', 'GHSA 장관급 회의(11월)', '백신협력포럼(12월)'을 개최하는 등 보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96]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아세안+3 협의체를 통해 역내 보건협력에도 본격적으로 참여하였다. 2019년 8월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에서 아세안+3 국가의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97]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아세안+3 보건개발 고위급 회의, 아세안+3 보건장관 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등을 통해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 설립 △역내 필수 인력 이동 등 필수적인 상호 연계성 유지로 경제위기 충격 최소화 △감염병 관련 정보 공유 △필수 의료용품 비축제 신설 등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위기상황에서 지역 협력이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분수령이 되었다. 초국가 위기 대응과 피해 최소화, 빠른 회복력을 위해서는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2020년 4월 개최된 아세안+3(한중일) 특별화상정상

95) 위의 자료.
96) 외교부(2022. 8. 4),「박진 장관, 제23차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0. 7).
97) ① 아태 지역 신종 감염병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전략을 통한 국제 보건 규약 이행 역량강화 ② 만성질환 위험요소 대응 ③ 양질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 ④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등 협력의 내용이 담겨 있다.

회의에서 아세안+3 차원의 연대 강화와 정책 공조를 위하여 3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즉 ①방역·의료물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②각국의 축적된 방역 정보와 임상 데이터를 적극 공유·활용하며 ③경제·인적교류 등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98] 또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대한 기여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아세안 차원의 '의료물품 비축제도(ASEAN Regional Reserve of Medical Supplies)'를 아세안+3 차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2022년 8월 제 23차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도전에 대한 공동대응(Addressing Challenges Together)'하 팬데믹 이후의 경제회복 및 보건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은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 기여 및 'ACT-A'[99] 3억 달러 추가 공약, 향후 역내 백신 생산 역량 강화 등 미래 감염병 대응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임을 재강조하였다.

다. 사이버안보

한국은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의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ICT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는 아세안 국가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이 지역으로의 우리 관련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또한 아세안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경제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 성장 분야에서의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과학기술협력센터·표준화센터·산업혁신기구·금융협력센터·ICT 융합빌리지 설립 추진, 스마트 시티와 연계성 증진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2021년 7월 부산에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98) 문재인 정부 국정백서(2022), p. 248.
99) 코로나19 기초보건기술의 개발, 생산 및 공평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출범한 국제공조체제로 2020년 4월에 발족하였다.

를 개소하여 5G 기술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의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아세안과 제도화된 미래산업 협력을 추구해나가기 위하여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과학기술협력센터,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등을 설립하기 위한 협의들도 진행하였다.[100] 또한 한국은 2022년 6월 싱가포르와의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s) 협상을 개시했다.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ICT 인프라 구축 등 기술협력을 포함해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보통신 인프라 수요가 확대되면서 아세안도 5G 인프라 구축을 포스트 코로나 이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다. 2018년부터 통신장비 시장에 진출한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플랫폼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은 한국도 개발 및 적용의 초기 단계로 기술 개발 단계부터 협력을 통해 기술 표준을 마련하고 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 사업의 확대는 그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한편 아세안의 저개발국은 세계은행이나 ITU 등을 통해 한국의 사이버 분야 전략 및 정책 수립, 법제도 개발, 훈련 및 인력 양성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주기를 희망하므로 ODA 등 사업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101] 현재 한국은 아세안의 컴퓨터 침해사고 대응팀(CERT: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글로벌사이버보안협력네트워크(CAMP: Cyber Security Alliance for Mutual Progress), 글로벌정보보호센터(GCCD: Global Security Center for Development)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주요국의 아세안 정책과 연계 협력을 강화했다. 2021년 한·미

100) 문재인 정부 국정백서(2020), p. 249.
101) 김소정(2022).

정상회담 후속조치 일환으로 아세안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이 협력하여 아세안 대상 침해사고 대응 교육 사업을 실시하였고, 양국의 개발협력 기관인 우리 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과 미국 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양측의 개발협력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였다.[102]

한국은 아세안의 가장 오랜 대화상대국인 호주와 연계협력을 적극 추진하였다. 2021년 2월 한-호주 국장급 아세안 정책대화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6월 한-호주-아세안 백신포럼을 개최하였다. 2021년 12월에 개최된 한-호주 정상회담 계기 양국은 한-호주 '동남아 디지털 협력 이니셔티브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동남아 해양 연계성 강화를 위한 포럼을 양국이 함께 개최하기로 하였다.[103]

미·중 갈등과 진영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세안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미·중 선택이 아니라 균형과 독자적 가치사슬을 고려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사이버안보 협력과 규범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이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역내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1994년 출범시킨 다자간 정치·안보협의체인 ARF 차원에서 사이버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104]

한·아세안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인 선진 ICT 기술에 기초한 협력과 경험 공유도 중요하다. ICT 기반 재난·생태환경 개선을 통해 아세안 지역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선순환 구조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신종 감염병 대응 역시 ICT를 활용한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경보-대응-회복 관리 시스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 방역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아세안질병통제관리센터의

102) 위의 자료, p. 251.
103) 위의 자료, p. 252.
104) 김상배(2019) 참고.

구축 및 지역 백신 협력기구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안보 분야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사이버안보정보센터 설립 등을 주도해 사이버 규범의 정립, 교육훈련 및 연수 실행 등을 통해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자원(에너지·식량) 안보

한국은 아세안 회원국 대표단과 기존에 구축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아세안 양측의 에너지 안전 관련 산업의 동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2021년 11월에는 제4차 한·아세안 에너지 안전정책 포럼이 개최[105] 되었다. 이는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여기에서 '아세안 국가의 에너지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은 LPG 배관망 사업 및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전력의 안전관리 모델을 아세안 국가에 소개하였다.

한·아세안 에너지 분야 협력 사업을 살펴보면,[106] 첫째, 온실가스 감축 사업(한국에너지공단-ASEAN Centre of Energy)이다.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정책/경험 공유를 통한 아세안 회원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2021~25)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를 대상으로 산업/수송 부문 에너지 효율 정책 컨설팅, 신규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역량 강화 워크숍(2021. 6. 28~29, 1차)을 진행하였다. 주요 성과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의 에너지효율등급제도 도입을 지원한 것이다.

둘째,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이다. 정책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워크숍), 정보/기술 교류(포럼)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아세

10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 11. 25),「제4차 한·아세안 에너지 안전정책 포럼 개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0. 7).
106) 박재구(2021. 9. 17),「산업부, 'EAS 및 ASEAN+3 에너지장관회의' 참석」,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10. 7).

안 국가 에너지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한국의 「가스 3법」을 기반으로 베트남 최초 「가스법」 제정을 지원한 것이다.

셋째, 한·아세안 원자력 협력[107]이다. 2007년 11월 아세안+3 정상이 합의한 '원자력 협력 강화'의 후속조치로서 한국은 2009년부터 3년간(총 15억원)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원전 도입 기반구축을 위한 인력 양성 사업'을 실시하였다. 해당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연간 50명 내외 인력을 원전에 도입하고, 운영 경험 등을 전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넷째,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이다.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협력 강화를 지원하였다. CDM 활성화 지원 사업이란 2008년 하반기부터 아세안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투자환경 평가 등 CDM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과 공동, 또는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유엔으로부터 감축실적을 인증받는 것이다. 사업 종류로는 신재생, 에너지효율 개선, 연료전환(화석→청정연료) 사업 등이 있다.

다섯째, 아세안 플러스 탄소대화 신설[108]이다. 2019년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탄소가격 관련 정책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한·아세안 탄소대화' 신설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워크숍을 통해 한국, 아세안, 유럽연합에서 시행 중인 탄소가격제 관련 경험과 동향을 공유하고 온실가스 감축 협력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하여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여섯째, '한·아세안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지원' 사업이다. 2019년 한국에너지공단-아세안에너지센터 '에너지 및 기후 협력 이니셔티브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109] 하였다. 양 기관은 2014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협력 사업을

107) 권영일(2008. 8. 11), 「ASEAN과 '원자력-기후변화' 협력 강화」,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9. 15).
108) 「한-아세안 탄소대화 워크숍 개최」(2020. 11.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9. 15).
109) 정형우(2019. 8. 20), 「에너지공단, 아세안 10개국 에너지·기후 협력 이니셔티브 개발 나선다」, 온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보유한 해외협력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세안 10개국의 경제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한국은 협약 체결을 계기로 아세안 국가의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할 예정이다. 2017년부터는 미얀마와 라오스에 가전기기 에너지효율등급제도가 도입되도록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아세안 대상의 에너지 ODA를 지원하고 있다.[110] 사업 시작연도를 기준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동안 아세안 지역 에너지 ODA 사업은 총 22건이었다. 그 가운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아세안 지역에 지원한 에너지 ODA 사업이 총 18건으로 그 이전의 7년 동안에 22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수이다. 아세안 대상 에너지 ODA 사업 내용도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2017년 이전에는 광해 복구, 송전망 구축, 태양광 발전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최근에는 사업 내용이 가스 수송망, 폐기물 에너지화, 에너지 효율, 친환경 조명, 스마트 시티, 친환경 에너지 타운, 에너지 자립형 마을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IoT를 활용한 기술 거점 센터 구축 사업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에너지 ODA 사업에 접목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에너지 ODA 지원 중 프로젝트 성격의 사업으로는 에너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이 대표적이다. 에너지 접근성 개선 사업은 전력과 같은 현대적 에너지의 공급이 미치지 못하는 저개발 지역에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하여 현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이라는 ODA의 기본 정신에 잘 부합한다.

한국은 신남방정책 추진 이전부터 에너지 접근성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 접근성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표 3-9 참고). 사업 대상국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총 6개국

인 기사(검색일: 2022. 10. 7).

110) 정웅태, 유학식(2020) 참고.

이다. 에너지 접근성 개선 사업은 에너지 접근성이 낙후된 국가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신남방 지역에서는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와 같이 에너지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 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같이 산업화 수준은 중진국 수준이라도 농촌, 도서 및 산간 등 격오지에서 에너지 접근성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해왔다.

한국이 시행한 에너지 접근성 개선 사업은 소규모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독립형 전력 공급 사업이 많았다. 또한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과 같이 작은 규모의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한국은 2000년대부터 아세안 국가와 에너지 분야 양자 협력채널을 구축하였으며(표 3-10 참고), 역내 지역 구상과의 에너지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표 3-11 참고). 한국은 아세안 에너지장관회의(AMEM: ASEAN Ministers on Energy Meeting),[111] 아세안+3 에너지장관회의(AMEM+3), EAS 에너지장관회의(EAS EMM: EAS Energy Ministers Meeting), 아세안+3 고위에너지관리회의(SOME+3), EAS 고위에너지관리회의(EAS SOME) 등에 매년 참석해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의견을 회원국들과 교환하고 있다. 아세안+3 회의에서 한국은 주로 한·아세안 이전 사업, 한·아세안 에너지 안전 포럼, 캄보디아 피코그리드 빌리지 사업(태양광) 등 한·아세안 에너지 협력 추진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2018년 EAS 에너지장관회의시 산하 협력 실무그룹 중 하나인 RAPG(Renewable and Alternative Power Generation, 재생 및 대체 발전 분과) 실무그룹(WS) 공동의장직을 브루나이와 공동으로 수임하기도 하였다.

111)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아세안 에너지장관회의(AMEM), www.mofa.go.kr(검색일: 2022. 8. 5).

표 3-9. 한국이 시행한 에너지 접근성 개선 사업(2014~20년)

(단위: 억 원)

시작 연도	종료 연도	총 사업비	대상 국가	사업명
2014	2014	0.64	베트남	베트남 남중앙 지역의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의 접근성 향상 (2차 사업)
2014	2015	1.00	캄보디아	적정기술을 활용한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 저소득층 에너지 개발 지원 사업(2차 사업)
2014	2018	38.19	미얀마	미얀마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소외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
2015	2016	0.63	베트남	하띤(Ha Tinh)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와 농업관행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업스케일링 모델
2015	2016	2.57	캄보디아	비전력가구를 위한 혁신 SHS(Solar Home System) 기술
2017	2018	35.00	필리핀	필리핀 배전 승압 지원
2018	2020	37.42	라오스	라오스 에너지 자립형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2019	2021	57.50	미얀마	미얀마 에너지 자립형 마을 구축
2019	2021	8.81	미얀마	미얀마 샨주 소수민족 마을 에코빌리지 조성 사업
2019	2021	66.03	캄보디아	캄보디아 마이크로그리드 및 충전소 보급 지원
2020	2022	110.00	미얀마	미얀마 라카인 마나웅섬 2.5MW 태양광 전력시스템 구축 사업
2020	2024	198.00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한-인니-동티모르 태양광 에너지 접근성 향상 사업 (UNDP)

주: 총사업비는 승인액 기준이나, 일부 자료의 미비로 * 표시된 금액은 집행액을 사용함. 집행액은 승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정웅태, 유학식(2020), p. 88.

한국은 지난 5월 P4G 정상회의 시 개도국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협력 확대를 약속했음을 언급하면서 아세안의 수상 태양광 확산을 위한 역량 강화 세미나(8월 26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관), 브루나이 풍력발전 타당성 조사(2020~22,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등을 포함해 향후에도 에너지 수요 관리, 스마트전력망 구축 및 실증, 재생에너지-에너지 저장 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연계 등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회원국들이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나갈 것을 밝혔다.

최근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이는 분야는 재생에너지(특히 태양광) 보급, 기후

복원력 증진과 자연재해 대책, 가뭄 지역에서의 식수 공급 등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분야이며, 특히 동남아는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큰 취약성을 보이는 지역이다. 기후변화 분야 ODA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과 저탄소전략의 수립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난한 개도국의 경우 당장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폭염, 가뭄, 태풍, 홍수, 폭설, 한파,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의 인자들에 대한 적응과 회복력 증진 등의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아세안 국가와의 에너지 협력 의제도 다양화되었다. 기존에는 에너지 정책 전반 및 석유, 가스와 같은 정통 에너지원이 양자협력의 주된 의제였지만, 에너지 안전 관리, 재생에너지, 에너지 기술, 마이크로그리드 등으로 범위가 확장되었다. 현재 정부간 양자협력을 통해 발굴된 협력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정부 산하 유관기관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표 3-10 참고).

표 3-10. 한·아세안 국가와의 에너지 협력 의제

국가	협약명 (체결 일시)	협약 대상	주요 내용	주요 성과
인도네시아	에너지 포럼 및 가스 실무그룹 (2007)	석유가스청	전력, 신재생 에너지, 안전 관리 시스템, 공동 R&D 사업 발굴 및 석유·가스 협력	정례회의 개최
	석유·가스부문의 포괄적 협력 MoU (2015.10)	에너지 광물자원부	석유·가스 개발 사업 협력	석유가스 상·하류 사업 협력 강화 및 신규 사업 발굴 협력
	에너지 안전 관리 분야 협력 MoU (2016.9)	석유가스청	한국형 에너지 안전 관리 시스템 이전 등	에너지 안전 관리 현지 워크숍 개최
싱가포르	에너지 기술 공동연구 및 교류 협력 MoU (2018.7)	통상산업부	에너지 기술 공동연구	공동연구 추진 (2019.11~)

표 3-10. 계속

국가	협약명 (체결 일시)	협약 대상	주요 내용	주요 성과
라오스	친환경 에너지 타운 사업 협력 MoU (2016.9)	에너지 광산부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라오스 자립형 친환경 에너지 타운(3개소) 조성 (2018.3~2020.12)
베트남	한-베트남 에너지 분과 위원회 (2012)	산업무역부	전력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분야 정책 교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례회의 개최
	재생에너지 협력 MoU (2018.3)		재생에너지 교역 촉진, 기업 애로사항 지원	한화에너지 태양광 100MW 준공 (2019.6)
	에너지 안전 관리 협력 MoU (2018.6)		전기 가스 설비 안전검사 기술 공유	베트남 공무원 대상 도시가스 안전 관리 교육
필리핀	에너지 협력 MoU (2018.6)	에너지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안전 분야 협력	한-필리핀 에너지 협의회 개최 논의
	재생에너지 보급 협력 MoU (2018.6)	국방부	필리핀 국방부 유휴 부지 재생에너지 보급 협력	재생에너지 보급 협력 이행 약정 체결 (2019.10)
캄보디아	마이크로그리드 협력 MoU (2019.3)	광물 에너지부	마이크로그리드 활용 전력 공급설비 및 배터리 충전소 보급	농촌 마이크로그리드 및 충전소 보급 사업 (21개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자료(2019년 11월 기준); 정웅태, 유학식(2020), p. 97 재인용.

2021년 EAS 및 ASEAN+3 에너지장관회의[112]에서는 한국이 참여하고 있던 ASEAN+3/EAS 등의 다자협의체를 통한 아세안 대상 에너지 협력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다자협력 활동도 강화되고 있다. 2009년부터 ASEAN+3에서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협력 사업을 지속하면서 2017년부터는 아세안 국가와의 에너지 안전 관리 정책 공유 사업을 추진해왔다. EAS에서는 2018년부터 브루나이와 공동으로 '재생 및 대체에너지 발전 워

112) 박재구(2021. 9. 17), 「산업부, 'EAS 및 ASEAN+3 에너지장관회의' 참석」,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10. 7).

크스트림'의 공동의장국을 수임하고, EAS 회원국을 대상으로 태양광, 풍력 발전 사업 타당성 조사, 재생에너지와 ESS 보급 확대를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표 3-11 참고).

표 3-11. 지역 다자협의체를 통한 한·아세안 에너지 협력 사업

협의체	사업명	사업 주관기관	주요 사업 내용
ASEAN+3	온실가스 감축 협력 사업 (2009년~)	한국에너지공단, 아세안에너지센터 (ACE)	아세안 지역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현지 워크숍, 초청 연수, 정책 컨설팅
	한국형 에너지 안전 관리 시스템 이전 사업 (2017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형 에너지 안전 관리 노하우 전수를 위한 연례 에너지 안전 포럼 개최 및 컨설팅
EAS	재생 및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 (2019년~)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아세안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풍력·태양광 발전 타당성 조사 시행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자료(2019년 11월 기준); 정웅태, 유학식, p. 98 재인용.

코로나19로 인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식량안보 우려가 커졌다. 그에 따라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의 식량 위기 개선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ASEAN+3 식량안보정보시스템 구축 협력 사업(AFSIS: Asean Food Security Information System)[113]을 추진했다. 아세안 국가별 식량안보정보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식량안보 분야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행정 효율화 및 아세안 식량안보에 기여할 목적으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대상 국가로 진행되었다. 2014년부터 3년 단위의 3단계 사업을 시작하였는데,[114] 지원 규모는 총 110억 3,000만 원이다. AFSIS 협력 사업은 2014년부터 아세안 역내 식량안보 제고를 위해 아세안 6개국 대상 ICT 기반의 국가농식품정보시스템(NAIS: National Agri-food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고 대상국

113) 농림축산식품부(2021. 9. 13), 「농식품부 지원 아세안 식량안보정보시스템 OECD 공공부문 혁신 우수사례 선정」,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 10. 7).
114) 농업생산정보(1단계, 2014~17)-유통정보(2단계, 2018~21)-예측모델(3단계, 2022~).

관계자들의 ICT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농식품부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이다. 2017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에 착수하였다. 아세안 국가별 국가농식품정보시스템 구축 지원은 물론 농업분야 ICT 인적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및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3-12. 아세안 6개국 대상 식량안보정보시스템 구축 협력 사업(2014~26년)

분류	1단계(Production)				2단계(Consumption/Price)				3단계(Forecasting/EWI)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26
대상 국가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1개국	2개국	2개국	1개국	2개국	2개국		2개국	1개국	2개국	1개국	1개국
주요 내용	• 저개발 6개국 식량생산정보 시스템 구축(생산량 중심, 지방↔중앙 통계행정 전산화) • 저개발국 공무원 인적 역량 개발(AFSIS 초청연수, 시스템 사용자 현지연수)				• 저개발 6개국 식량유통정보 시스템 확대 구축(재고/가격/수출입 정보 중심, 모바일 구축) • 저개발국 공무원 인적 역량 개발(AFSIS 초청연수, 시스템 사용자 현지연수)				• 저개발 6개국 식량 예측 시범 사업(전략작물 생산 예측모델 구축, 모니터링) • 저개발국 공무원 인적 역량 개발(AFSIS 초청연수, 시스템 사용자 현지연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1. 9. 13),「농식품부 지원 아세안 식량안보정보시스템 OECD 공공부문 혁신 우수사례 선정」,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 10. 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 선정」,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1. 9. 13).

코로나19,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역내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3(APT) 비상 쌀 비축제도(APTERR)를 실시하였다.[115] APTERR은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역내 식량안보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동 대응하는 데 유용한 역내 다자 거버넌스로서 기능하였다. 2020년 4월 특별 APT 정상회담에서 아세안+3 정상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식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APTERR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협의하였다. 한국은 코

115) 농림축산식품부(2018. 10. 12),「아세안과 한·중·일 농업장관, 비상 쌀 비축제(APTERR)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 10. 7).

로나19,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역내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APTERR를 통해 쌀 600톤을 미얀마에 긴급 지원하였다. 한국은 APTERR 무상원조(Tier 3) 프로그램에 따라, 2017년 미얀마(500톤)와 캄보디아(250톤)에 총 750톤의 쌀 지원을 시작으로 2018년 3월에는 베트남 태풍 피해 이재민에 쌀 1만 톤을 긴급구호용으로 지원했다. 태풍 손띤(Son-Tihn)으로 피해를 입은 라오스와 폭우로 인해 약 18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미얀마에도 지원했다.[116]

2021년 제21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117]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식량안보 대응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농업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 활성화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한국 농식품의 수출 확대 및 기업 진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2016~25 아세안+3 협력전략'에 따른 기존 협력 사업[118]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탄소 중립 등 저탄소 경제, 디지털 기술 협력 등 신규 협력 사업의 추진 계획을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은 아세안 개별 국가 차원에서 식량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농식품정보서비스(NAIS)를[119] 실시하였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아세안 국가의 식량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농산물 품목의 생산, 유통 정보를 제공하는 NAIS를 2019년 베트남,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구축 완료하고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 서비스는 농업통계 제공과 인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ODA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AFSIS 사무국을 통해 한국에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2014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까지 1단계 구축을 완료해 6개국의 주요 품목 생산통계를 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구축한 시스템

116) 「아세안 한·중·일 농업장관, 비상 쌀 비축제(APTERR) 지속 지원」(2018. 10. 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9. 1).

117) 농림축산식품부(2021. 10. 28), 「농식품부, 제21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참석」,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 9. 1).

118) 한국 농정성과 확산사업(KAPEX), 산림협력(AFoCO), 식물검역 및 농산물 안전관리초청연수, 스마트팜 지원,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의체 등 9개 협력사업이 있다.

119)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9. 12. 16), 「아세안 국가들의 식량안보 지원을 위한 국가농식품정보시스템 유통정보 서비스」,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22. 10. 7).

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적 역량 개발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는 초청연수와 현지연수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초청연수는 국가별 실무자급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사례를 공유하고, 관리자급을 대상으로는 스마트농업 등을 주제로 맞춤형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현지연수는 시스템 실수요자의 확대를 위해 국가별로 현지에서 시스템 이해 및 활용 방법 등 실습교육을 하며 운영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 중 농업 ODA 대상국[120]은 6개국으로, ODA 대상이 되는 저개발국은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이다. 아세안 국가의 인구와 경제 규모, 발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협력관계 유형별로 교류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국은 아세안과 식량안보 협력을 위해 아세안 국가의 식량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보고서 발간, 인적 자원 역량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한·아세안, 한·아세안 개별 국가, 지역 구상과 협력을 강화해나감으로써,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활성화 기반을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우리 농식품의 판로 확대 및 기업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소결

아세안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다. 또한 아세안은 △신·변종 감염병 △바이오안보 △식품안전 △비전염성 만성질환 및 고령화 등에 따른 보건안보 위협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의 증가로 아세안 지역에서의 사이버위협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에서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한·아세안 협력은

120) 허 장(2018), pp. 11~14.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에 기반을 두고 테러·사이버·해양 안보 공동대응과 긴급사태 대응 역량 강화 등 아세안의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의 기존 아세안 협력은 인도주의적 협력이나 경제적 협력 사업에만 집중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아세안의 핵심적 이해인 신흥안보 협력에 소홀하였다는 지적이 많았다.[121] 인도적 경제적 성과에만 집중하며 신흥안보 협력 전반에 대한 안보 전략적 접근이 아닌 개별 신흥안보 이슈 문제에 대한 단기적 해결에 집중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기후변화·환경 분야 사업 목록이나 아세안 포괄적 경제 회복 프레임워크 등을 통하여도 알 수 있다.

한·아세안 신흥안보 협력은 국가안보 전략에 바탕을 둔 외교안보 전략의 하나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정 정부나 정권 차원에서 접근하여 단기적 성과를 가져오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서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흥안보 위험으로부터 아세안이 회복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신흥안보 이슈의 안보화 과정에 따른 적절한 협력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중 경쟁에 따른 진영화의 가속화와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가치 증대라는 안보 환경의 변화는 물론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고려 또한 반영되어야 한다.

신흥안보 이슈가 전 지구적 문제이고 아세안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한국과 아세안의 신흥안보 협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양자 중심의 협력을 다층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한·아세안 신흥안보 양자협력은 물론 지역 기구와 아세안 회원 개별국들과의 다자협력에 더하여 역외 세력들과의 협력 확대도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신흥안보 이슈의 안보화 과정 단계를 고려하여 협력의 방식과 내용을 선택할 필요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

121) 최인아 외(2020), p. 323.

제4장

한·아세안 신흥안보 협력 발전을 위한 모델 제안

1. 협력의 추진 원칙 및 전략
2. 신흥안보 분야 對아세안 협력 모델 구축
3. 구체적 협력 방안의 제안

1. 협력의 추진 원칙 및 전략

가.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

1) 코로나19와 미·중 경쟁에 따른 진영화 된 신흥안보 환경

냉전 붕괴 이후 세계의 안보 환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단극체제하에서 지구화와 정보화로 사람과 물자 및 정보가 자유롭게 이동하게 됨에 따라 전 세계적 분업체계를 형성하면서 발전하고 있었다. 1990년대 이후 세계 주요국은 '사람과 함께하는 성장(People with Growth)'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하에 인간안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개념을 국제기구와 국제 레짐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다.[122] 그렇지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으로 전 지구적 분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기구와 레짐을 통한 이상기후, 신종 감염병, 사이버공격 등과 같은 전 지구적 문제들에 대한 통제는 그 가능성을 상실하였거나 통제 가능성에 대한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극명하게 드러났다.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주요국들은 국제기구와 제도에 따른 협력과 조정보다는 국경 봉쇄와 자국 우선주의 방역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였다. 코로나19로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차단되면서 세계화와 지구화의 후퇴 및 반세계화 정서가 부각되었으며 국제 제도와 레짐 또한 무력화되었다.[123] 글로벌 무역의 감소와 공급망 붕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국제교역과 민생경제의 침체도 가져왔다. 코로나19는 1990년대 이후부터 국가들이 수용하고 익숙해진 주권 약화의 허용, 세계화, 다자주의, 비영토성은 물론 미국의 리더십 하에 발휘되던 상호작용에서 벗어나, 미국의 리더십 약화를 배경으로, 주권 자국

122) 오일석, 장세호, 김경숙(2021), p. 17.
123) 김상배, 이승주 엮음(2022), p. 15.

우선주의, 영토성을 강조하는 상호작용 방식을 재등장시켰다.[124]

1990년대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에서 비롯된 지구화와 정보화의 최대 수혜 국가는 세계의 공장이라 일컬어진 중국이었다. 비약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서구 진영의 기대와는 달리 민주화가 진행되지 않은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독자적인 특성을 유지하면서 양적인 경제성장은 물론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미국의 패권질서를 위협하고 있다.[125] 중국의 GDP 규모는 이미 미국의 75%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2027년에는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의 GDP 규모를 가진 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26]

코로나19와 미·중 경쟁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와 중국의 도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합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리더십을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전략적 선택은 진영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충격과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시장에 개입하면서 진영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모색함에 따라 미국과 서방 vs. 중국과 러시아의 진영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전략경쟁과 코로나19 상황에 직면하여 미국의 귀환(America is Back)을 강조하였다. 미국의 귀환은 단순히 민주당 정권의 전통적인 정책으로의 귀환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재구성하면서 미국적 가치의 실현을 강조한다.[127] 즉 민주주의 가치를 외교안보 정책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모범의 힘(power of example)'을 연결고리로 미국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기반 위에서 미국은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견제를 위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한층

124) 위의 자료, p.16.
125) 박은주 외(2021), p. 158.
126) 김영우(2021), p. 34.
127) 오일석(2021), p. 4.

강화함으로써 신흥안보에서의 진영화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국정의 최우선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고 국제 협력을 주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기후변화 국제 협력면에서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권위주의 국가들이 사이버공격이나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 등을 통해 민주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하면서 동맹국들과 협력을 통해 사이버 분야에서의 국제규범 형성과 강력한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권위주의 국가들이 사이버공격을 통해 인공지능, 5G,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등 신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절취하는 것에 대해 경제제재나 수출통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진영화의 가속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초연결 비대면 사회에서 발생한 최초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신흥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볼 때, 전쟁 주체를 시민과 기업으로 확산시켰고, 전쟁 공간을 사이버 및 우주로 확장시켰으며, 에너지와 식량 등 경제적 수단을 무기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원의 저주'를 '자원의 축복'으로 전환시켰다. '자원 민족주의'를 넘어 '자원 국가주의'와 '자원 군사주의(자원 무기화)'에 이르고 있다고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가와 곡물 가격을 상승시키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 서구권 세계 시민들에게까지 고통을 확대시키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경제제재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은 미국의 비축유 방출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유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전쟁 '주체', '공간' 및 '수단'의 확산과 확대 현상은 보편적 가치의 대립을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사이의 진영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핵국인 러시아와 비핵국인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서방의 대리인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점에

서 볼 때 핵국과 핵국의 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전쟁 당사국 모두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전 지구적 몰락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와 사이버, 인지전 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국과 핵국 대리인의 전쟁은 하이브리드 전쟁이 핵전쟁으로 확전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신흥안보 위기 상황의 초래 또한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국가의 모든 핵심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의 대규모 사이버공격을 주요 기반시설에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감행하지 않은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이버공격에 대해서는 비사이버적 수단은 물론 물리적 타격을 넘어 핵무지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흥안보 위기가 핵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이 전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전쟁은 유엔 차원의 국제 규범체계에 기초한 신흥안보 위기 대응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일으킨 이 전쟁은 유엔 차원의 제재나 결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러시아가 비토권을 가지고 행사하면 유엔 차원의 제재나 결의는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은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국가들의 단결을 촉구하여 국제사회에서 진영화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대해 중국은 기권하고 북한과 벨라루스 등이 찬성한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권위주의 국가들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단합을 과시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더욱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식량 자원은 권위주의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러시아에 대한 친밀 행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급속하게 상승하면서 국내적 비난 여론을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와 식량을 공급받아 완화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9월 16일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회의에서 SCO 회원국 간의 독자적

지불 및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자고 제안[128]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진영화에 기름을 부었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SCO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우리는 지역 통화(회원국들의 화폐) 결제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SCO 회원국들의 로드맵을 잘 이행해야 한다"며 "현지화폐를 이용한 국제 지불과 결제 시스템 개발을 강화하고 SCO 개발은행 창립을 추진해 지역 경제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對)러시아 금융제재와 향후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있을 수 있는 대(對)중국 금융제재 가능성에 맞서 달러나 유로화가 아닌 위안화, 루블 등 지역 통화로 SCO 회원국 간에 결제를 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129]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시작한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설립을 제안하면서 미국 달러에 도전하였기 때문이다. 미국과 서방의 대러 제재를 회피하고 달러 기축 통화에 대한 정면 도전을 밝힌 이번 조치로 인하여 진영간 대립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러시아의 힘을 지켜본 북한과 이란 등 권위주의 저개발국가들은 러시아와의 밀착을 더욱 강화하고 유엔 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대러 대중, 의존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집단 안보 협정이 얼마나 미약한지 보여주었다. 우크라이나가 기대하였던 민스크 협정(Minsk agrement)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사회에 자국의 안전은 자국이 보장하여야 한다는 독자생존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는 비대면 초연결 사회에서 발생한 전쟁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비대면 초연결 사회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나만의 개성과 공간이 보장된 사이버공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정부주의적 생각이 투영되어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초연결 사회는 국제질서에서도 국제기구나 국제 레짐에 따라 안전이 보장되는

128) 조준형(2022. 9. 17), 「시진핑, 달러 패권에 맞설 SCO 독자 결제시스템 제안」,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10. 8).
129) 위의 자료.

것이 아니라 각자도생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무장 강화와 군비경쟁에 들어가고 있다. 독일과 폴란드가 군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일본의 경우도 사실상 재무장을 시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일본의 무장 강화는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 중국의 대만 해협 시위, 일본의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분쟁 등은 이러한 군비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 또한 군비경쟁은 국방 신기술 개발과 사이버와 우주 등 회색지대에서의 우위를 위한 연구 개발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진영화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므로 진영화를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과 영국이 호주와 오커스(AUKUS)를 결성하여 호주에 핵추진잠수함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을 통하여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방 과학기술의 진영화는 다자안보체계나 레짐 보다는 진영 내부에서의 양자안보체계 혹은 소다자 레짐으로 보다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3) 변화하는 신흥안보 환경과 아세안

아세안은 2019년에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SEAN Outlook)'을 발표하였다.[130] 이는 인도·태평양에서의 협력과 대화의 실행이 아세안 국가들이 주도하는 안보 플랫폼 체계하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목적은 ① 이 지역의 협력에 대한 길잡이를 제공하고 ②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고, 규범 기반 지역 체계를 구축하며 긴밀한 경제적 협력을 촉진하여 이 지역의 평화, 안정 및 번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뢰와 신의를 강화하며 ③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와 같은 기존 아세안 주도의 메커니즘을 보다 강화하고, 아세안

130) ASEAN(2021),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0. 8).

의 공동체 구축 프로세스(ASEAN's Community building process)를 제고하며 ④ 해양 협력, 연결성(connectivity), 지속가능한 개발, 경제 기타 협력 가능한 분야 등을 포함하여 기존 협력을 실행하고 필요한 협력 우선 사항을 발굴하는 데 있다.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은 EAS, ARF, 아세안국방장관플러스회담(ADMM-Plus: 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 Plus), 아세안확대해양포럼(EAMF: Expanded ASEAN Maritime Forum), 기타 아세안 플러스원(ASEAN Plus One mechanisms) 등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을 보다 최적화하고 강화하는 데 있다. 아세안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점은 평화, 자유 그리고 번영을 지속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세안 중심주의는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진영화 추구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131] 아세안은 미·중 경쟁 가운데에서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아세안 주도의 다자협의체를 통해 진영화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아세안은 세계 5번째 경제블록이며 향후 2030년에는 4번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에게는 중국으로부터의 디커플링 지역임과 동시에 에너지, 식량은 물론 원료와 재료의 공급지이기도 한다. 아세안은 미국과의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2020년을 기준으로 상품과 서비스 거래는 3,620억 달러, 외국인 직접투자는 3,29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132] 그러면서도 아세안은 2020년에 대중국 무역액이 6,850억 달러를 기록하여 유럽을 제치고 중국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가 되었다.[133] 미국은 아세안에서의 중국에 비해 뒤처진 경제적 지위를 만회하기 위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사 입장 국가들과 함께 강력한 안보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아세안의 입장에서도 미국의 힘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

131) Sundararaman(2021. 10. 11), "AUKUS Challenge to Multilateral EU, ASEAN Approach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0. 8).
132) Gupta(2022. 5. 9), "Is AUKUS the New ASEAN in the Indo-Pacifi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0. 8).
133) *Ibid.*

는 안보 공백 상태를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인도·태평양에서 진영 대립에 가담하여 아세안 중심주의를 상실하는 것을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세안은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의 출현으로 아세안 중심의 역내 다자협력체제의 약화를 우려하였다.[134] 아세안은 인도·태평양이라는 지리적 개념은 수용하되 아세안 주도의 지역 협력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위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135] 이러한 아세안의 우려를 반영하여 쿼드 4개국 정상은 공동성명문에서 아세안 중심성을 강조하였고 글로벌 공공재 중심의 쿼드 협력 추진을 천명한 것이다.[13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에서의 오커스의 출범은 아세안의 입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137] 오커스 출범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한 밀착도, 외교기조, 정치 상황, 중국에 대한 위험 인식 등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도 다른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오커스의 출범으로 군비경쟁과 세력경쟁이 가속화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였고,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등은 신중하지만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138] 오커스의 출범으로 인도·태평양에서의 아세안 중심주의는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신흥안보 협력을 통한 아세안 중심주의 유지와 한계

인도·태평양의 안보지형은 아세안 주도의 다자협력체제와 미국 중심의 양자협정으로 구분되어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두 안보지형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였다. 그렇지만 미·중 경쟁과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진영화

134) 최인아 외(2022), p. 312.
135) 위의 자료.
136) 위의 자료.
137) 위의 자료.
138) Gupta(2022. 5. 9), "Is AUKUS the New ASEAN in the Indo-Pacifi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0. 8).

가 가속화됨에 따라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양자협정은 물론 쿼드와 오커스 등 소다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아세안의 역할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139]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진영화가 가속될 것을 우려해왔다. 이 우려는 오커스의 출범으로 현실화되어 아세안 중심주의를 방해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은 호주의 핵잠수함 및 첨단 방위산업 기술의 발전과 도입으로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 전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영화 가담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는 아세안이 추구해왔던 아세안 중심주의 다자 안보체계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신흥안보 분야 협력을 기반으로 아세안 중심주의를 관철하여 아세안 중심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기후, 신종 감염병, 사이버와 에너지/식량 자원 등 신흥안보 위험은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없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흥안보 위험은 아세안 국가들에서 창발하여 인도·태평양에서 임계점을 넘어 국가, 지역 및 세계적 신흥안보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사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가 배후 해커들에 의해 국제 금융기관이나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 배후 해커들은 사이버안보 수준이 미약한 아세안 국가들을 경유하여 공격을 감행하는 것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아세안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흥안보 위험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중 경쟁과 진영화의 대립에서 어느 국가나 진영도 경쟁력 우위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아세안은 신흥안보 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안보지형하에서도 아세안 중심주의를 어느 정도 지속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안보 위험이 이슈 연계를 통해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고 아세안 개별 국가는 물론 아세안 여러 국가로 확

139) *Ibid.*

산되는 안보화 과정에 이르는 경우에는 진영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아세안이 국제규범이나 국제사회와의 연대 속에서 이러한 신흥안보 위험으로 인한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영화에 따른 선택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신흥안보 위험의 안보화 과정의 단계에 따라 아세안은 '아세안 중심주의를 유지'할 수도 있고 진영화에 편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영화에 편승하는 경우 아세안 내부에서는 개별 국가의 국가전략, 외교안보 정책, 경제 발전 정도, 자원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입장을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추진 원칙과 전략

1) 이슈 및 협력국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소다자주의 추진

이러한 대내외 전략적 환경에 기반하여, 우리 정부가 수립 가능한 한·아세안 신흥안보 협력의 추진 원칙 및 전략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슈 및 협력국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소다자주의 추진'이다. 상기한 신흥안보 이슈의 광의성·포괄성 및 아세안 구성국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는 프로젝트 단위의 신흥안보 관련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소다자주의'의 틀에서 추진하는 전략적 선택 및 집중이 필요하다. 원칙적·선언적 차원에서 아세안 역내 국가의 기존 관행 규범의 합치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공감과 존중의 뜻을 표명하고, 협력의 실질적 필요성 및 성과 가능성이 높은 핵심 파트너국을 중심으로 해당 협력을 프로젝트 단위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자력 안전 관련 협력을 위해서는 베트남·필리핀 등 원전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가 중심으로 전문가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등 이행 가능한 프로젝트 단위의 협력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원전 수주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 목표와 원전 기술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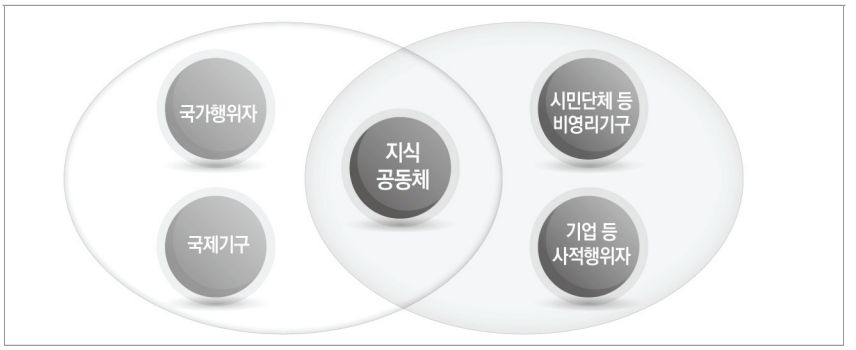
부 아세안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합치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신흥안보 이슈는 개념 자체의 광의성·포괄성으로 인해 실질적 내용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도전 요인을 안고 있다. 아세안 국가간의 다양성은 또한 아세안의 틀 내에서 신흥안보 관련 모든 협력 의제를 추진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흥안보 개별 이슈의 특성과 아세안 개별 국가의 구체적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묶은 최소 단위의 소다자주의 틀에서 개별 국가의 필요성에 상응하는 프로젝트 단위의 협력 의제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모호한 원칙 수준의 선언만을 반복할 개연성이 있다.

2) 비정부 행위자들의 기여를 고려하는 개방형 추진 전략

신흥안보 이슈는 그 실현의 주체가 다양할 뿐 아니라 널리 퍼져 있으펴, 이들 간 조밀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작금의 코로나19로 경험하고 있는 보건안보 위기사가 방증하듯, 개인의 방역지침 준수, 의료진의 헌신, 제약사의 백신 개발 등 신흥안보의 성패는 비정부 행위자의 역할에 따라 갈리는 측면이 크다. 이러한 정부 행위자-비정부 행위자 간 상호작용의 동적 과정은 [그림 4-1]와 같이 개념화할 수 있다.

그림 4-1. 신흥안보 추진을 위한 주요 행위자 및 채널[140)]



3) 미·중 간 전략적 경쟁으로부터의 스케이팅 전략

셋째, '미·중 간 전략적 경쟁으로부터의 스케이팅 전략'을 들 수 있다. 아세안 국가들의 대중 전략은 미국 주도의 반중 포위동맹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혹시 있을지 모르는 중국의 보복을 야기하는 것보다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이러한 임계점에 이르지 않는 수준에서 강화하여 위협을 관리하겠다는 '헤징 전략(hedging strategy)'로 흔히 표현된다.[141] 그러나 헤징 전략은 '동맹'과 '비협력'의 중간 지대에 속하는 국가간 전략적 연대를 표현하는 개념일 뿐, 경성안보 이슈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갈등 상황 자체를 타개하는 전략이 되기는 어렵다.

스케이팅 전략은 한·아세안 간은 물론이고, 복합적 양자-다자-소다자 플랫폼을 활용하여 신흥안보 중심의 협의체를 확산·공고화하여 미·중 경쟁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주변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할 뿐 아니라, 해당 플랫폼에 미중 양국의 참여를 유도하여 양국간 갈등을 완화하는 적극적 위험 회피 전략을 의미한다.[142] 따라서 신흥안보 이슈의 맥락에서 한국의 국익을 중심에 놓고, 개별 이슈의 특성에 따라 미국 혹은 중국이 주도하는 정책 플랫폼에 선택적으로 혹은 모두 참여하는 유연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중 간 전략적 갈등의 핵심 이슈이자 우리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걸린 반도체 공급망 확보 관련 이슈의 경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ian-Pacific Economic Framework)와 같은 미국 주도의 협의체에 기울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환경안보 등 미·중 양국 역시 협력 이슈로 인식하는 영역에서는 당연히 중층적 플랫폼 참여가 바람직하다 하겠다.

좌우로 역동적으로 몸을 흔들며 빠르게 앞으로 나가며 균형을 유지하는 스케이팅 선수처럼,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기계적 등거리 외교를 유지

140) Caballero-Anthony(2018), p. 20.
141) Cheng-Chwee(2008), pp. 159-185.
142) 「신흥안보론 김상배, 미·중 양다리 안돼…스케이팅 전략 필요」(2022. 4. 4).

하는 것보다는 신흥안보의 이슈 특성 및 협력의 기대 효용을 중심으로 미국 주도의 다자그룹과 중국 주도의 다자그룹 사이를 유연하게 오갈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이슈에 따라서는 우리가 주도하는 한·아세안 신흥안보 협력 플랫폼에 미·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 협력 모델 구상을 위한 고려사항

신흥안보 위험 이슈의 부상이 사회적 구성과 소통 메커니즘을 통해 구체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버넌스 차원에서 살펴본 안보 개념 확대에 대한 고찰은 연구 사례의 사회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도되어야 한다.[143] 탈냉전 이후 동남아시아가 직면한 신흥안보 위험과 구조적 제약을 함께 보면, 신흥안보 위험 이슈는 탈근대 질서로의 이행이 뚜렷한 서구사회보다도 근대와 탈근대 질서가 혼종된 정치환경에 놓여 있는 비서구 지역에서 보다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동남아 지역은 전후 안정적인 근대국가 간의 질서 수립과 탈냉전 이후 본격화된 지역통합 모색이라는 충돌적 과제를 동시적으로 수행해가고 있는 공간이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만 테러와 초대형 자연재해, 전염병, 초국경적 환경오염 이슈의 대두 등 다양한 신흥안보 유형들이 발생했던 집약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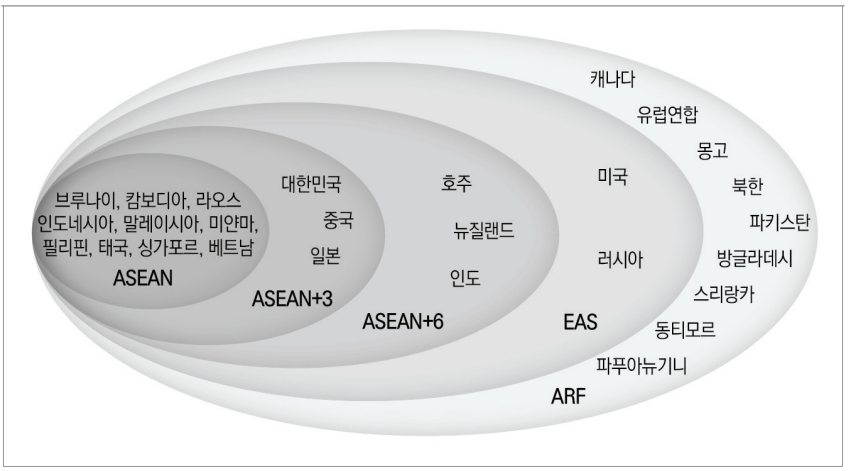
동시에 주권 존중의 원칙하에 회원국 간의 공존과 지역 안정에 기여해왔던 '아세안 방식(ASEAN Way)'이 이제는 오히려 지역안보의 증진을 제약하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상황을 경험 중이다. 지난 2000년 이후 아세안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차원에서 큰 파급력을 갖는 초국가적 도전들에 직면하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역내 회원국 간의 합의된 행동준칙을 마련해왔으나 아세안 방식의 경직된 원칙과 충돌함으로써 실효적인 제도화에 실패하는 등 여러 문제점

143) 윤정현(2019a), p. 27.

들을 노출한 바 있다.

신흥안보 관점에서의 접근의 필요성과 기존 아세안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 위험 이슈별로 각국의 재난관리시스템, 정치적 환경, 아세안 지역협력체의 구조와 작동 방식 등 아세안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중심으로 면밀히 기술, 초국가적 위험 이슈들에 대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구조의 취약성, 도전과제 등을 역사사회학적 관점에서 자세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근대적 질서가 강고하게 작동하는 동남아시아 지역협력체의 거버넌스의 방식과 신흥안보 대응에의 한계점을 이해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아세안 지역적 특수성과 미·중 경쟁 구도가 낳은 협의체 등 외생변수가 갖는 요인도 주목해야 한다.

그림 4-2.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역내외 국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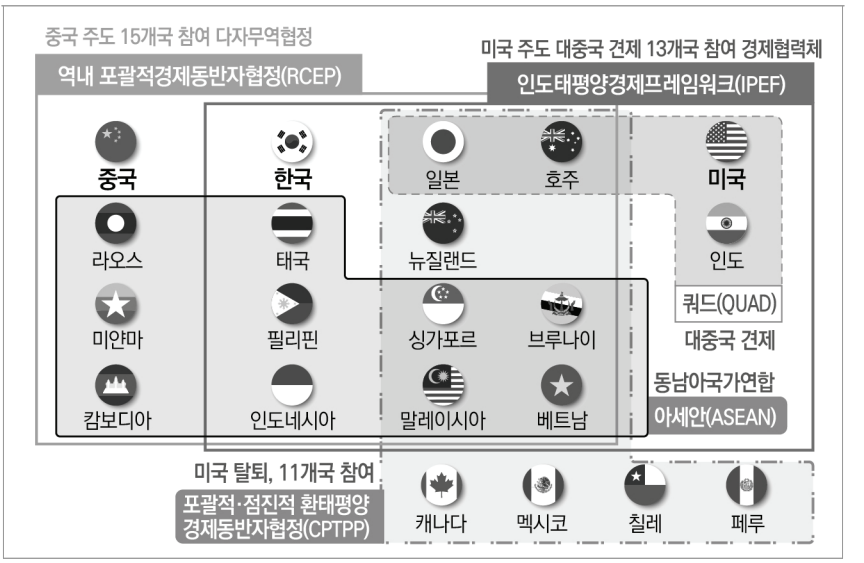


자료: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소(2020), p. 8.

아세안은 의사결정 원칙으로 '협의(consultation)'와 '합의(consensus)'를 존중하면서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헌장」 제7장에는 대외 협력에 관한 조

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역외국뿐 아니라, 소지역/지역 기구 및 국제기구 등과 상호호혜적인 대화 협력, 파트너십 및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라 명시하고, 아세안이 역외 협력 및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의미하는 '아세안 중심성'을 운영준칙으로 강조하고 있다.[144] 이 같은 역내 운영의 관행과 준칙을 염두에 두고 향후 신흥안보 이슈의 협력에 아세안이 참여를 희망하는 역외국가 및 협의체들이 어떠한 행위자로 구성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4-3.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중 주도 협의체와 아세안 국가의 가입 현황



자료: 손해용(2022. 5. 23), 「IPEF 통해 美는 '반중 연대', 韓은 '신기술 경쟁력' 노린다」,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6. 30).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우려는 반대 급부로 미국의 관여를 필요로 한다. 경제적으로 대중국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서 미국의 대동남아 경제적

144) 남상열 외(2020), pp. 34~35.

관여가 중요하다. 그러나 어느 일방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관계를 경계하고 있으며, 최근 심화되는 미·중 전략경쟁이 낳은 인도·태평양 지역질서의 전환 과정을 아세안 국가들은 매우 미묘하고 다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예를 들어 오커스의 경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우려하는 반면 베트남, 싱가포르 등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이며, 필리핀에서는 이중적 반응을 표출하고 있다. 태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은 공식적으로 오커스에 대해 반응을 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4-3]과 같이 아세안 회원국들은 미·중이 주도하는 서로 다른 협의체에 가입 중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시각은 미국의 공세적인 전략과 그에 맞서는 중국의 대응이 결과적으로 '아세안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자협력이 펼쳐지고 그 과정에서 아세안의 방식이 관철돼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아세안 중심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신흥안보 거버넌스의 수립에 있어 아세안의 역내외를 둘러싼 지정학적 구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의 문제해결 접근 방식과 다면적인 입장, 미·중 전략경쟁의 제약과 동시에 균형자로서의 역할 추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흥안보 위험에 대해 지속가능하고 신뢰에 바탕에 둔 한·아세안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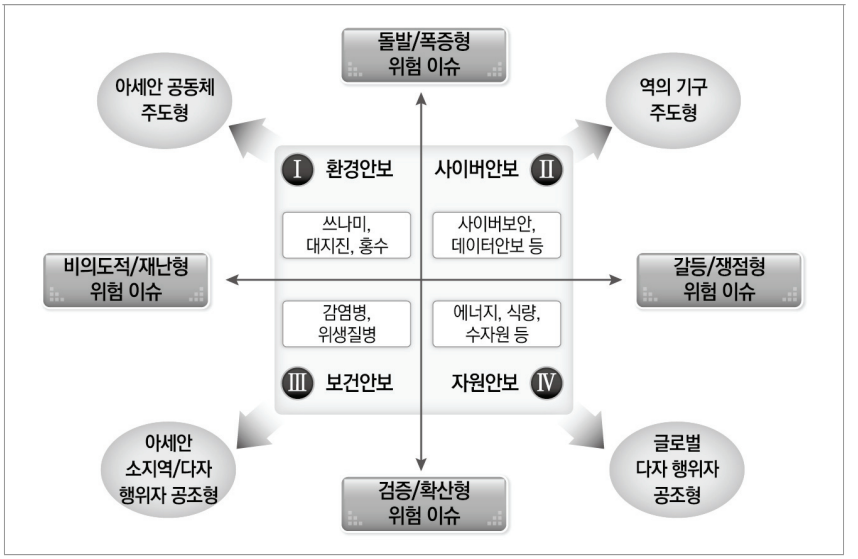
2. 신흥안보 분야 對아세안 협력 모델 구축

가. 신흥안보 유형에 대응하는 적합 거버넌스

복잡성과 가변성을 가진 신흥안보 위험들은 공통적인 특징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으며, 이는 대응 방식을 구상할 때 첫 번째 고려점이 된다. 즉, 도전에 직면한 시스템이 어떠한 행위자들의 주도하에 어떻게 개입의 수준을 조절하며 관리해야 하는지, 국가, 지역, 글로벌 수준에서 어느 행위자들과 연계하여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신흥안보 위험에 대한 대응 주체와 방식의 측면에서 조응하는 적합한 대응 모델을 찾아야 한다. 앞서 2장에서 설명한 네 가지 유형별 신흥안보 위험이 갖는 속성과 파급 속도, 대응 주체 등을 고려할 때, 각각에 부합하는 대응 방식을 도출하면 [그림 4-4]와 같은 관리 모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대응 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Ⅰ, Ⅲ 영역의 환경·보건적 위험들은 주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나 의도하지 않은 2차적 연계효과에 의해 피해가 나타나므로 책임소재에 따른 정치적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유형들이다. 또한 발생지점과 가까운 지역 역시 직접적인 영향에 놓이기 때문에, 인접국은 위험에 대한 공유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 국제사회의 정치적 개입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비교적 약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아세안 역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위험이 즉각적으로 발현되는 Ⅰ 영역의 경우, 아세안 공동체 차원의 정부 중심 수직적 거버넌스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될 수 있는 반면, 감염병과 위생질병 등을 포함하는 Ⅲ 영역은 초국가적 차원의 봉쇄와 차단, 추적 정보에 대한 공유가 쉽지 않으므로 위험이 발생한 지역과 인접국의 소지역 단위의 협의체나 수평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그림 4-4. 대응 주체와 방식에 따라 분류한 신흥안보 위험 관리 모델



자료: 윤정현(2019a), p. 32를 바탕으로 재구성.

반면 Ⅱ, Ⅳ 영역의 기술사회적 위험들은 주로 외부의 의도적 공격이나 정부의 부적절한 자원배분 및 시스템 관리 실패의 결과로 발생하므로 정치적 책임 소재가 제기되기 쉬운 분야들이다. 따라서 이들 신흥안보 이슈들은 역내에서는 갈등의 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자칫 실효적인 제도화없이 선언문의 형태로 공조가 머무를 수도 있는 분야이다. 또한 위험 통제를 위한 내부적인 충분한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고도화된 사이버공격이나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이 아세안은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자원, 에너지 분야 역시 역내 수급 불균형 문제가 곧 인접지역과 국제사회의 공급망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신흥안보 위험들은 역외의 적극적인 관여와 협조가 요구되는 분야이며, 아세안+3, 아세안+6, EAS, ARF 등 아세안뿐만 아니라 역외 정부들과의 공조나(Ⅱ 영역) IPEF, CPTPP, RCEF 등 다자 협의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Ⅳ 영역)라 할 수 있다.

나. 신흥안보 위험의 안보화 과정과 협력 초점

1) 창발-임계-확산의 유형별 안보화 과정

신흥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수립을 위해서는 위협의 안보화 과정에서 어디에 협력의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즉 이슈의 발생에서 심화를 거쳐, 직간접적 연계가 없던 부문으로의 확장을 통해 지정학적 사안과 결합하여 안보화로 이르는 각 단계별 대응 방식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먼저 기후변화가 야기한 환경안보 이슈를 살펴보면, 극단적 기상 현상의 모습으로 발현되지만, 점차 그 피해 양상이 증폭되면서 본래의 자연재해와 관련된 단기적인 인명과 재산 손실의 수준을 넘어서는 현상이 나타난다. 2004년과 2018년 인도네시아 아체 및 술라웨시에서 발생한 쓰나미의 경우, 피해 지역 생존자들은 쓰나미가 지나간 자리에서 찾아온 질병과 식음료 부족에 고통을 받아야 했다. 이어 유실된 폐기물, 공업용 화학 물질의 확산, 수질 오염 및 하수 처리 시설의 파괴는 주거지와 해안 습지, 초목 등 수많은 토양과 생태 환경을 악화시켰다. 이는 이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현지의 농업, 경작 활동에 장기간 피해를 유발하였다. 문제는 이 같은 빈번해지는 기상이변 현상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국제사회가 산업·에너지 부문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산업 생산품 무역에서 접근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연재해 위협과 직접적으로 연계점이 없었던 산업, 시장 구조의 급작스러운 변화를 요구하게 되며, 통상·경제 부문의 위협적 사안으로 증폭될 수 있다. 실제 그린 에너지체계로의 전환 준비가 부족한 개도국에는 국가경제의 성장을 위협하는 경제안보 이슈로 귀결된다.

자원안보 이슈 또한 식량 및 에너지 생산과 유통 관련된 가용성, 접근성의 제한 등으로 경제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이는 수급체계의 불안정성

에 반응하는 각국의 경쟁적인 식량안보 확보전으로 비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지정학적 안보 이슈를 연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전쟁의 여파로 국내 곡물가격이 급등하자 우크라이나는 자체 식량 조달을 위해 수출을 금지했고, 세계 5위의 밀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의 조치는 국제 밀 가격을 20%나 폭등시키는 결과를 낳은 바 있다. 그 여파는 아시아로 번져 대표적인 밀 생산국인 인도 또한 수출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자원부국이자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지난 1월 24일 국내 팜유 단가 안정화를 위해 수출을 금지하였으며, 정부의 팜유 수출 규제 조치는 글로벌 식용유 대란으로 이어져 전 세계의 생필품 물가를 위협하기도 하였다.[145] 즉, 위협 요소가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서 글로벌 공급 불안감이 고조될 경우, 국가는 필수 자원을 안보 원리에 종속시키는 행동을 보였으며, 이는 자원 확보를 위한 지정학적 갈등을 일으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곤 하였다.

사이버보안이 야기하는 신흥안보 전개 양상 또한 이 같은 창발-임계-확산의 메커니즘을 따르고 있는 현상이 관찰된다. 랜섬웨어, 디도스, APT 등 최근 사이버공격 수법이 다양화되면서 기간 전산망, 지식 재산권, 첨단기술정보 및 데이터 절취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적인 공격과 방어 활동의 증가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확장현실(XR), 메타버스 가상융합현실 기술의 확산으로 디지털화된 사회의 공격표면(Attack Surface) 또한 확장되었다. 2020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Log4j(오픈소스 로깅 라이브러리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 이슈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오픈소스 로깅 라이브러리 소프트웨어가 해킹당할 경우, 컴퓨터 내 모든 데이터를 삭제·손상시킬 수 있고, 악성 프로그램이 전파되어, 해킹당한 컴퓨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전반이 공격받는 '사이버 팬데믹'의 현실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이버해킹 이슈의 심화는 금전적 피해 규모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145) 윤정현(2022), p. 2.

최근 국가가 배후에서 지원하는 해커집단들의 활동들이 에너지, ICT 전산망 등 국가 주요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위협의 '임계 국면'으로 발전하여 행해지고 있다. 이 같은 공격들이 성공할 경우, 사이버 공간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원활한 물류·유통 체계까지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증가하며, 이는 사회의 필수적인 '생명선(life-line)'에 대한 국가의 제어·통제력 상실을 유발하는 안보 문제로 비화된다. 나아가 배후 세력에 대한 추적, 책임소재, 처벌적 공격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낳게 된다. 위협의 질적 변화를 넘어 지정학적 사안과 연계된 문제로 '확장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발생했던 솔라윈즈 사건(2020. 12),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건(2021. 5)은 러시아 배후로 추정되는 사이버공격집단에 의해 미국의 에너지·전력 배분 기능이 피해를 입음으로써, 심각한 안보적 문제로 자리매김했던 사례였다. 나아가 사이버위협의 전개 과정에서 창발과 임계 단계를 넘어 지정학적 갈등의 문제로 비화되는 경로를 여실히 보여준 바 있다. 이는, 최근 스마트폰 등 주요 ICT 분야에서 신흥 공급망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에 따라 대체 투자지로서 급속한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사이버보안 기술과 제도 기반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어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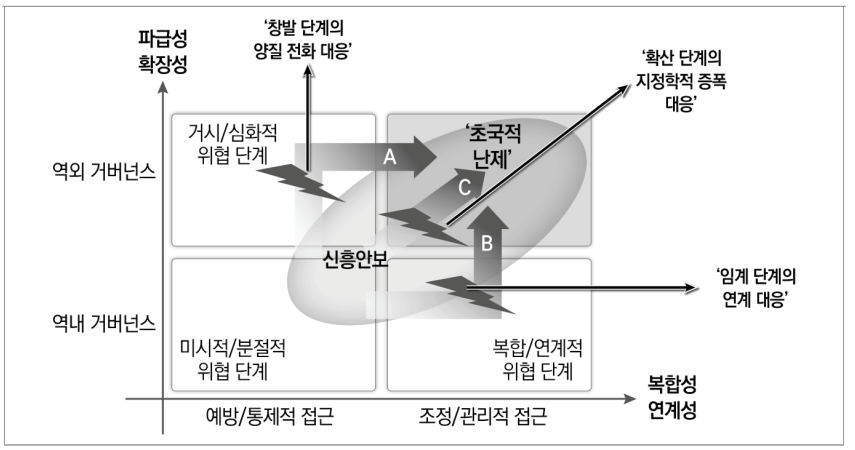
보건안보는 감염병이나 위생 이슈에서 보듯이, 창발 후 생태 및 진화 상황에 따라 어느 임계점을 넘을 경우, 비연계 부문으로의 확산이 가장 명확히 관찰되는 특징을 지닌다. 장기간의 코로나19에서 인류가 얻은 교훈은 인명손실 그 자체만이 아닌, 경제·사회·외교의 이슈 영역과 결합되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시키고 식량, 에너지, 이슈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위기는 경기침체와 금융질서의 혼란 등 비연계 부문에서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었다. 이 같은 질적 변화의 임계점을 넘게 되면, 이민, 난민 인권, 인종 갈등 등과 같은 초국가 수준에서의 인간안보적 위협 이슈로 증폭될 수 있다. 나아가 강제화된 비대면 패러다임하에서 디지털 이용자의 급증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위변조 등 사이버 보안에서 파생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백신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핵심 백신 정보를 탈취하려는 국가 기반 사이버 첩보활동이 증가하였는데, 이 같은 활동 사례는 보건 이슈에서 창발한 문제들이 임계점을 지나 사이버안보로의 질적 전환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간의 첨예한 지정학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신흥안보의 안보화 과정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2) 행위 주체와 창발-임계-확산 단계별 협력 초점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유형별 신흥안보 위험들은 공통적으로 어느 한 부문의 창발 단계에서 시작하지만, 양적·질적 축적 과정을 지나 임계점의 단계를 넘을 때, 비연계 부문으로의 확장이 증가하고,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지정학적 이슈화와 갈등을 낳는 동학을 보이고 있다. 관건은 거시적 차원의 지정학적 안보 위협으로의 증폭을 막기 위한 국면별, 행위주체별 대응 모델을 수립하는 일이다. 즉, 창발-임계-확산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협력 초점의 설정이 요구된다.

그림 4-5. 신흥안보의 초국가적 난제로의 증폭 경로와 대응 국면



자료: 저자 작성.

그 첫 번째는 결정적인 전환 국면에서의 '고리 끊기'이다. 창발에서 임계 단계로, 임계 단계에서 지정학적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확산의 단계로 증폭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다면 각 국면에서의 협력 파트너가 될 주요 행위자는 누구이며, 어느 수준에서의 접근해야 하는가? 이는 앞서 살펴본 주요 신흥안보 유형별 거버넌스 모델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 같은 단계별·국면별 세분화 과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4-5]는 일상의 미시적 차원의 분절형 위험 이슈가 글로벌 차원의 초국가적 난제로 전환되어 나타나는 창발, 임계, 확산 경로와 이에 해당되는 국면 영역, 그리고 각 국면별 관리 모델과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협력의 초점은 좀처럼 해결이 어려운 우측 상단의 '초국적 난제' 영역으로 나아가는 각 경로의 고리를 완화할 수 있는 공동추진 의제의 설정이나 정보 공유, 인프라 및 물자 지원 등이라 할 수 있다.

3. 구체적 협력 방안의 제안

가. 협력 방식과 내용의 선택

한국과 아세안의 신흥안보 협력 강화는 신흥안보 위협의 유형에 대응하는 적합 거버넌스 구조와 안보화의 과정 및 아세안 각국의 진영화에 대한 입장 등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미·중 경쟁과 진영화가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되어 아세안 중심주의를 추진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의 지속을 우려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안정을 위해 미국과의 안보 협력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지만 경제력을 바탕으로 증대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확실하게 차단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

은 상태에서 진영화의 선택이 강요되는 상황은 아세안 중심주의의 실현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진영화가 지속되는 경우 아세안 국가들은 각국의 외교 기조, 정치 상황, 중국 위협 인식도 등에 따라 진영화의 가담 정도와 진영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146] 싱가포르는 미국의 준동맹 수준에 버금가는 전통적 우방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체제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미국 측 진영에 가담할 가능성이 크다.[147] 태국과 필리핀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인권 문제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말레시이아와 브루나이는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친중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역내 안정을 위해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선택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148] 미얀마는 개혁개방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견지하여 왔지만 로힝자족 인권 문제와 쿠데타에 따른 인권 탄압 등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으며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전통적인 친중 국가로서 미국과의 안보 협력은 미미한 수준이다.[149]

따라서 진영화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친중 입장의 국가들에 친미적 입장의 신흥안보 협력 추진을 제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기후(환경안보), 보건안보, 사이버, 자원 등 신흥안보 이슈에 따라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 주도, 다자 중심, 역내 주도, 역외 협의체 주도 등으로 협력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아세안 전체와의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환경안보 대응 협력을, 아세안 특정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밑거름 삼아 아세안 전체로 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다소 비효율적인 결과를 양산할 수도 있다.

아세안 신흥안보 협력의 내용은 창발-임계-확산의 안보화 과정에 따라 내용

146) 최인아 외(2020), p. 84.
147) 위의 자료.
148) 위의 자료.
149) 위의 자료.

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환경안보, 보건, 사이버, 자원 등은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과 행정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그렇지만 신흥안보적 접근에 기초한 협력을 강화하려면 외교안보적 군사적 수단의 협력 또한 담보되어야 한다. 인도적 지원과 행정적 협력이 안보화 과정의 첫 단계인 창발 혹은 그 이전 단계에서 가능한 협력이라고 한다면 외교안보적 군사적 협력의 내용이 임계와 확산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환경안보

1) 협력의 방식

환경안보는 전 지구적 문제이며, 재난재해, 신종 감염병, 에너지와 식량 등 신흥안보 이슈 연계성이 매우 큰 분야이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수요가 높으며 국제적 협력체계와 레짐이 작동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아세안 현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2020년도 조사에 의하면, 아세안은 전통안보보다는 비전통안보 문제가 국가안보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를 가장 큰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150]

환경안보 대응 문제는 진영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적은 인도적 지원의 측면이 강한 신흥안보 대응 분야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응 주체와 방식에서 보았을 때, 환경안보에 대한 한국과 아세안 협력은 아세안 공동체 주도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즉 '아세안 청사진 2025(ASEAN Blueprint 2025)'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지속가능한 기후

150) Green, Searight, and Buchan(2020. 6. 9), "Powers, Norms, and Institutions: The Future of the Indo-Pacific from a Southeast Asia Perspective: Results of a CSIS Survey of Strategic Elit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0. 7).

에 대한 지원 강화와 관련된 세부 과제 및 복원력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전략의 재해에 대한 복원력,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아세안, 위기상황에서의 자원 가용성 등과 관련된 세부 과제의 이행을 위한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세안 환경전략 계획'의 기후변화 관련 내용에 대한 협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환경장관회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위 '아세안 청사진', '아세안 환경전략 계획' 등의 실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개별 국가의 기후변화와 환경안보 대응을 위한 협력 활동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인도적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2) 협력의 내용

한국과 아세안의 환경안보 관련 협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응과 탄력성, 온실가스 감축, 기술 이전, 재원 마련, 국제 협력 등이 중요하지만, 안보화의 과정을 고려할 경우 환경안보로 인한 피해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종 협력 활동은 인도적, 행정적 협력을 통해서도 충분히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1. 한·아세안 환경안보 협력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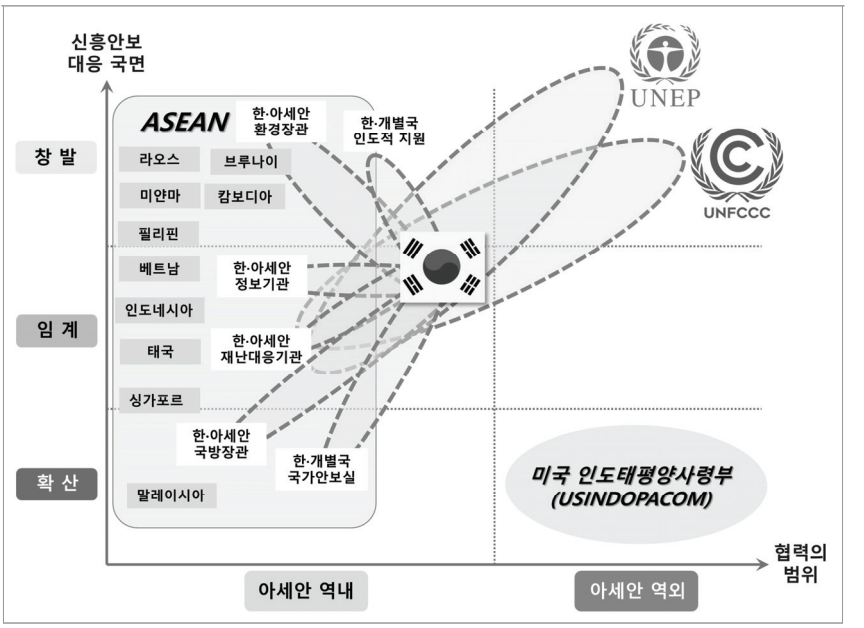
단계	협력 사항	역내	역외
창발 (양질 전화)	• 환경안보(이상기후) 피해 실태조사 • 조기경보체계 구축/점검 • 이상기후 협력 제도화	• 한/아세안 환경장관 • 한/개별국 인도적 지원	• 국제 환경기구
임계 (이슈 연계)	• 조기경보시스템 운용 • 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 • 구조 인력 및 장비 지원	• 한/아세안 정보기관 • 한/아세안 재난대응기관	
확산 (지정학적 임계점)	• 국가/역내 난민 지원 • 통합 대응 작전 운영 • 인력 및 물자 지원 작전	• 한/아세안 국방장관 • 한/개별국 국가안보실	•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자료: 저자 작성.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나 가뭄 등은 사회 불안, 신종 감염병, 난민 발생 등 신흥안보 이슈 연계성이 강하여 안보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교안보적 군사적 수단을 이용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양질 전환의 과정까지는 인도적, 행정적 협력을 통해 대응하되, 미시적 안전의 위협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부터 외교안보적 또는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정보기관이나 군사적 대응을 통한 협력을 실행하는 경우 진영화의 정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아세안 전체 차원의 협력을 얻어 필요한 군사적 정보적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되 개별 국가가 우리의 군사적 정보적 협력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에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림 4-6. 환경안보 이슈의 국면별 대응 주체와 협력 범위



자료: 저자 작성.

다. 보건안보

1) 협력의 방식

아세안은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경제 안정화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 국가들에 보건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2월 아세안 국방장관들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4월에는 아세안 장관들이 코로나19 기금 승인 및 아세안 경제적 파급 효과에 따른 각국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4월 14일에는 아세안 지도자들이 코로나19에 관한 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선언을 채택하여 의약품과 의료장비의 제공에 관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였다. 아세안 국가들은 말레이시아 중심의 '공중보건 위기에 관한 비상운영센터 네트워크(EOC: ASEAN Emergency Operation Centre)', 필리핀 주도의 '아세안 바이오 디아스포라 가상 센터(ABVC: ASEAN BioDiaspora Regional Virtual Centre)' 및 태국 주도의 '지역보건 소실험네트워크(RPHLN: Reginal Public Health Laboratory Network)' 등에서 각각 보건안보 상황, 국가 위험평가와 대응 계획, 실험실 준비 및 대응 조치 등에 관한 협력을 실행하고 있다.

한편 아세안과의 보건안보 협력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응 주체와 방식 면에서 아세안 소다자 및 다자행위자 공조형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세안 보건안보의 시작은 기구축된 EOC, ABVC, RPHLN 등 아세안 협력체계를 이용한 소다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하였던 동북아방역공동체와의 연계를 우선 모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보편적 건강보장(UHC) 지수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등이 80%를 기록하여 대다수의 인구가 의료보험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51] 그러므로 보건안보 협력을 추

진함에 있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과 소다자 협력체를 구성하여 보건안보 관련 정보 공유와 의약품 지원 협력, 백신 개발 등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세안은 감염병 퇴치를 위해 아세안+3(한국, 중국, 일본)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여 사스 발병 당시 아세안+3 지도자들이 질병의 확산과 국경 통제 및 이민 관련 문제를 협의한 경험이 있다.[152] 그렇지만 아세안+3는 진영화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구현하기 곤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아세안+3 자체가 진영화에 따라 입장을 분리하여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백신 지원 등 진영이 대립하고 있는 보건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아세안 국가 가운데 친중 성향이 덜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 소다자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진영화로 아세안+3를 통한 보건안보 협력이 곤란한 경우 우리는 쿼드나 오커스 등 역외 세력과의 협력을 매개하여 다자행위자와의 공조를 통해 아세안과의 보건안보 협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국가 가운데 낙후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는 인도적 차원에서 보건안보 협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식민 경험이 없는 우리가 착취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아세안의 공동 번영과 평화를 위해 보건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아세안 지역에서의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 협력의 내용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를 통해 신종 감염병이 창발-임계-확산되는 안보화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양질 전화의 과정과 이슈연계의 메커니즘을 거쳐서 창발하는 신흥안보 위험으로서 지정학적 임계점을 넘어 국가안보의 문제로 인식되었다.[153]

---

151) 백용훈(2020).
152) 위의 자료.
153) 김상배, 이승주 엮음(2022), p. 30.

한국은 아세안과의 협력을 통해 신종 감염병이 신흥안보 위험으로 창발하지 않도록 보건 상황 모니터링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 감염병 실태조사를 실행하며 낙후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위생 개선 사업을 실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은 한·아세안 보건장관회담, 한/EOC, ABVC, RPHLN 협의체 협력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역외 세력인 WHO 및 동북아방역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안보 문제가 이슈연계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아세안 지역 내부의 다수 국가로 확대되는 경우 안보, 경제, 무역, 금융, 에너지 등 특정 국가 및 아세안 지역 전체에 대해 예기치 못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및 군사 당국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신종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안보 관련 예·경보시스템의 작동, 공동 방역 실시 및 방역 매뉴얼 준수, 보건안보 관련 가짜뉴스 차단 및 인식 제고 등의 협력 사업을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건 물자 및 의약품 지원과 백신 분배 관련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소다자 국방장관 및 정보기관장 협력을 기반으로 한·아세안 국방장관 및 정보기관장 회담을 통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안보의 안보화 과정 가운데 임계(이슈 전환)의 경우 아세안 개별 국가를 넘어 지역에 대한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쿼드 등 역외 안보 협력체와의 협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2. 한·아세안 보건안보 협력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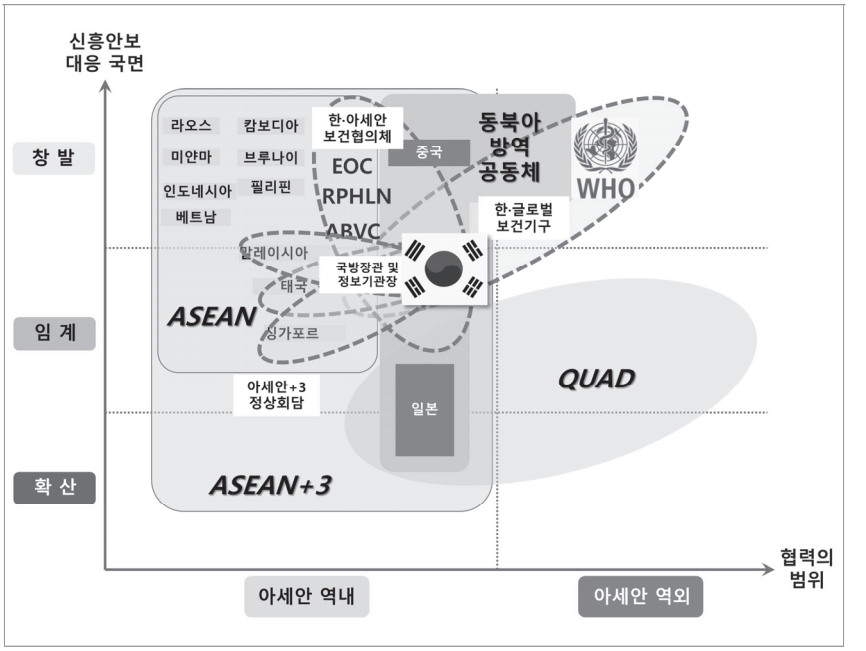
단계	협력 사항	역내	역외
창발 (양질전화)	• 보건상황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영 • 실태조사 • 위생개선 사업	• 한·EOC, ABVC, RPHLN 협의체 • 한·아세안 보건장관	• WHO • 동북아방역공동체
임계 (이슈 연계)	• 예·경보시스템 작동 • 공동 방역/방역매뉴얼 • 가짜뉴스 차단 및 인식 제고 • 보건물자 및 의약품 지원 • 백신 분배 협력	• 말레이시아, 태국 국방장관 및 정보기관장 • 한·아세안 국방장관 및 정보기관장	• 쿼드
확산 (지정학적 임계점)	• 군을 포함한 K방역 지원 • 외교안보기관 협력에 기초한 해당국 상황 정보 제공 • 국경 통제 • 식량, 난민, 소요 사태 등에 대비	• 아세안+3 정상회담	• 쿼드

자료: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임계점을 넘는 확산의 단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기관과 군사 당국이 K방역 지원, 외교안보기관 협력에 기초한 해당국 상황 정보 제공, 국경 통제 지원은 물론 식량, 난민, 소요 사태 등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역내에서는 아세안+3 정상회담은 물론 외교안보 및 군사 당국자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역외 쿼드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보건안보 관련 아세안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정보기관이나 군사적 대응을 통한 협력을 실행하는 경우 아세안 개별 국가들 가운데 선진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과 서방의 진영에 동조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먼저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7. 보건안보 이슈의 국면별 대응 주체와 협력 범위



자료: 저자 작성.

라. 사이버안보

1) 협력의 방식

사이버 분야의 아세안 협력은 진영화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이 처한 정보화 수준과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 인프라 구축 등의 상황도 고려하여야 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사이버안보는 대응 주체와 방식 면에서 역외 기구와의 협력이 중요한 분야이다. 그렇지만 아세안 국가들은 정치 상황, 외교안보 정책 기조 등에 따라

진영의 선택 및 진영화의 가담 정도가 다른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아세안과의 사이버 협력을 실행함에 있어 미국과 서방의 진영에 참여할 수 있고 정보통신 인프라와 기술 수준을 갖추고 있는 싱가포르와의 협력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역외 기구와 더불어 사이버 협력을 실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과 서방의 진영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및 베트남과의 사이버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세안 사이버안보 협력은 역외 기구와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도·태평양에서 사이버, 해양, 신기술 및 우주에서의 영어권 안보동맹체인 오커스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쿼드의 경우도 핵심신흥기술 워킹그룹을 구축하여 사이버 안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므로 아세안과의 사이버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도 인도·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NATO의 사이버방위센터(CCDCOE: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 회원국이 되었으므로 NATO를 통한 아세안과의 사이버 협력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아세안 국가 가운데 친중국 성향을 보이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진영화에 기초한 사이버 협력을 추진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정보화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의 지원 및 정보 접근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정립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이버안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협력의 내용

아세안과의 사이버안보 협력은 사이버위협이 양질 전환되지 않도록 우선 사이버안보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사이버공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이버안보 관련 규범의 정립과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경보체계의 제도화에 대한 협력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한국은 국가정보원이 중심이 되어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CSA: Cyber Securitn Agency of Singapore)과 협력을 우선 실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싱가포르 소재 아세안 사이버안보정보선도센터(Cybersecurity and Information Center of Excellence)와의 협력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공격이 임계점을 넘어 아세안 국가에서 기반 시설이 마비되거나 국가기능이 마비되어 정치사회, 경제적 혼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상황이 아세안 국가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안보 규범의 작동, 예방적 대응 활동, 사고 대응 전문인력 파견, 기술적 지원 및 법집행 활동 강화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한·아세안 국방장관 및 정보당국 회담은 물론 한·아세안장관급사이버안보협의체(AMCC) 및 동 실무위원회는 물론 ARF를 통해 이러한 사이버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협력은 사이버공간의 진영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오커스, 쿼드, NATO 등 역외 안보기구나 안보 동맹협력체와의 협력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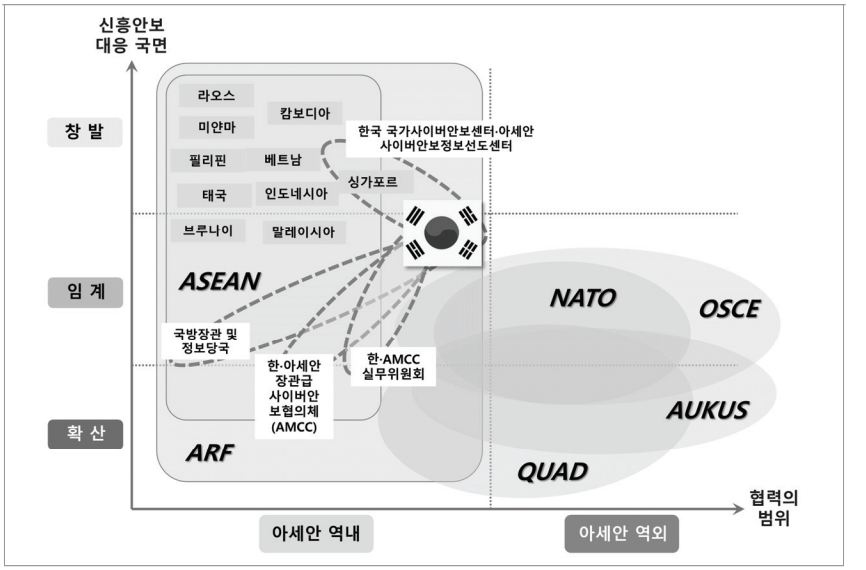
표 4-3. 한·아세안 사이버안보 협력 내용

단계	협력 사항	역내	역외
창발 (양질전화)	• 사이버안보 기반 구축 지원 • 사이버공격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 • 규범 정립 • 예·경보체계 제도화	• 한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싱가포르 소재 아세안 사이버안보정보선도 센터 협력	
임계 (이슈 연계)	• 규범 작동 • 예방적 대응 활동 • 사고 대응 전문인력 파견 • 기술적 지원 • 법집행 활동	• 한·아세안 국방장관 및 정보당국 회담 • 한·아세안장관급사이버안보협의체 (AMCC) • 한·AMCC 실무위원회 • ARF	• 오커스 • 쿼드 • NATO • OSCE
확산 (지정학적 임계점)	• 회복 및 복구 지원 • 사이버제재 실행 • 공동 비난 성명 • 책임 귀속과 선제적 방어 • 신뢰 구축 조치의 실행	• 한/아세안 국방장관 및 정보당국 회담 • 한/아세안장관급사이버안보협의체 (AMCC) • 한/AMCC 실무위원회 • ARF	• 오커스 • 쿼드 • NATO • OSCE

자료: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아세안을 중심으로 촉발된 사이버공격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어 사이버전쟁으로 확대되거나 전 지구적 사이버공격이 아세안으로 확산되는 경우에 대응하여 회복 및 복구 지원, 사이버제재 실행, 공동 비난 성명, 책임 귀속과 선제적 방어 능력 확보, 신뢰 구축 조치의 실행 등을 위한 협력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은 임계점 대응과 동일하게 추진하되 신뢰 구축과 관련해서는 특히 OSCE의 활동을 통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4-8. 사이버안보 이슈의 국면별 대응 주체와 협력 범위



자료: 저자 작성.

마. 자원(에너지·식량) 안보

1) 협력의 방식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와 식량 등의 무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원의 저주'를 '자원의 축복'으로 전환시켰으며, '자원 민족주의'를 넘어 '자원 국가주의'와 '자원 군사주의(자원 무기화)'에 이르고 있다고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가와 곡물 가격을 상승시키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시민들에게까지 고통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자원 안보의 중점은 아세안의 자원안보를 통해 우리의 에너지와 식량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국가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에너지와 식량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세안과의 에너지 식량 등 자원 협력은 사이버안보에 비하여 진영화에서 다소 자유로우면서 아세안 중심주의의 작동이 가능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는 에너지와 식량 등 자원 부문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아세안 내부의 자원 부국과 자원 빈국의 사정이 다르고 자원 부국이라 하더라도 자원 개발로 인한 국부가 국민 전체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에너지와 식량 등 자원은 지구화에 따른 공급망의 작동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생산과 수요가 결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세안과의 에너지와 식량 등 자원 협력은 우리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글로벌 다자 행위자들과의 공조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급망 재편을 추구하는 미국과 서방의 입장을 참고하여 아세안으로부터 우리의 안정적 에너지와 식량 공급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세안 전체가 아니더라도 아세안의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과의 개별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자원 부국이지만 자본 빈국(특히 인도네시아)의 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자원개발 선진국/식량 농업 선진국은 물론 관련 국제기구나 다국적 기업 등 글로벌 다자 행위자들과의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세안의 산업·경제 수준과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력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전력의 보급은 음식을 계속 보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아 및 청소년의 발육 상태를 높이고 시민들의 영양 상태와 위생 상태 개선을 통해 질병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밤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의 활성화와 문맹률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아세안 저개발국에 전력을 보급하기 위한 협력 활동은 인도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력의 보급과 관련하여 기후변화 등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2) 협력의 내용

아세안과의 에너지와 식량 등 자원 협력은 자원 위기가 양질 전환되어 안보 위기가 되지 않도록 우선 에너지와 자원에 대한 제고 조사와 수급 상황 점검에 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에너지와 식량에 대한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에너지와 식량 수출입과 관련된 인프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세안 자원 부국과의 협력을 통한 원유·가스·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자원개발 관련 협력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아시아에너지센터(ACE) 사이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도네시아 석유가스청 및 에너지광물자원부 사이에, 한국 농림수산식품부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사이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한·아세안 행동계획(2021~25)에서 밝힌 에너지 자원 협력 사항에 대한 이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원안보 문제가 이슈 연계를 통해 아세안 지역 내부의 다수 국가로 확대되고 안보와 경제 및 문화와 사회 문제로 연계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하여 에너지 자원 공동 관리, 불공정/범죄 거래 차단 지원, 식량 비축, 에너지 식량 분배 계획, 수출입통제 등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는 한·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법집행 및 정보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선 실행하고자 노력하고, 이후 한·아세안 국방장관, 법집행 및 정보당국과의 협력을 실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쿼드, 오커스, IPEF 등 지역 안보 및 경제 협력체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식량 등 자원 무기화가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 우선공급/인도 물량 준수를 강제하고, 정제유 등에 대한 대아세안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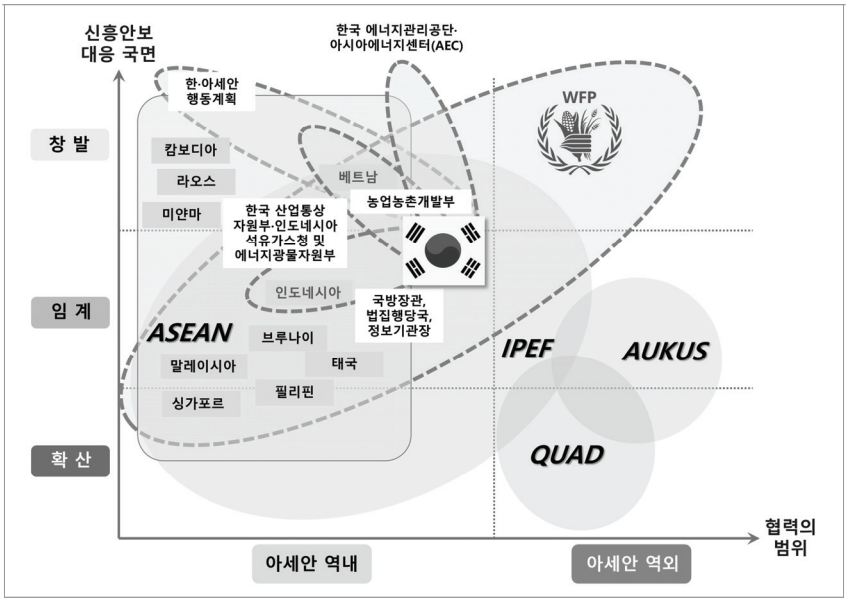
물 지원을 실행하며, 군을 통한 에너지 식량 전달체계 감시 및 운영을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에너지와 식량 부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난민이나, 소요 사태 등에 대비하는 협력 활동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협력 주체는 이상에서 설명한 이슈 연계 부분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4. 한·아세안 자원(에너지·식량) 안보 협력 내용

단계	협력 사항	역내	역외
창발 (양질전화)	• 제고 조사/수급 상황 점검 • 에너지/식량 관리체계 협력 구축 • 인프라 점검 • 자원개발 지원	• 한국에너지관리공단/아시아에너지센터(ACE) • 한·아세안 행동계획(2021~25)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인도네시아 석유가스청 및 에너지광물자원부 • 한국·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 세계식량기구(WFO)
임계 (이슈 연계)	• 에너지 자원 공동관리 • 불공정/범죄 거래 차단 지원 • 식량 비축 • 에너지 식량 분배 계획 • 수출입통제	• 한·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법집행 및 정보당국 • 한·아세안 국방장관, 법집행 및 정보당국	• 쿼드 • 오커스 • IPEF
확산 (지정학적 임계점)	• 국내 우선공급/인도 물량 준수 • 아세안 현물 지원 • 군을 통한 에너지 식량 전달체계 감시 및 운영 • 난민, 소요 사태 등에 대비	• 한·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법집행 및 정보당국 • 한·아세안 국방장관, 법집행 및 정보당국	• 쿼드 • 오커스 • IPEF • 세계식량기구(WFO)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9. 자원안보 이슈의 국면별 대응 주체와 협력 범위



자료: 저자 작성.

제5장

결론

인도·태평양과 사이버, 신기술, 우주 등 새로운 전략적 공간에서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생존과 번영 및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4강 중심의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다변화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중 경쟁에 따른 진영화의 틈바구니 속에서 선진 ICT 기술과 G8에 상응하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통해 외교안보 전략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새로운 공간에서의 지정학적 가치를 발휘하는 유연성을 발전시켜야 한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외교안보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전략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국가들을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상으로만 설정하지 않고, 신흥안보 협력 파트너로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이상기후, 신종 감염병, 식량, 사이버위협, 신기술 발전에 따른 역기능, 자원/에너지 등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주민(people)의 삶과 사회의 안전한 생존을 담보하여 지역의 평화를 보장하는 신흥안보 협력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을 유연하고 전환된 방향에서 모색하여야 한다.

신흥안보는 지구화와 산업화로 인한 새로운 위험 요소가 상호작용을 통해 양적·질적 변화와 임계점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전환되어 안보적 관점에서 이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신흥안보는 이상기후, 신종 감염병, 사이버, 에너지와 식량 자원 등의 위험이 지구화와 정보화로 초연결된 시대에서 국가간 경계를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미시적 안전은 물론 가시적 안보의 개념을 모호하게 하면서 발생하고, 동태적 환경에 주목한다. 전통안보와 달리 역동적인 변화의 메커니즘을 가진 신흥안보 위험은 발생 초기의 '미세신호(weak signal)'를 탐지하기 어려우며 국가 차원에서 정의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신흥안보는 초국가적 안보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촉발 원인으로서의 '위험의 속성'과 발현과 함께 영향을 미치게 되는'파급 속도'를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위험의 파급형태에 따른 분류로서 y축을 설정하면, y축의 상단에는

‘돌발·폭증형’ 위험 이슈가 위치하게 되며, 하단에는 ‘점증·확산형’ 위험 이슈가 위치하게 된다. Ⅰ 영역의 환경안보는 수준에서 대지진, 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와 같은 비의도적인 환경 위험 이슈가 포함된다. Ⅱ 영역의 사이버안보는 발생과 함께 피해가 나타나는 돌발적 위험이지만, 해킹이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이 인간에 의해 유발되는 의도적 공격으로서 책임소재와 피해 복구를 둘러싼 쟁점이 첨예하게 나타나는 위험이라 할 수 있다. 보건안보의 Ⅲ 영역은 두 영역과 달리 초기 발생에서 지역사회가 위험을 인지하는 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점증·확산형 위험 이슈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Ⅳ 영역은 자원안보에 해당하는 유형으로서 기후변화 및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한 식량·에너지 부족 등이 해당된다.

인도·태평양의 안보지형은 아세안 주도의 다자협력체제와 미국 중심의 양자협정으로 구분되어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두 안보지형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였다. 그렇지만 미·중 경쟁과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진영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양자협정은 물론 쿼드와 오커스 등 소다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아세안의 역할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진영화가 가속될 것을 우려해왔는데, 이 우려는 오커스의 출범으로 현실화되어 아세안 중심주의를 방해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은 호주의 핵잠수함 및 첨단 방위산업 기술의 발전과 도입으로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 전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영화 가담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는 아세안이 추구해왔던 아세안 중심주의 다자안보체계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신흥안보 분야 협력을 기반으로 아세안 중심주의를 관철하여 전략적 자율성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기후, 신종 감염병, 사이버와 에너지/식량 자원 등 신흥안보 위험은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없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안보 위험이 이슈 연계를 통해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

한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고 아세안 개별 국가는 물론 아세안 여러 국가로 확산되는 안보화 과정에 이르는 경우에는 진영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아세안 신흥안보 협력을 통해 아세안 중심주의를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진영화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의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거버넌스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위협의 안보화 과정에서 어디에 협력의 중점을 둘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즉, 이슈의 발생에서 심화를 거쳐, 직간접적 연계가 없던 부문으로의 확장을 통해 지정학적 사안과 결합하여 안보화로 이르는 각 단계별 대응 방식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주요 유형별 신흥안보 위험들은 공통적으로 어느 한 부문의 창발 단계에서 시작하지만, 양적·질적 축적 과정을 지나 임계점의 단계를 넘을 때, 비연계 부문으로의 확장이 증가하고,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지정학적 이슈화와 갈등을 낳는 동학을 보이고 있다. 관건은 거시적 차원의 지정학적 안보 위협으로의 증폭을 막기 위한 국면별, 행위주체별 대응 모델을 수립하는 일이다. 즉, 창발-임계-확산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협력 초점의 설정이 요구된다.

한국과 아세안의 신흥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흥안보 위험의 유형에 대응하는 적합 거버넌스 구조와 안보화의 과정 및 아세안 각국의 진영화에 대한 입장 등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신흥안보 협력의 내용은 창발-임계-확산의 안보화 과정에 따라 내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환경안보, 보건, 사이버, 자원 등은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과 행정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그렇지만 신흥안보적 접근에 기초한 협력을 강화하려면 외교안보적 군사적 수단의 협력 또한 담보되어야 한다. 인도적 지원과 행정적 협력이 안보화 과정의 첫 단계인 창발 혹은 그 이전 단계에서 가능한 협력이라고 한다면 외교안보적 군사적 협력의 내용이 임계와 확산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아태지역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다자협력 강화방안 연구』. TRKO202000004858.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신안보 총람 1, 2』.

_____. 2022.『글로벌 신흥안보 REVIEW』.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2022.「20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40-1호). (1월 27일)

김경숙. 2020.「감염병 공동 대처를 위한 한·아세안 보건협력 강화」.『이슈브리프』, 통권 179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경숙, 박보라. 2020.「코로나19 팬데믹과 동아시아 보건 거버넌스 구축 방향」.『전략보고』, 제113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상배. 2016a.「신흥안보와 메타 거버넌스: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이론적 이해」.『한국정치학회보』, 제50집 제1호, pp. 15~104.

_____. 2016b.『신흥안보와 미래전략』.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_____. 2019.「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과 한국외교: 주요국 이해갈등의 프레임 경쟁 사이에서」.『사이버안보 국제규범』.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김상배, 신범식 편. 2017.『한반도 신흥안보와 세계정치』.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김상배, 이승주 엮음. 2022.『코로나19의 거버넌스와 중견국 외교』. 서울: 사회평론아케데미.

김성진. 2016.「신안보의 이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포럼.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6월 13일)

김소정. 2022.「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사이버안보 전략구상의 함의」.『이슈브리프』, 358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영우. 2021.『반도체 투자전쟁』. 서울: 페이지2북스.

김형종. 2020.「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신남방정책: 아세안을 중심으로」.『동남아시아연구』, 제30권 제3호, pp. 21~54.

나용우, 이우태, 김주리, 김유철, 이진영, 권재범. 2020.『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남상열, 김성웅, 박정은, 임병우. 2020.「아태지역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다자협력 강화방안 연구」.『정책연구』, 제2020권 1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노진철. 2020.『불확실성 시대의 위험사회학』. 서울:한울아카데미.
문재인 정부 국정백서. 2022.『제18권 외교_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문진영, 나승권, 이재호, 이성희, 김은미. 2019.『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연구보고서 19-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은주, 전재성, 이용욱, 윤정현, 차태서, 김애경, 임은정, 김종범, 박인휘, 이효원, 정성철. 2021.『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 KINU 연구총서 21-25. 통일연구원.
박정훈. 2022.「인도네시아 식량안보 정책의 변화:선거, 부패, 그리고 식량 자급 사이의 딜레마」. 웹진『서강동연』, 제10권.
신윤성. 2019.「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한국 - 아세안 산업협력 확대」. KIET산업경제.
오일석. 2021a.「바이든 행정부의 잠정국가안보 전략지침에 나타난 신안보 위협 인식과 대응방안」.『이슈브리프』, 제253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_____. 2021b.『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안보: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INSS 연구보고서 2020-12.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오일석, 장세호, 김경숙. 2021.『한국 외교 패러다임의 전환과 신북방·신남방정책의 발전 방향』. INSS 전략보고 123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윤정현. 2016.「초국경적 대기오염 이슈와 글로벌 거버넌스: 인도네시아 연무(haze) 해결을 위한 싱가포르의 대응전략」.『세계지역연구논총』, 제34권 제1호, pp. 51~79.
_____. 2019a.「신흥안보 거버넌스: 이론적 고찰과 대안적 분석틀의 모색」.『국가안보와 전략』, 제19권 제3호, pp. 1~46.
_____. 2019b.「신흥안보 거버넌스-아세안의 초국가적 위험 이슈에 대한 싱가포르의 전략」.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21.「글로벌 불확실성 시대의 신흥안보 연구 동향과 시사점」.『미래연구 인사이트』, 제50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_____. 2022.「경제안보 측면에서 본 2022년 한·미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략적 고려사항」.『이슈브리프』, 제360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재영, 이주헌, 김유철. 2021.『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비전통 안보 협력』. KINU 연구총서 21-08. 서울: 통일연구원.
정상화. 2010.「안보개념의 변화와 비전통안보의 부상」.『세종정책연구』, 제6권 제2호.

정웅태, 유학식. 2020.『신남방정책 추진에 따른 에너지 부문 성과와 과제』. 정책이슈페이퍼 21-14. 에너지경제연구원.

최원기. 2020.『신남방정책 플러스: 중점분야와 추진방향』.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42. 외교안보연구소.

최인아, 김정곤, 정재완, 이재호, 김미림, 김소은, 김태형, 하경석, 이범현, 이윤현, 박환일, 오일석, 임경한. 2022.『신남방정책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태전략 간 연계협력 방안: 대아세안 협력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06-01.

최인아, 곽성일, 정재완, 이정미, 박나연, 김미림, 이재현, 조원득. 2020.『인도태평양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연구보고서 20-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허 장. 2018.『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농업분야 관계 확대방향』. KREI 현안분석 제49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재철. 2022.「중국의 경제안보 전략: 경제책략과 경제회복력의 강화」. KIEP-KAIS 공동세미나: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경제안보.

헌법재판소.「2017. 3. 10. 결정 2016헌나1」.『판례집』29-1.

[영문자료]

ASEAN Secretariat. 2017. “The 5th ASEAN Energy Outlook 2015-2040.”

Buzan, Barry, Ole Waever, and Jaapde Wilde. 1998.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Boulder. Colorado: Lynne RiennerPublisher, Inc.

Caballero-Anthony, Mely. 2018 *Negotiating Governance on Non-Traditional Security in Southeast Asia and Beyon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Cheng-Chwee, Kuik. 2008. “The Essence of Hedging: Malaysia and Singapore’ Response to a Rising China.”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30, No. 2, pp. 159-185.

Deibert, Ronald J. 2013. Black Code: Surveillance, *Privacy, and the Dark Side of the Internet*. Toronto: Signal.

Haq, Mahbu ul. 1995. “New Imperatives of Human Security.”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Issues*, Vol. 4, No. 1, pp. 68-73.

Klare, Michael T. 2002. *Resource wars : the new landscape of global conflict*.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Renn, Ortwin. 1992. “The Social Arena Concept of Risk Debates. Krimsky.” S. Krimsky and D. Golding eds. S*ocial Theories of Risk*. Westport: Praeger Publishers.

[언론/보도 자료]

김가윤. 2019.「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 첫 개최…‘공조 강화’」.『뉴시스』. (11월 28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191128_0000844649&cID=10201&pID=10200(검색일: 2022. 6. 30).

김경윤.「신남방에 공들이는 정부…한-아세안 재난관리장관회의도 신설」. 2021.『연합뉴스』. (10월 25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5153800504(검색일: 2022. 10. 7).

김지문. 2022.「인천공항출입국, “민주화 운동” 미얀마 난민 심사조차 거부」.『인천투데이』. (6월 15일).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253(검색일: 2022. 10. 8).

농림축산식품부. 2018.「아세안과 한·중·일 농업장관, 비상 쌀 비축제(APTERR)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10월 12일).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81249(검색일: 2022. 10. 7).

_____. 2021.「농식품부 지원 아세안 식량안보정보시스템 OECD 공공부문 혁신 우수사례 선정」. (9월 13일).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913(검색일: 2022. 10. 7).

_____. 2021.「농식품부, 제21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참석」. (10월 28일).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609(검색일: 2022. 9. 1).

민영규. 2020.「코로나19 소강상태 동남아 국가들도 이동제한 완화에 신중」.『연합뉴스』. (4월 17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7077500084(검색일: 2022. 6. 30).

박미영. 2021.「코로나 위기서도 보건의료 ODA 16% 확대 ‘포용적 협력’ [‘한국경제 新동력’ 아세안]」.『세계일보』. (12월 7일). https://www.segye.com/newsView/20211207515218(검색일: 2022. 9. 5).

박영서. 2021.「[뉴스 따라잡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아세안)」. *VOA*. (10월 29일). https://www.voakorea.com/a/6290782.html(검색일: 2022. 11. 4).

박재구. 2021.「산업부, ASEAN+3 및 EAS 에너지장관회의’ 참석」.『발전산업신

문』. (9월 17일). http://www.pgn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6(검색일: 2022. 10. 7).
박현주. 2022.「신흥안보론 김상배, 미·중 양다리 안돼…스케이팅 전략 필요」.『중앙일보』. (4월 4일)
보건복지부. 2019.「아세안 10개국과 보건의료 협력 강화」. (8월 30일).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SEARCHKEY=TITLE&SEARCHVALUE=&page=1&CONT_SEQ=350669(검색일: 2022. 9. 7).
손해용. 2022.「IPEF 통해 美는 '반중 연대', 韓은 '신기술 경쟁력' 노린다」.『중앙일보』. (5월 23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3505(검색일: 2022. 6. 30).
「아세안 한·중·일 농업장관, 비상 쌀 비축제(APTERR) 지속 지원」. 2018.『식약일보』. (10월 12일). http://www.kfdn.co.kr/38527(검색일: 2022. 9. 1).
임철영. 2020.「'한-메콩 고위관리' 화상회의… 사람·번영·평화 동반자 관계 구축 논의」.『아시아경제』. (7월 17일).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71620343031329(검색일: 2022. 6. 30).
정형우. 2019.「에너지공단, 아세안 10개국 에너지·기후 협력 이니셔티브 개발 나선다」.『인더스트리뉴스』. (8월 20일). https://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71(검색일: 2022. 10. 7).
조준형. 2022.「시진핑, 달러 패권에 맞설 SCO 독자 결제시스템 제안」.『연합뉴스』. (9월 17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7000300083(검색일: 2022. 10. 8).
『한국강사신문』. http://www.lecturernews.com(검색일: 2022. 10. 7).
「한-아세안 탄소대화 워크숍 개최」. 2020.『리더스타임즈』. (11월 5일). http://www.leaderstimes.co.kr/m/page/view.php?no=4674(검색일: 2022. 10. 7).
행정안전부. 2022.「한·아세안, 안전하고 지속발전가능한 아세안공동체 구축」. (6월 21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2640(검색일: 2022. 9. 17).
Sundararaman, Shankari. 2021. "AUKUS Challenge to Multilateral EU, ASEAN Approaches." *The New Indian Express.* (October 11). https://www.newindianexpress.com/opinions/columns/2021/oct/11/aukus-challenge-to-multilateral-eu-asean-approaches-2370102.htm (검색일: 2022. 10. 8).

[온라인/DB 자료]

경제정보센터. 2020.「산업부, ASEAN+3 및 EAS 에너지장관회의 참석」. (11월 20일).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7351&topic=C&pp=20&datecount=&recommend=&pg=(검색일: 2022. 10. 7).

권영일. 2008.「ASEAN과 '원자력-기후변화' 협력 강화」. (8월 11일). https://www.sciencetimes.co.kr/news/asean%EA%B3%BC-%EC%9B%90%EC%9E%90%EB%A0%A5-%EA%B8%B0%ED%9B%84%EB%B3%80%ED%99%94-%ED%98%91%EB%A0%A5-%EA%B0%95%ED%99%94/#.YxBU28E9xSY.link(검색일: 2022. 9. 15).

김정현, 박정식. 2021.「미얀마와 아프간 난민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 분석」. (10월 20일). https://hrcopinion.co.kr/archives/19628(검색일: 2022. 10. 8).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9.「아세안 국가들의 식량안보 지원을 위한 국가농식품정보시스템 유통정보 서비스」. (12월 16일). https://www.epis.or.kr/board/read?boardManagementNo=19&boardNo=7896&searchCategory=&page=24&searchType=&level=2&menuNo=28(검색일: 2022. 10 7).

민혁기. 2021.「아세안, 회복에 속도 낼 전망이나 팬데믹 재확산 등 위협요인 상존」. 나라경제. (12월).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1&cidx=13609(검색일: 2022. 11. 4).

백용훈. 2020.「보편적 건강보장을 향한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협력의 과제」. EMERiCs 전문가 오피니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s://www.emerics.org:446/aif/issueDetail.es?brdctsNo=305644&mid=a3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search_area=&currentPage=1&pageCnt=10(검색일: 2022. 10. 8).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소. 2020.「아세안과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 (8월 18일). https://iseas.bufs.ac.kr/iseas/index.php?pCode=MN000044&mode=fdn&idx=64251&num=1(검색일: 2022. 6. 30).

산업부. 2021.「제4차 한·아세안 에너지 안전정책 포럼 개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1월 25일).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675(검색일: 2022. 10. 7).

외교부. 「ASEAN 개요 및 참고자료」. http://www.mofa.go.kr/www/wpge/m_3921/contents.do(검색일: 2022. 6. 30).
_____. 2019. 「아세안 에너지장관회의(AMEM)」. (6월 21일). https://overseas.mofa.go.kr/asean-ko/brd/m_21541/view.do?seq=15&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page=2(검색일: 2022. 10. 7).
_____. 2021. 「2021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1월 21일). https://www.mofa.go.kr/www/brd/m_4080/down.do?brd_id=235&seq=370879&data_tp=A&file_seq=2(검색일: 2022. 6. 30).
_____. 2021. 「제1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대화 개최」. (9월 16일).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535(검색일: 2022. 6. 30).
_____. 2022. 「박진 장관, 제23차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8월 4일). https://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69299(검색일: 2022. 10.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s://krei.re.kr/krei/index.do(검색일: 2022. 10. 7).
한국지구관측그룹. 「AOGEO 소개」. http://kgeo.go.kr/?menucode=30100&tmenu=aogeo(검색일: 2022. 6. 30).
한동만. 2022. 「아세안의 그린 인프라 투자 동향: 필리핀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다양성+Asia』, 제19호. https://diverseasia.snu.ac.kr/?p=5572#3(검색일: 2022. 9. 28).
한-아세안센터 블로그. 2020. 「상호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보건의료협력! (feat. 코로나19)」. (3월 31일). https://blog.naver.com/akcsns/221883933973(검색일: 2022. 10. 7).
홍규덕. 2020. 「비전통 안보의 재조명: 코로나 19 시대 이후의 새로운 방향 모색」. 『국방정책연구』, 통권129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6786(검색일: 2022. 11. 4).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ASEAN 재난관리역량강화과정」. https://www.ndti.go.kr/client/common/inter_ex_cooper.do?iec=103(검색일: 2022. 10. 7).
ASEAN. 2015. “Declaration on Institutionalizing the Resilience of ASEAN and its Communities and People to Disasters and Climate Change.” ASEAN Summit in KualaLumpur, Malaysia. (April 27). https://asean.

org/wp-content/uploads/2012/05/26th-DECLARATION-ON-INSTITUTIONALISING-Final.pdf(검색일: 2022. 9. 30).

_____. 2020.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and its Implementation Plan." (November 12). https://asean.org/asean-comprehensive-recovery-framework-and-its-implementation-plan/(검색일: 2021. 7. 14).

_____. 2021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https://asean.org/asean2020/wp-content/uploads/2021/01/ASEAN-Outlook-on-the-Indo-Pacific_FINAL_22062019.pdf(검색일: 2022. 10. 8).

ASEAN Centre for Energy. 2017. "The 5th ASEAN Energy Outlook."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1/08/5th-ASEAN-Energy-Outlook-AEO5.pdf(검색일: 2022. 9. 30).

Camillus, John C. 2008. "Strategy as a Wicked Problem." *Harvard Business Review.* https://hbr.org/2008/05/strategy-as-a-wicked-problem (검색일: 2022. 10. 6).

GHS Index. "2019 Global Health Security Index." https://www.ghsindex.org/(검색일: 2021. 9. 10).

Global Preparedness Monitoring Board. 2019. "A WORLD AT RISK." (September 18). https://www.gpmb.org/annual-reports/overview/item/2019-a-world-at-risk(검색일: 2022. 10. 6).

Green, Michael J, Amy Searight, and Patrick Gerard Buchan. 2020. "Powers, Norms, and Institutions: The Future of the Indo-Pacific from a Southeast Asia Perspective: Results of a CSIS Survey of Strategic Elites." CSIS. (June 9). https://www.csis.org/analysis/powers-norms-and-institutions-future-indo-pacific-southeast-asia-perspective(검색일: 2022. 10. 7).

Gupta, Anubha. 2022. "Is AUKUS the New ASEAN in the Indo-Pacific?"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May 9). https://www.orfonline.org/expert-speak/is-aukus-the-new-asean-in-the-indo-pacific/ (검색일: 2022. 10. 8).

OECD Health Statistics. 2019. http://www.oecd.org/els/health- systems/health-data.htm(검색일: 2022. 9. 20).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 https://stats.oecd.org/(검색일: 2022. 9. 20).

Social Progress Imperative 데이터베이스. https://www.socialprogress.org/download(검색일: 2019. 7. 9).
UNDP. "Global Human Development Indicators." http://hdr.undp.org/en/countries/profiles(검색일: 2019. 6. 29).
WEF. 2018.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 https://www3.weforum.org/docs/GCR2018/05FullReport/The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8.pdf(검색일: 2022. 5.20).
WHO. 2018. "World Health Statistics 2018: monitoring health for the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검색일: 2019. 8. 13).

[관련자료 목록]

이재현. 2021.「AUKUS를 계기로 본 동남아의 전략 상황 인식과 한국의 동남아 정책」.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12월 23일). https://bit.ly/3bDhmB9.
조한범, 권재범, 박지원, 이재현, 이현태, 최윤정, 황태호. 2021.『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KINU 연구총서 21-34. 통일연구원.
Balzacq, Thierry. 2010. *Securitization Theory: How Security Problems Emerge and Dissolve*. Milton Park: Routledge.
Boudon, Raymond and Francois Bourricaud. 1989. *A Critical Dictionary of Soci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ook, Alistair D. B. and Tamara Nair. 2021. *Non-Traditional Security in the Asia-Pacific: A Decade of Perspectives*. World Scientific.
Deudney, Daniel. 1990. "The Case against Linking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National Security." *Millennium*, Vol. 19, No. 3, pp. 461-476.
Holsti, Kal J. 1983. *International Politics: A Framework for Analysi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Rowan, Sam S. 2021. "Does Institutional Proliferation Undermine Cooperation? Theory and Evidence from Climate Chang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65, Issue 2, pp. 461-475.
Tellis, Ashley J., Janice Bially, Christopher Layne, and Melissa McPherson. *Measuring National Power*. RAND. CA; Santa Monica.
UNDP. 2020. "Pioneering the Green Sukuk in Indonesia." (November 11)

Wooyeal, Paik and Jae Jeok Park. 2021. "The Quad's Search for Non-Military Roles and China's Strategic Response: Minilateralism,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Regional Balancing."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30, No. 127.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Establishing a Model for Strengthening 'Emerging Security' Cooperation with ASEAN

Il Seok Oh, Kyoung-Sook Kim, Junghyun Yoon, and Youcheer Kim

South Korea needs a paradigm shift in its traditional diplomatic and security strategies to secure its strategic autonomy in new strategic areas - such as the Indo-Pacific region, cyber domain, emerging technologies, and space - and to guarantee its survival and prosperity while enhancing its national value. To achieve this strategic goal, South Korea, with its advanced ICT technologies and economic capabilities, should strengthen cooperation with ASEAN to ensure the autonomy of its diplomatic and security strategies and develop the flexibility to demonstrate its geopolitical value in new areas.

South Korea should also shift its perception of ASEAN countries as mere destinations of economic interest and strive to enhance its emerging security cooperation with ASEAN to secure its diplomatic and security autonomy and establish a strategic area.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should incorporate a flexible and transformative stance in performing its role as ASEANS's emerging security cooperation partner to guarantee regional peace, ensure social safety and protect people's lives from the threats of climate change, infectious diseases, food shortages, cyber attacks, adverse effects of emerging technologies, and resource/energy

shortages.

Globa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brought about new risk factors, which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ransformations, can develop into critical issues threatening national security. Emerging security refers to the security-wise response to such critical issues. According to the features, speed of proliferation, and responding actors of emerging security threats, it is possible to derive management models for environmental security, health security, cyber security, and resource (energy/food) security.

New security threats emerge at the initial development stage of a sector. However, through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ccumulation process, such threats may increase beyond a critical point and expand to unconnected sectors. The repetition of such a phenomenon can create a dynamic that generates geopolitical issues and conflicts. Thus, it is crucial to establish a response model for each phase and actor to prevent new threats from escalating into macro-level geopolitical security threats. In other words, ASEAN-Korea emerging security cooperation should focus on each stage of the emerging security threat cycle: initial development-criticality-proliferation.

In order to build a model to strengthen the emerging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ASEA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securitization process of the ASEAN member states in response to emerging security threats, along with each member's stance on the global bipolar order. The contents of emerging security cooperation should reflect each stage of the securitization process (initial development-criticality-proliferation). Environmental security, health security, cyber security, and resource security are sectors that receive humanitarian assistance and administrative cooperation. However, cooperation with diplomatic, security, and military means must also be guaranteed to strengthen emerging security cooperation. The

possible provis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and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initial development stage of securitization raises the need to consider diplomatic, security and military cooperation in the criticality and proliferation stages.

〈책임〉

오일석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조사관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전문경력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現, E-mail: NUSL2006@gmail.com)

저서 및 논문

「코로나19 디지털 접촉 추적과 개인정보 보호-브라질 사례를 중심으로」(『법학연구』, 65집, 공저, 2021)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남북교류 가능성에 대한 고찰」(『세계지역연구논총』, 제40집 제3호, 공저, 2022) 외

〈공동〉

김경숙

정치학 박사
국제정치학회 이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現, E-mail: kgs0717@inss.re.kr)

저서 및 논문

『안전한 국가를 위한 국가전략』(공저, 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평가와 향후 국제질서 전망』(공저, 2022) 외

윤정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박사
前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前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現, E-mail: yjh5791@inss.re.kr)

저서 및 논문

「디지털 안전사회의 의미: 안전과 안보의 복합공간으로서 전환적 특징과 시사점」(『정치정보연구』, 제25권 3호, 공저, 2022)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남북 교류 가능성에 대한 고찰」(『세계지역연구논총』, 제40집 3호, 공저, 2022) 외

김유철

뉴욕주립대(올버니교) 정치학 박사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외교부 국립외교원 전문경력관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現, E-mail: youcheerkim@gmail.com)

저서 및 논문

"Is China Spoiling the Rules-Bas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ssues & Studies*, Vol. 56, No. 1)
"Institutional Origins of the US-China Trade War"(*Pacific Focus*, Vol. XXXIV, No. 3) 외

KIEP 세계지역전략연구 발간자료 목록

■ 2022년

22-01 카타르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전략과 협력 시사점
강문수·유광호·이지은

22-02 아세안 지역의 저탄소 에너지기반 구축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 방향 /
김현제·정웅태·유학식·최영선·김용건·정태용

22-03 한-MENA 녹색전환 협력방안 / 서정민·서상현·김경하·노다솔·최이슬

22-04 인도의 농업 경쟁력과 한-인도 협력 방안 / 이순철·장용준·최윤정·박원빈

22-05 아프리카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한국에 주는 함의 /
장용규·김계리·김수원·박지민

22-06 한국의 대중남미 공공외교 강화 방안 /
노용석·박윤주·서지현·손혜현·오인혜·이상현·정호윤

22-07 아세안 신흥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
오일석·김경숙·윤정현·김유철

22-08 주요국의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전략과 정책 시사점: 중국, 일본, 인도를 중심으로 / 김정곤·한형민·노윤재·김도연·백종훈·김민희·남유진

22-09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미래 협력 방안 연구 /
최인아·이재호·소은·최경희

22-10 중남미 내 포퓰리즘 확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이승호·홍성우·김진오·박미숙

■ 2021년

21-01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특성 및 파급효과 비교 /
이승호·강문수

21-02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 인프라 분석 및 협력 방안 /
정인교·조정란·문남권·김찬우·김건영

21-0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공동체별 통상환경 및 산업 구조와 한국의 협력방안 / 조원빈·김경하·김은경·박현석·서상현·박홍은·최이슬

21-04 한-인도 CEPA 10년, 우리 중소기업의 성과와 정책 과제 /
송영철·홍성철·강재원·김정일·차춘경·김혜빈·이소현

21-05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농업 및 분쟁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강문수·정민지·박규태

21-06 신남방국가의 중소기업과 현지 한국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방안 /
이충열·이종하·이선호·이종윤

21-07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와 협력방안 /
이승호·홍성우·김진오·박미숙·권혁주

21-08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시대 역내 안보환경 변화와 한-중동 경제협력 확대 방안 / 박단·박현도·성일광·장지향·정재욱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1-09 외국인력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유럽 내 아프리카 이민자 사례와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 장영욱·조동희·이현진·정민지

21-10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남미 디지털 전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김영석·곽재성·권기수

21-11 미중 경쟁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대응과 시사점: 호주의 대중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 최인아·이선형·이재호·김소은

21-12 인도의 對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한형민·김예진

21-13 코로나19의 인도 사회·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 노윤재·조승진

■ 2020년

20-01 미·중 경쟁이 중남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홍성우·윤여준·김진오·임지운·남지민

20-02 인도 한류 분석과 문화협력 확대방안: 음악 및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 김정곤·이정미·윤지현

20-03 중국의 아세안 환경협력 분석을 통한 신남방정책 추진방안 연구 / 강택구·이상윤·심창섭·장훈·이정석

20-04 한·중미 5개국 FTA 발효에 따른 중미시장 활용방안 / 김종섭·이승호·이준희·김민정·김세원·김희라

20-05 신남방 지역 주요국의 핀테크 발전과 협력방안: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이충열·이종하·이선호·강성범

20-06 동남아시아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공요인 분석: 지역사회 개발협력 사례 중심으로 / 전제성·정연식·정법모·김희숙·백용훈·박희철·김다혜·김현경

20-07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을 위한 사전 연구 / 이훈기·김희경·이현정·정승환

20-08 포스트 코로나 시대 GCC의 식량안보 정책과 시사점 / 장윤희·손성현·유광호

20-09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법 비교 분석: 디지털플랫폼 시장 M&A를 중심으로 / 장영신·강구상·나승권·김제국·최재필·김수련

20-10 對개발도상국 특혜무역협정 확대 및 활용 방안: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을 중심으로 / 라미령·박나연·정민지·이효진·문수현·정재욱

20-11 토지제도 특성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를 중심으로 / 강문수·정민지·문수현·박규태

20-12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시장 분석 및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 장용규·김경하·배유진·조준화·최두영

20-1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프리카 ICT 국제개발 협력수요 및 한국의 협력방안 / 최영출·김태성·권유경

20-14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중남미 협력 방안: 의료 및 방역 부문을 중심으로 / 최금좌·오삼교·설규상·최윤국

20-15 아세안 지역 한류콘텐츠 활성화 방안 / 최진우·김새미·김지윤·모춘흥·서지원·진달용·한준성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기획성과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gh@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에 가격인상과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란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기 관 회 원 ☐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Studies in Global and Regional Strategies 22-07

A Study on Establishing a Model for Strengthening 'Emerging Security' Cooperation with ASEAN

Il Seok Oh, Kyoung-Sook Kim, Junghyun Yoon, and Youcheer Kim

인도 · 태평양 및 '사이버, 신기술, 우주' 등 새로운 전략적 공간에서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생존과 번영 및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아세안 협력을 통해 외교안보 전략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새로운 공간에서의 지정학적 가치를 발휘하는 유연성을 발전시켜야 한다. 대아세안 신흥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주민(people)의 삶과 사회의 안전한 생존을 담보하고 지역의 평화를 보장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한국과 아세안 간 신흥안보 협력 강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흥안보 위협의 유형에 대응하는 적합 거버넌스 구조와 창발-임계-확산의 안보화 과정 및 아세안 각국의 진영화에 대한 입장 등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도적 지원과 행정적 협력이 안보화 과정의 첫 단계인 창발 혹은 그 이전 단계에서 가능한 협력이라고 한다면, 외교안보적 · 군사적 협력이 임계와 확산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9 788932 290508 94320

ISBN 978-89-322-9050-8
978-89-322-9000-3(세트)

정가 7,000원